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목: 충남 과밀학급 해소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이 노 신

2023.10.13.



충청남도의회

(옆 면)

(앞 면)

정책연구 2023-
(관리번호)

정책연구 2023-
(관리번호)

충청남도 과밀학급 해소방안 연구

호
서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Study on Problem-Solving Methods of Overcrowded
Classes in Chungnam-do Province

충청남도의회

제 출 문

충청남도의회회장 귀하

본 보고서를 "충남 과밀학급 해소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주관연구기관명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
- 연구기간 : 2023.05.20. ~ 2023.11.30.
- 주관연구책임자 : 이노신
- 참여연구진
 - 연구원 : 김병삼 호서대 교수
 - 자문위원 : 배경화 중진공 충남본부장
 - 자문위원 : 이경복 호서대 교수
 - 자문위원 : 김치년 상명대 교수
 - 자문위원 : 박완신 충남대 교수
 - 자문위원 : 이재영 충청남도 건축심의위원
- 검토위원
 - 구형서 충청남도의회 의원(교육위원회)
 - 정병인 충청남도의회 의원
 - 김선태 충청남도의회 의원
 - 김민수 충청남도의회 의원
 - 이지윤 충청남도의회 의원
 -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
 - 김미화 천안시의회 의원
 - 최병관 공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고덕주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 박종혁 천안불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박한나 천안불무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이시현 천안아름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한지현 천안아름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오유진 천안환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목 차>

I.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1. 충남 과밀학급 해소방안의 필요성	1
2. 충남 과밀학급 해소방안 기본 방향 및 범위	6
II. 현황 분석	10
1. 과밀학급 관련 일반 현황: 학교, 학생, 교사 수 추이	10
2. 충남 과밀학급 현황	14
3. 충남 북부지역의 과밀학급 발생 원인	17
4. 인구통계 및 도시계획 분석	23
1) 인구통계 분석(전국 및 충남)	23
2) 과밀학급과 충남 아산신도시 계획 분석	33
5. 해외사례 분석	44
III. 충남 과밀학급해소 방안	54
1. 도시계획 차원	54
2. 교육적 차원	56
1) 충남 과밀학급이 발생시키고 있는 문제점 분석	56
3. 법규 및 조례 분석	58
1) 학교 용지 확보 특례 지정 내용 및 학교시설 관련 법규 분석	58
2) 충청남도교육청 과밀학급 및 학교 용지 확보 관련 조례 분석	61
IV. 천안 불당신도시 및 백석지구 과밀학급 해소 추진 전략	62
1. 거시적 연대적 추진전략	62
1) 관련법규 제개정 및 기존법령 해석을 통한 시행 근거 마련	62
2)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연대의식에 기반한 공동체 구축 및 실천	62
2. 충남 자체적인 정책 기획 및 시행의 필요성	63
3. 글로벌 사회에서 과밀학급의 흐름	64

V. 결론	82
-------------	----

부록	89
----------	----

1. 최근 5년간(2019~2023) 충남 과밀학교(학급) 현황	91
2. 충남 시군별 과밀학교(학급)세부 현황	93
3. 2019~2026 충남 초중고 신설(예정)현황	95
4. 시도별 학급당 학생 수	96
5. 시도별 과밀학급 현황	97
6. 충남 기업분포 일반 현황	98
7. 충남지역 경제 산업 동향	99
8. OECD 교육지표 2022 결과발표(교육부 보도자료)	101
9. 유네스코 미래교육 보고서(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112
10.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20
11.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122
1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123

<표 차례>

표 1 2022년도 전국 과밀학급 숫자 및 비율 상위 3개 시도	3
표 2 충남 과밀학급 및 과밀학교 현황	14
표 3 2023년 경기도 과밀학교 및 과밀학급 현황	16
표 4 교사 1인당 학생 수 한국 vs. OECD 평균	46
표 5 유네스코 연구보고서에 실린 한국 특수학교 과밀학급 해소방안	49
표 6 2023년 3~4월간 시도교육청 돌봄교실 대기수요 변화	57

<그림 차례>

그림 1 2023년도 전국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행정구역별)	4
그림 2 학교 증설: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수 변화 추이	10
그림 3 학령인구 감소: 유치원 및 초중등 학생 수 변화 추이	11
그림 4 교원 수 추이	12
그림 5 전국 중고 기간제 담임 비율	13
그림 6 경기도를 제외한 학령인구의 전국적인 큰 폭 감소 추이	15
그림 7 충남 도내 15개 시군별 인구 및 세대수	17
그림 8 충남북부 및 수도권 반도체의 전국생산 비중	19
그림 9 스마트 신산업 클러스터로 계획된 충남 북부지역	20
그림 10 대한민국 인구 현황(2021)	24
그림 11 1980~2075년까지 세계 주요국 경제 규모 순위 전망도	25
그림 12 대한민국 가구원수별 가구비율, 200~2021년	27
그림 13 2050년 17개 광역단체 인구증감 전망	28
그림 14 2050년 17개 광역단체 유소년 인구 증감률 전망	29
그림 15 충청권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추이 전망(2000~2050)	31
그림 16 1960년~2067년 대한민국 연령별 비중 추이	32
그림 17 2050년 대한민국 인구피라미드	33
그림 18 아산신도시 1, 2차 계획 지구	36
그림 19 천안불당신도시 경관	37
그림 20 천안 백석동, 차암동, 성성동 전경	38

그림 21 천안불당신도시 평면도	39
그림 22 천안백석동 평면도	40
그림 23 천안불당초등학교	41
그림 24 천안아름초등학교	41
그림 25 천안불무초등학교	42
그림 26 천안환서초등학교	43
그림 27 2030 OECD 학습 프레임워크	46
그림 28 유네스코 연구보고서에 실린 한국 과밀학급 해소방안	48
그림 29 천안불당신도시 내부 불무초 인근의 근린공원 부지	56
그림 30 세계 학령인구 증감 추이(1950~2100년)	65
그림 31 미국 고교학생수 변화 추이	69
그림 32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뉴욕시 초등학교사들	70
그림 33 미국 K-12 학령인구 증가 추이(1990~2100년)	72
그림 34 미국의 전체인구 대비 초고령 인구(1950~2050년)	73
그림 35 미국의 인구 전망 그래프(2010~2050년)	73
그림 36 미국의 2010년, 2030년, 2050년 인구 증가 추이	74
그림 37 미국 공립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범위(2020~2021년)	75
그림 38 21개 유럽 주요 국가의 평균 학급 당 학생 수	78
그림 39 과밀학급 발생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맞춤형 직무연수 개요	80

요 약 문 (국 문)

과밀학급 및 과대 학교 해소 방안은 현재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현안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초중등학교에서 학생 수 25명을 초과하는 학급을 과밀학급으로 정의하는데, 2023년도 현재 충남은 과밀학급 비율에 있어서,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높다. 충남 과밀학급의 발생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진성 과밀학급 발생으로 이는 경제산업의 발달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주요 원인이다. 충남에서는 천안시 불당동과 백석동 두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 주변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빌리티와 같은 국가전략 산업을 기반으로 삼성, 현대 계열의 다양한 대기업을 비롯하여,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에 본사를 둔 글로벌기업들이 다수 입주해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산업단지가 있다. 이러한 지역은 활발한 산업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과밀학급이 전 학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진성 과밀학급에는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과밀학급 해소방안이 요구된다. 현재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과밀학급도 이러한 유형이다.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과밀학급이다. 이런 과밀학급은 모든 학년이 아닌 한 개 학년에만 나타나며, 그 학년의 위아래 학년에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충남에서는 아산, 서산, 당진, 논산 등과 같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은 특정한 시점에서 해당 지역에 기업이 대규모로 입주하여 인구가 일시적으로 유입되었으나, 그 이후 입주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5~10년 동안 거의 정체 또는 인구 이탈로 인한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 지역에서의 과밀학급 발생은 한시적인 현상으로 학교 또는 학급 재배치와 같은 교육당국의 행정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보고서는 지속적인 진성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천안 불당동, 백석동 소재의 초등학교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원인 및 기술적, 행정적, 법규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와 각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책을 분석하며, 1970년~2050년까지 약 80년에 걸친 학령인구 추이, 교육통계자료 및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과 충남의 인구 전망도 함께 분석하였다. 외국의 사례는 OECD 및 UNESCO 발간 교육통계자료 등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이 충남과 대한민국의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S U M M A R Y

(영 문 요 약 문)

These days, the overcrowded class has been seriously considered one of the most blazing issues among those related to the elementary and the secondary school education. Lawmakers, experts and public officers have been cooperating with each other to discover better solutions, and attempting to establish national-level and local-level policies to put them into practice. In the overcrowded class rate of the elementary and the secondary schools of South Korea, Chungnam-do Province has been ranked as the second in the year of 2022, among 17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South Korea. And, among 15 cities and guns(counties) of Chungnam-do Province, Cheonan City has been suffering several serious problems derived from such an overcrowded class issue. In this paper, I explore such problems, which are consistently happening in Buldang Elementary School, Bulmu Elementary School, Aarum Elementary School, and Hwanseo Elementary School in Cheonan City, and describe what are their underlying root causes. In addition, I analyze statistical data of South Korean demographic shifts from 1970 to 2050, and through it, describes the demographic forecasts for the school age students of 15 cities and guns(Counties) in Chungnam-do Province. Although Cheonan City is the largest one in Chungnam-do Province, and now it is experiencing the overcrowded class problems, around 20 years from now, the problems that the city would face will be the opposite. The city could not avoid seeing the decrease of the number of the school age students and would be in trouble with serious problems originated from such a dramatic reversal. Thus, in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 try to broadly clarify that the solutions need to be carefully set up in considering the change of population of Chungnam-Do Province and South Korea.

I.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충남 과밀학급 해소방안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추진 배경

▣ 과밀학급 해소방안은 현재 초중등 교육의 핵심 현안

○ 교육부의 과밀학급 해소방안 발표 및 충남 과밀학급 분포 현황

현재 과밀학급 해소방안 연구는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 관련 현안 가운데 가장 뜨겁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과밀학급이란 2023년도 현재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학급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초중등학교의 과밀학급 및 과대 학교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및 해결 방안이 중앙부처인 교육부를 비롯하여, 서울시의회,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남, 울산광역시, 대전시교육청 등 여러 광역지자체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20년도 초반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더욱 활발해져 왔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게 되면 충분한 거리두기를 확보함으로써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 감기, 식중독 등 계절에 따른 유행성 질환의 확산 가능성을 낮출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사 1인이 지도하는 학생 수도 줄어들므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더욱 끌어올릴 수도 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어 개선된 교육환경 속에서 교사와 학생은 더욱 활발한 소통을 만들어냄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학습격차의 문제도 좁혀나갈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

교육부는 2024년도까지 총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28명이 넘어가는 과

밀학급을 해소하는 ‘교육회복 종합방안’¹⁾을 발표하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도 교육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23년도 4월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고 23만5,020개의 학급 중에서 4만2,523개 학급이 과밀학급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전체 학급 대비 18.1%를 차지하는 숫자이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도의 18.9%보다 약 0.5% 줄어든 수치이다.

시도별로 볼 때 2023년도 4월 기준 충남의 과밀학급 비율은 21.6%를 차지하여, 경기 30.4%, 제주 24.8%, 인천 21.8%에 이어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4번째로 과밀학급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밝혀졌다. 이는 2022년도까지 경기도 및 서울에 이어 계속 3위에 머물다가 한 단계 내려간 수치이다. 이런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충남의 과밀학급 문제는 약간 해소되기는 했으나, 충남의 과밀학급 비율은 도내 초·중·등 전체 학급 가운데 21.6%의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여전히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충남의 과밀학급 해소는 아직 효과적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예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특히 2022년도에 전국에서 과밀학급 수가 가장 많은 시·군·구 가운데 충남 천안은 총 1,307학급이 과밀학급으로 집계되어, 1위인 경기도 용인시 2,234학급, 2위 경기도 화성시, 3위 경기도 수원시 1,447학급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과밀학급 숫자가 많은 도시로 밝혀졌다. 2023년도 학교급별 과밀학급 비율 현황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충남 아산시가 74.4%로 1위, 경남 양산시 78.6%, 2위 경기 화성시 78.5%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서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 각 지역의 학령인구 증감 요인 및 향후 전망치 예측을 위하여, 인구 유입과 과밀학급 해소와 같은 정주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과밀학급 해소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1) 교육부는 2021년 7월 2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당해연도 6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가 역량을 신속하고 책임있게 집중 투입하여 학생의 학습, 심리, 정서 등 결손을 종합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꾀하고 더 나아가 미래교육으로 도약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심리, 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2021.7.29.

○ 수도권지역과 경남의 산업화와 과밀학급 발생의 상호 관계성

수도권인 서울, 경기도, 인천을 비롯하여 경남은 그동안 과밀학급 수에서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해 왔다. 2023년 현재도 경기도의 과밀학급 분포는 비율로나 숫자로나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은 2022년까지 2위, 인천은 2023년도에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과밀학급 분포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는 2023년 현재 전국 광역단체별 과밀학급 비율 순위는 하향 조정되었으나 시군구별로 놓고 볼 때는 서울 강남구가 4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과밀학급 비율을 보이고 있다. 숫자로 볼 때 경남 또한 2022년도에 3,371학급이 과밀학급으로 밝혀져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과밀학급이 많은 지역으로 드러났다.

	1위	2위	3위
과밀학급 숫자	경기 23,616학급	서울 6,243학급	경남 3,371학급
과밀학급 비율	경기 40.1%	제주 37%	충남 30.6%

표 1. 2022년도 전국 과밀학급 숫자 및 비율 상위 3개 시도

전국적으로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지역은 한가지 핵심적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이러한 지역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걸쳐 산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자동차, 선박, 철강, 화학, 바이오, 에너지, 항공 우주 산업 등과 같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경제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전략산업은 엄청난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유입되는 인구가 그 지역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정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정주 여건 조성 가운데 가장 핵심적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 환경 조성이다.

현재 교육부 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경남 등과 같은 지역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지역은 모두 주요 국가전략산업지대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지역이다. 2023년 인구통계에 의하면 서

울, 경기, 인천을 포괄하는 수도권지역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약 2,671만 9,368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1.58%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전체 면적은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 비중은 대한민국 전체인구 5,180만1,449명의 절반이 넘어가는 수치이다.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약 10%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에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수도권으로의 산업집중 현상과 정비례 관계를 형성한다. 대한민국 지역생산액의 약 48.1%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는 각각 46.9% 및 56.3%의 종사자가 수도권에서 종사하고 있다. 지역생산액과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수도권이 절반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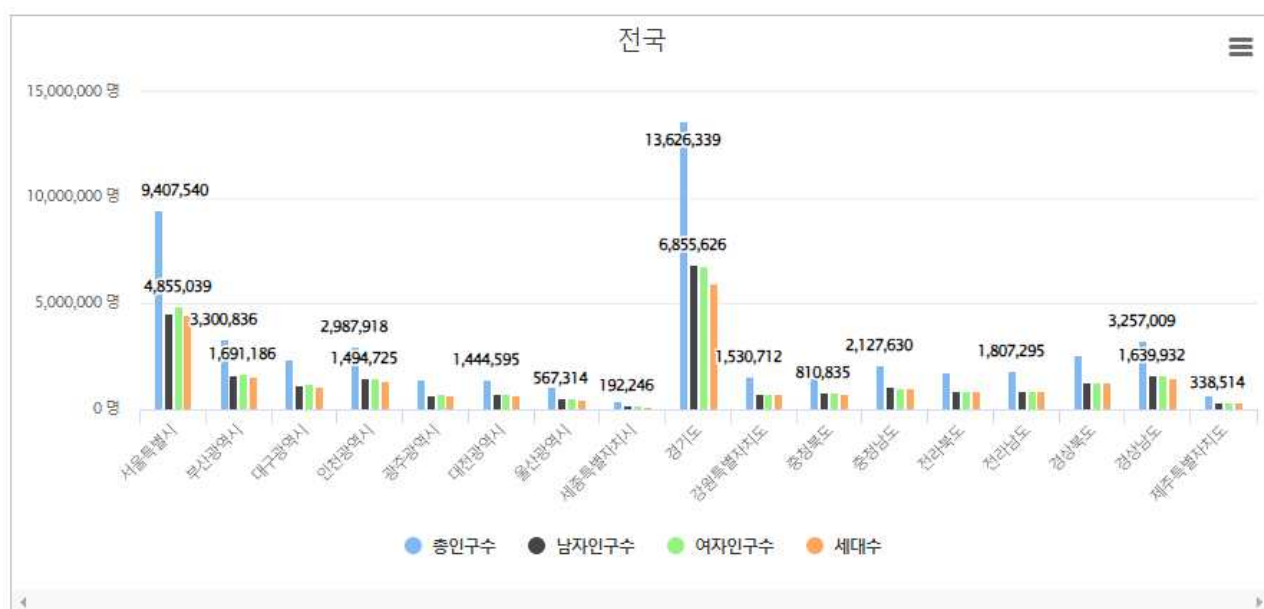


그림 1. 2023년도 전국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행정구역별)²⁾

대한민국의 일자리에서도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일자리의 50.5%에 달한다. 또한 청년인구의 약 56%, 1천 대 기업의 약 8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종사자 수 300인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는 58.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미래혁신산업에 속하는 3대 전문 지식서비스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 연

2) 출처: 2023년도 행안부 통계자료, <https://jumin.mois.go.kr/statGrapA.do>

구개발전문서비스, 영상방송 분야는 일자리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³⁾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바로 이와같이 기업체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서울, 인천광역시는 과밀학급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학령인구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데, 경기도만큼은 예외이다.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학령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과밀학급이 분포하고 있다. 서울 또한 2022년도까지 경기도에 이어서 줄곧 과밀학급 숫자 2위를 기록하다가 2023년도에 순위가 하향 조정되었다. 그럼에도 시군구로 놓고 볼때는 아직도 강남구나 서초구같은 지역이 전국에서 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서 3위의 인구 규모를 가진 경남 또한 조선, 금속가공, 자동차, 국방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출산율 하락과 청년인구의 서울, 경기 및 부산으로의 급격한 유출이 심화되고 있으나, 아직은 산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어서 유출보다 유입이 더 많은 상황이다. 경남은 2019년도 기준 타 지역에서 태어나 경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유입인원이 많은 지역으로 유출은 5,021명이고 유입은 8,343명이다. 또한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경남 지역 대학을 졸업 후 타 지역에 취업한 수보다 타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경남지역으로 취업한 수가 더 많아 순 유입지역으로 나타났다.⁴⁾ 경남의 경우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인근지역인 충청권에 비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사실상, 수도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경남은 지역 고유의 보다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산업생태계를 형성함으로써, 꾸준히 청년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역단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수도권이나 충남 북부 지역이 보이는 인구밀집 현상과 과밀학급 현상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3) 출처: 「초광역권에 기반한 지역의 산업혁신 전략」, 산업연구원, 2022.

4) 출처: 경남 산업·경제 동향, 경남투자경제진흥원. 통권 제 23호, 2023년 2월호

2. 충남 과밀학급 해소방안 기본 방향 및 범위

▣ 연구의 방법

◎ 문헌 및 자료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가. 관련 문헌 및 자료 연구

- 교육부 및 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연보
- 국토지리정보원 출간 대한민국 경제산업 관련 자료
- 산업연구원 출간 대한민국 경제산업 및 일자리 관련 자료
- 충남교육청 과밀학급 현황 및 해결방안 관련 자료
- OECD 출간 과밀학급 및 2050 미래 교육 전망 보고서
- UNESCO 출간 2050 미래 교육 전망 보고서

나. 전문가 자문회의(서면 회의 포함)

- 토목 및 건축 전문가
 -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건설공학교육과 교수: 토목 건축분야 NCS표준 모듈 개발
 - 상명대학교 스마트그린시티학과 교수: 토목 및 건설사업관리 특급기술자
 - 건축회사 프리즘 대표(건축사): 충청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
- 대한민국 및 충남권역 경제산업 전문가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 지역 본부장
- 수리 통계 전문가
 - 호서대학교 수학과 교수

다.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 충남도의회 및 천안시의회 의원
- 충남교육청 과밀학급 해소방안 정책연구 관계자
- 공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위원
- 충남 도내 과밀학급이 가장 심각한 천안불당초, 불무초, 환서초, 아름초 학부모

회장

○ 대전일보 등 언론인

■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15개 시군

○ 현재 과밀학급 현상을 보이는 광역지자체: 경기도, 서울, 인천, 경남

○ OECD 회원국의 및 UNESCO의 교육정책

나. 시간적 범위

○ 충남 15개 시군 및 국내 수도권: 2000년도~2050년도

국가균형발전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2000년도부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되고 인구가 현재보다 641만 명이 감소한 4천200만 명대로 내려앉아 국가 및 지역 교육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2050년까지

○ OECD 회원국 및 UNESCO: 2000~2050년도

2000년도 세계화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OECD회원국(미국, 동북아시아 국가, 서유럽국가)으로 일자리를 찾아 유입되는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인구의 이민 보편화 및 이에 따른 OECD 회원국의 초중등 교실 환경 분석 / 특히 2050년도까지 인구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일본과 서유럽국가의 이민정책 현황 파악과 더불어 과밀학급 해소방안 정책 연구)

다. 내용적 범위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충남 및 16개 광역지자체 초·중·등 교육정책 현황 및 중앙 정부의 과밀학급 해소정책 현황 분석
-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현황과 충남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현황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충남의 경제산업 발전방향, 15개 시군의 인구분포 및 도시계획 현황 분석
- 충남교육청의 각종 교육정책 및 과밀학급 해소정책이 충남의 지역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 우리나라와 인구구조 및 경제산업구조가 유사한 OECD 회원국의 교육정책 및 과밀학급 해소정책

■ 세부 과업 내용

가. 충남 15개 시군의 초·중·등 과밀학급 현황 및 발생 원인, 문제점 분석: 충남의 15개 시군에서 현재 10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2022년도 국정조사 결과 전국 3위의 초·중·등 과밀학급 비율이 분포하는 광역지자체로 자리매김한 충남의 과밀학급 발생 원인 및 문제점에 대한 조사 분석

나. 충남 15개 시군의 경제산업정책 및 도시계획 정책이 충남 초·중·등 과밀학급 발생에 미치는 영향 및 요인 분석

다. 충남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의 초·중·등 과밀학급 현황 및 발생 원인 분석: 이미 앞에서 분석된 충남의 초·중·등 과밀학급 현황 및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전국의 나머지 16개 광역지자체의 초·중·등 과밀학급 현황 및 발생 원인 분석을 통한 17개 광역지자체 과밀학급 현황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상호 비교 대조

라. 충남을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위한 교육정책 현황 및 차이점, 예산 확보, 전문성, 업무 추진 체계 구축, 종합적 실행 역량 등 비교 대조 분석

마. 인구 고령화 및 학령인구 감소, 이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산업 구조의 개편 방향 및 국가 이민정책의 필요성 및 방향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 요소들을 고려한 충남 초중등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갖춘 단기적 및 중장기적 대책 도출: 작은 학교 설립 및 조립 및 분해가 용이한 모듈형(이동형) 교사의 건축 활용에 대한 적절성도 함께 검토하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빈 교실의 복합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및 지역 경제산업 활동의 연계성 차원에서 함께 검토함

바. 우리나라와 인구구조 및 경제산업구조가 유사한 OECD 국가들의 과밀학급 해소 정책을 수집하고 비교 분석: 이러한 국가들의 교육정책을 지방분권화 정책, 이민정책 및 도시개발 정책, 경제산업 정책과도 연계하여 검토 분석함

II. 현황 분석

1. 과밀학급 관련 일반 현황: 학교, 학생, 교사 수 추이(1970~2023)

2023년도 현재 과밀학급이란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학급으로 정의하고 있다. 과밀학급의 기준이 되는 단위 학생 수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2000년도 초반에는 과밀학급이 한 학급 당 학생 수가 36명 이상으로 정의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30명 이상이였다.⁵⁾ 과밀학급의 단위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원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나, 학령인구의 감소, 산업화로 인한 인구밀집 지역에서의 신규학교 및 학급의 증설,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교사의 증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2000년~2020년까지 학령인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학령인구가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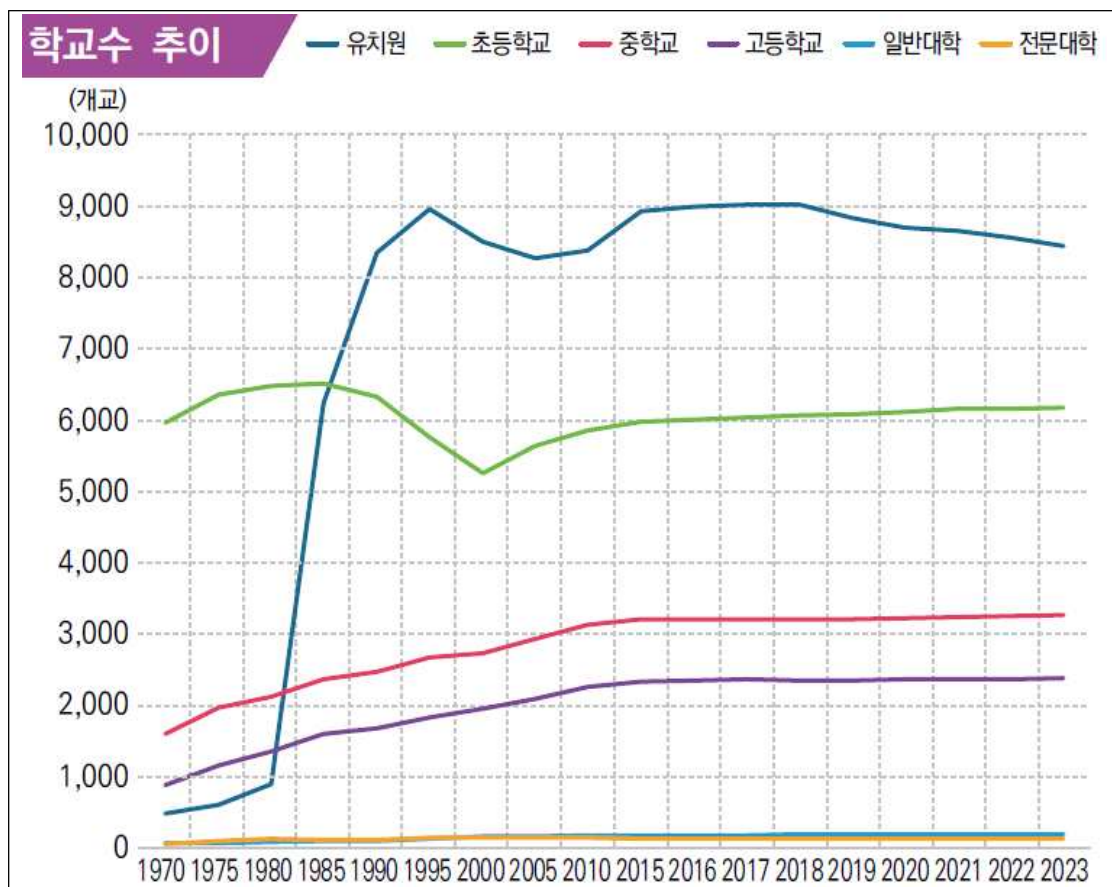


그림 2. 학교 증설: 유치원 및 초중등 학교 수 변화 추이⁷⁾

5)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17&publSeq=3&menuSeq=3645&itemCode=02&language=>

6) 출처: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III 2021』,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1

일련의 그래프(그림 2. ~ 그림 4.)는 2023년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출간한 교육통계 연보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러한 그래프는 1970년부터 2023년까지 약 50년 동안의 대한민국 교육환경에서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변화 추이를 한꺼번에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를 볼 때 유치원을 제외하고 초중등 학교의 숫자는 202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학생 수 추이는 2020년부터 유치원생뿐만 아니라 초중등 학생도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았던 학교 숫자의 증가와는 달리 학생 수는 반대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유치원 학생들이 수년 내에 중등학교에 진학하면,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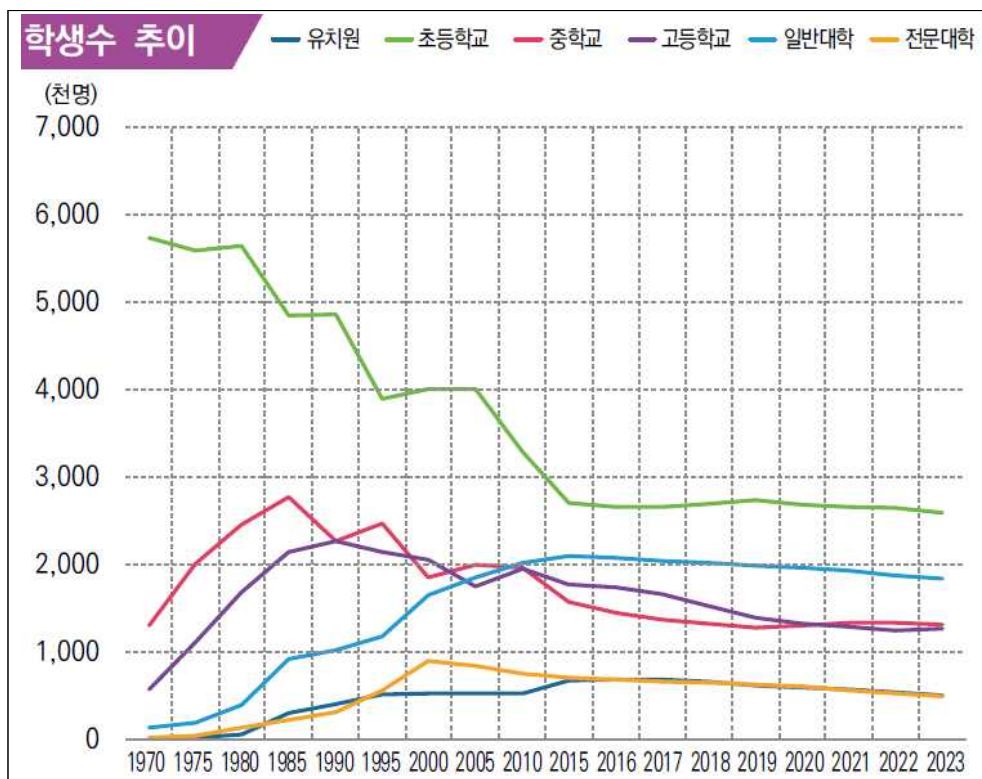


그림 3. 학령인구 감소: 유치원생 및 초중등 학생 수 변화 추이⁸⁾

그리고,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교원은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중등학교 교원의 경우는 약간의 감소폭을 보이고 있으나, 기간제 교사를

7) 출처: 2023년 간추린 교육통계,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2023.

8) 출처: 2023년 간추린 교육통계,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2023.

포함한다면 그 감소 폭은 매우 미미할 것이다. 2022년도 기준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의 숫자는 7만57명으로, 이는 전체교사 50만 7,793명 가운데 13.8%를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기간제 교사의 근무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에서 제시한 과밀학급 해소방안 중의 하나가 기간제 교사 증원이기 때문에, 과밀학급 또한 기간제 교사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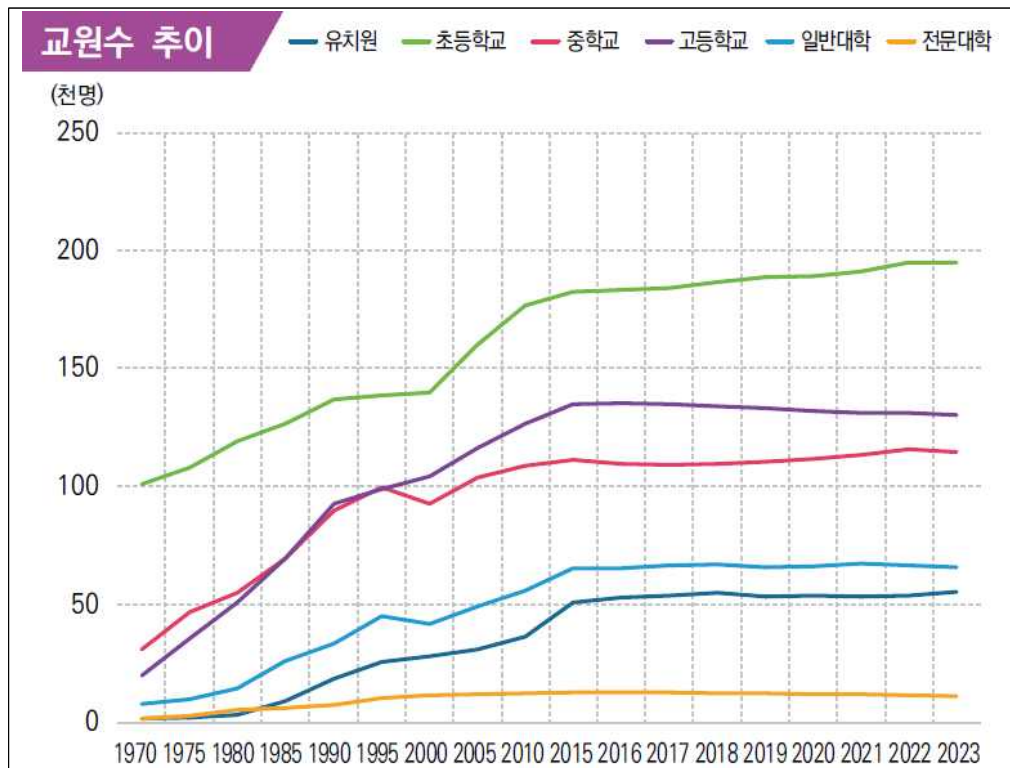


그림 4. 교원수 추이⁹⁾

9) 2023년 간추린 교육통계,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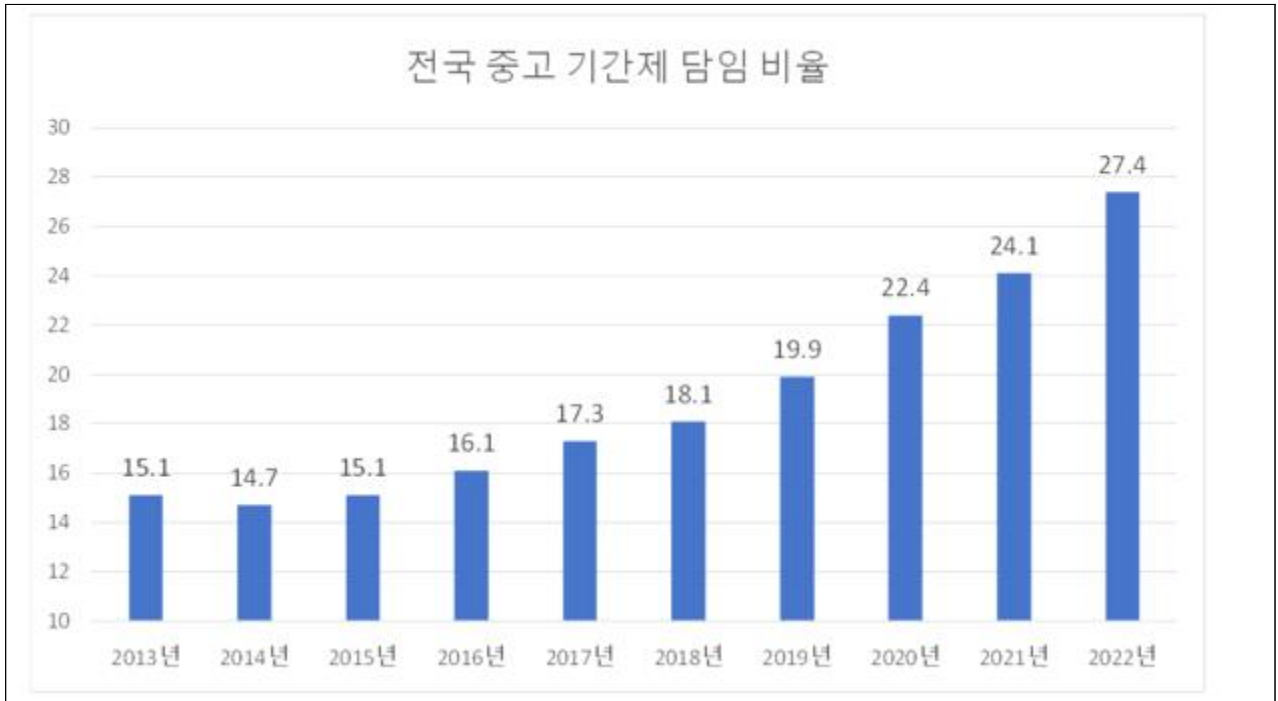


그림 5. 전국 중고 기간제 담임 비율

특히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중은 2022년도에 27.4%에 달했는데, 2023년도에는 더욱 증가하여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충남 과밀학급 현황

(기준: 2023.3.5.자 학교 현황, 단위: 교, 급, 명)

학교급	학교 현황				과밀 현황	
	학교수	일반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¹⁾	과밀 학교 ²⁾ (비율)	과밀 학급 ³⁾ (비율)
초	421	5,854	116,144	19.8	20 (4.8%)	257 (4.4%)
중	186	2,259	59,564	26.4	76 (40.9%)	1,258 (55.7%)
고	118	2,313	57,445	24.8	36 (30.5%)	826 (35.7%)
계	725	10,426	233,153	22.4	132 (18.2%)	2,341 (22.5%)

1) 학급당 학생수: 학생수 ÷ 일반학급수

2) 과밀학교: 과밀학급이 포함된 학교

3) 과밀학급: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학급

표 2. 충남 과밀학급 및 과밀학교 현황

2023년도 현재 충남 도내 초중등학교에서 과밀학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21.6%로 경기 30.4%, 제주 24.8%, 인천 21.8%에 이어서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4번째로 높다. 충남 도내 15개 시군을 살펴 보았을 때, 현재 10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 비율이 높은 이유는 충남 15개 시군 지역 간의 인구편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를 제외한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문제이다. 1965~2020년도까지 17개 광역지자체의 학령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광역단체의 학령인구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그림 6.에서는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광역지자체에서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 개의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전국 평균인 15.5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에 색깔별 편차를 드러내고 있다. 그림4를 보았을 때,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도 전체의 학령인구 감소는 -25.7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에 이어서 네 번째로 감소폭이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도내 15개 시군 기초지자체를 놓고 볼 때는 천안,

학령 인구 변화(200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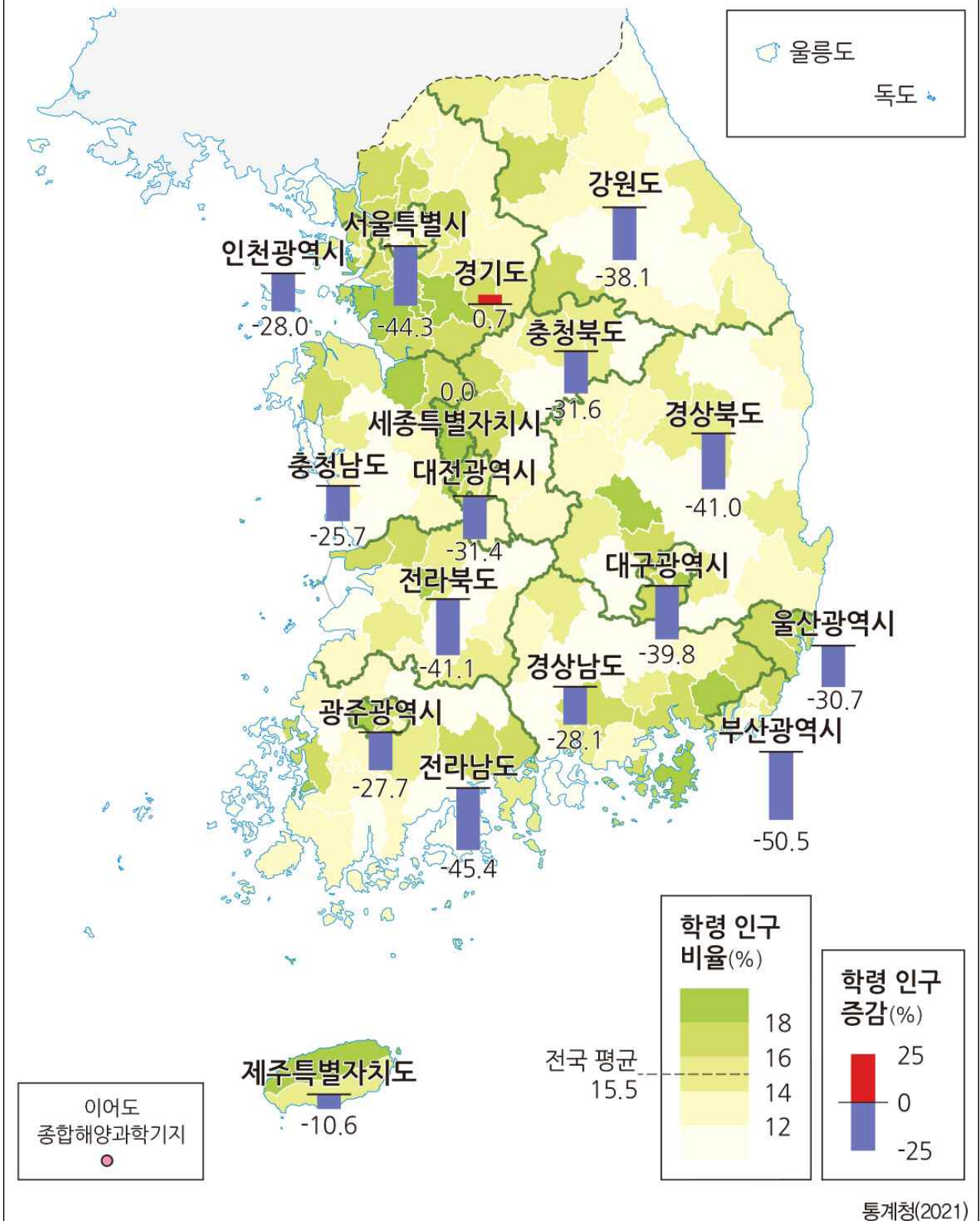


그림 6. 경기도를 제외한 학령인구의 전국적인 큰 폭 감소 추이¹⁰⁾

10) 출처: 원문 - 한국교육개발원, 재인용 출처: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III 2021』,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1.

아산, 당진, 서산, 홍성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의 학령인구가 전국 평균 15.5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림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령인구의 지역 간 편차와 과밀학급 발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전국 과밀학급의 41.7% 가 몰려있는 경기도의 경우에도 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든 지역에서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화로 인한 신도시 개발이 활성화된 김포, 화성, 오산, 용인, 수원, 하남 등과 같은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외의 비 산업화 지역에서는 사실상 발생하고 있지 않다.

경기도 과밀학급* 및 과밀학교** 현황										
[3.1.자 일반학급 기준, 단위: 학급, 교]										
구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전년 대비 비율 증감	
	전체 학급수	과밀 학급수	전체 학교수	과밀 학교수	전체 학급수	과밀 학급수	전체 학교수	과밀 학교수	과밀 학급수	과밀 학교수
초	30,929	4,097 (13.2%)	1,317	482 (36.6%)	30,658	3,314 (10.8%)	1,327	448 (33.8%)	△2.4%	△2.8%
중	12,952	9,000 (69.5%)	647	487 (75.3%)	12,994	8,539 (65.7%)	655	468 (71.5%)	△3.8%	△3.8%
고	13,463	3,337 (24.8%)	486	147 (30.2%)	13,473	4,249 (31.5%)	487	230 (47.2%)	6.7%	17.0%
특수	928	18 (1.9%)	38	10 (26.3%)	933	10 (1.1%)	38	9 (23.6%)	△0.8%	△2.7%
계	58,272	16,452 (28.2%)	2,488	1,126 (45.3%)	58,058	16,112 (27.8%)	2,507	1,155 (46.1%)	△0.5%	0.8%

※ 사립초 3교 제외, 사립 특성화중 8교 제외, 특수학교 장애영아과정 제외
 * (초·중·고)학년별 전체학급 평균 인원이 28명 이상 학급, (특수)법정 정원 초과 학급, **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

표 3. 2023년 경기도 과밀학교 및 과밀학급 현황

충남의 경우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이다.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시가 경기도 화성, 오산, 용인이라면 그 다음으로 과밀학급 수가 많은 지역이 충남 천안이다. 천안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은 수도권과 연접한 천안, 아산, 당진, 서산과 같은 4개 도시에 국가 산업단지 및 여러 중소, 중견, 대기업이 입주함으로써, 산업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사실 충남도와 경기도 내의 지역 간 학령인구 편차 및 이에 따른 과밀학급 발생의 지역간 편차는 산업화 정도에 따른 지역 간 소득 차이 및 일자리 수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충남 북부지역의 과밀학급 발생 원인

▣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충남 북부권 vs.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

충남의 천안, 아산, 서산, 당진 4개 도시는 지리적으로 북부지역에 위치하며, 이에 따라 수도권과 연접해 있다. 이 도시들은 그동안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맞물려 함께 수도권화가 진행되어 왔다. 지역균형발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도권과 충남북부지역이 연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수청권(수도권 + 충청북부 지역) 형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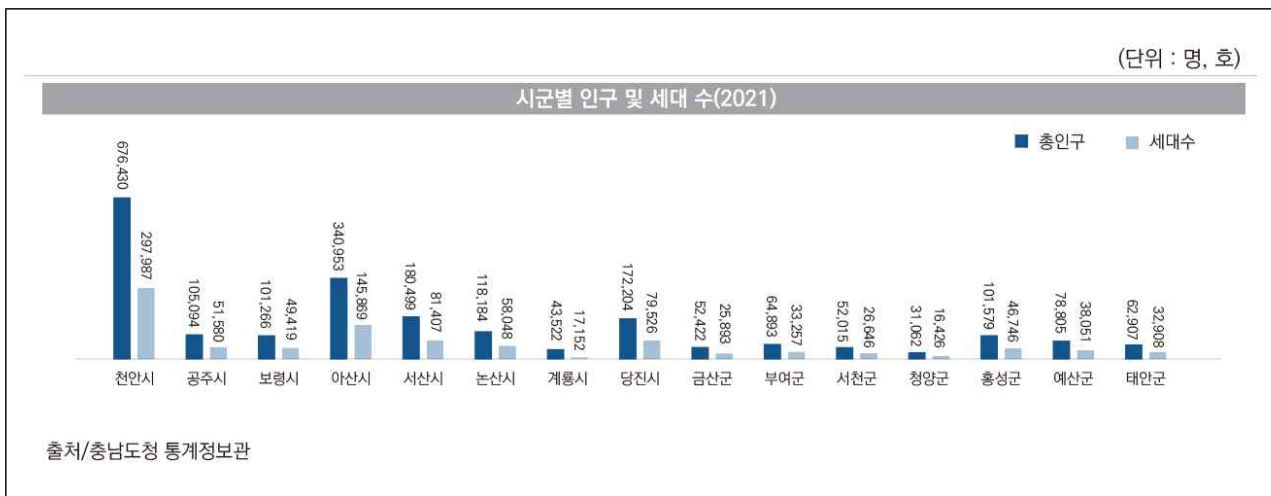


그림 7. 충남 도내 15개 시군별 인구 및 세대 수(2021)

위 그림 7. 의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충남 15개 시군에서 천안, 아산, 당진, 서산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마치 대한민국 17개 광역자치체의 인구분포에서 나타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 4개 도시의 인구 총합은 약 138만 명으로서 충남 전체 약 220만 인구의 6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개 권역이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약 55%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현상과 매우 유사하다. 과밀학급 차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서북부에 위치한 서울, 경기, 인천이 마치 충남의 서북부에 위치한 천안, 아산, 당진, 서산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전국에서 과밀학급 숫자가 경기도, 서울, 인천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처럼, 충남에서는 주

로 천안, 아산, 당진, 서산에서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천안의 불당동, 백석동 지역의 과밀학급 발생의 유형과 성격은 경기도와 사실상 동일하다. 천안의 이 두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학령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교 증설 및 교사 증원과 같은 가시적인 물리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해결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당진, 서산, 논산과 같이 일시적인 학교 행정구역의 재배치 또는 시간이 지나면 학령인구 자연 감소가 발생함으로써, 가까운 수년 내에 학급당 학생 수 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에 학교 증설이나 교사 증원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의 경우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남북부지역과 수도권에 이토록 대한민국 인구가 밀집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이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타 지역의 인구가 충남북부지역 및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충남 북부,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같은 지역에는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의 경제,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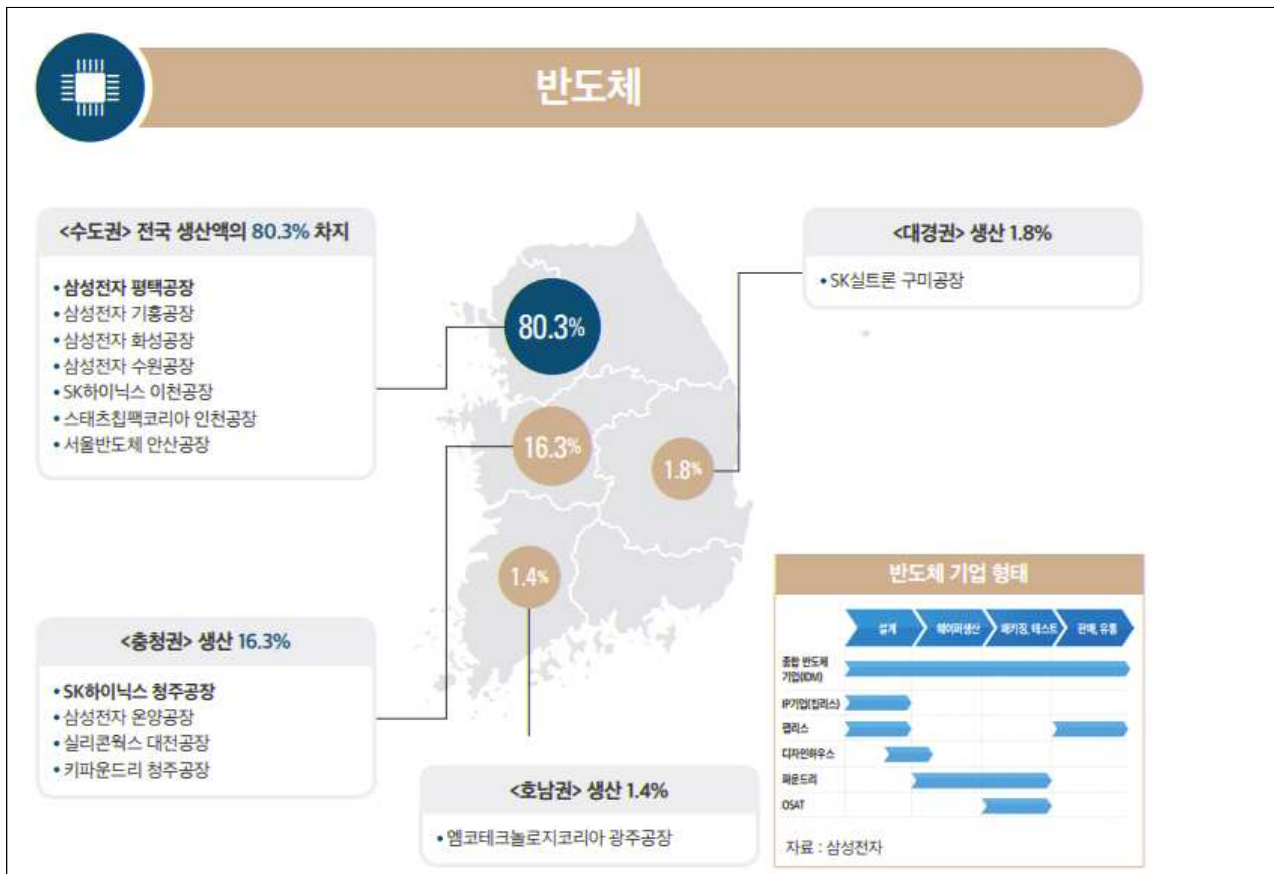


그림 8. 충청북부 및 수도권 반도체의 전국 생산 비중>11)

또한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기계산업과 같은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에서 충청북부지역과 수도권은 최상위의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도 한국은행이 출간한 『우리나라 주요산업 생산지도』에 의하면, 일례로 반도체산업의 경우 충남 북부지역과 수도권이 차지하는 생산 비중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약 90%에 달한다.

이것은 또한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유발해 왔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화 완화 또는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국가정책을 펴왔다. 서울 수도권에 본사가 있는 국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비롯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행정복합도시 건설, 지방 혁신도시 건설 정책 등과 같은 주요 정책을 통해,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11) 출처: 한국은행 발간 “우리나라 주요산업 생산지도” 1쪽, 2021.06.

■ 충남 북부권 도시의 산업화와 이에 따른 인구유입

충남 북서부지역인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의 4개 도시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반도체,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토탈, 롯데화학과 같은 대기업과 이러한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수많은 중견/중소 협력업체들이 함께 입주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신산업벨트가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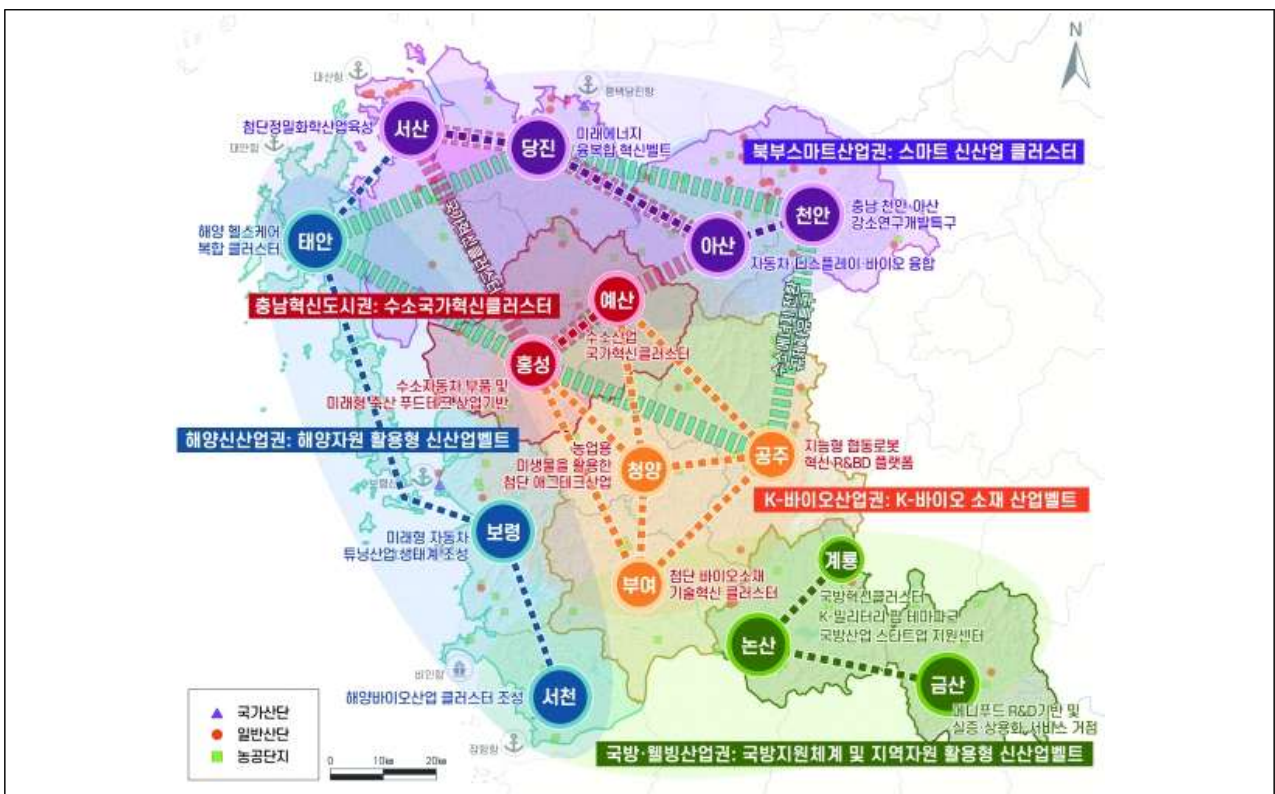


그림 9. 스마트 신산업 클러스터로 계획된 충남 북부지역¹²⁾

이와 같은 수도권 소재 기업의 충남 북부 이전은 그 지역으로의 급격한 인구유입 현상을 만들었다. 천안시 불당동 일원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까지 야산과 낮은 구릉, 논밭, 공동묘지가 있었던 미개발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신도시로 개발되어 충남에서 가장 인구 증가세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12) 출처: 충남도. 충남 5대 권역별 산업발전구상. 특히 수도권과 접경한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은 다수의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입주하고 있어서, 차세대 전략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화학-에너지, 철강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스마트 신산업 지대로 성장 발전계획이 구상되었다.

이처럼 불당동과 같은 신도시의 개발은 인근의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반도체,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 및 외국인 투자 산단 내의 외국기업, 그리고 관련 협력업체의 베드타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진 생활공간 구축의 필요성에 의해서 건설되었다.

2023년도에 대한민국 정부는 전국 총 15개소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확정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 충남은 천안의 미래모빌리티 반도체(부지규모 총 417만 m^2) 국가첨단산업단지와 홍성의 미래신산업(부지규모 총 236만 m^2) 국가첨단산업단지가 후보지로 지정되었다. 천안과 홍성의 부지 규모를 합하면 총 653만 m^2 인데, 이는 수도권에 지정된 경기도 용인의 시스템반도체(부지 규모 총 710만 m^2) 국가첨단산업단지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특히 천안과 홍성의 중점산업은 고용창출효과와 전후방연계효과가 상당히 뛰어난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전략산업으로 집중적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수도권이나 여타지역으로부터 충남권역으로 인구의 추가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전략산업으로 천안시의 경우는 이에 따라서, 후보지로 확정된 성환 종축장지역 인근에 불당동과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슷한 규모의 뉴타운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과 더불어, 충남권역에 경기도 용인의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 최대규모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과도 같은 정책 수립 및 시행은 충남 지역에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인구의 유입을 예상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또한 이미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충남 산업지대의 배후 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들 인구가 쾌적하게 정주할 수 있는 각종 여건이 조성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 가정과 같은 세대 인구의 유입은 자녀의 적절한 교육환경 구축이 정주여건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또한 미혼으로 충남의 산업지대에 유입된 남녀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베드타운에 정주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열이 대단히 높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주여건의 핵심은 물

리적 시설과 각종 교육콘텐츠가 잘 구성되어 자녀들의 교육효과가 매우 높은 유치원, 초중등학교를 갖추는 것이다.

특히 과밀학급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베드타운 지역에 정주하는 가구의 학생들이 수년 동안에 걸쳐 비좁은 공간에서 학습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지역의 학교로 통학해야만 한다면, 이것은 기존의 도시계획을 비롯하여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각종 관련된 교육 및 도시계획 정책을 다시 검토해 보고 그 속에서 최선의 방책을 간구해야만 할 것이다.

충청남도에서 서울수도권 지역이나 동남권의 대표적 산업지대인 울산광역시와 사실상 동일한 심각한 과밀학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천안시 불당동과 백석동이다. 천안시 불당동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두 지역의 과밀학급 발생 유형과 성격은 전국에서 학령인구가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와 동일하다.

그런데 불당동과 백석동 지역의 신도시 건설 당시에, 초기의 도시개발계획이나 이에 따른 각종 토목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몇 가지 법규적 취약점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신도시로의 인구 유입 예상치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하였다. 이 두 지역에서 신도시 개발 당시의 도시개발계획과 관련한 법규상에 허술한 부분들이 있었으며, 이는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추후에 다듬어지고 개정되어 졌다. 특히 오피스텔 인허가 관련 법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개정은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 비단 천안 불당신도시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닌 전국의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연구용역 보고서의 본문 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

4. 인구통계 및 도시계획 분석

1) 인구통계 분석(전국 및 충남)

▣ 인구통계 분석: 대한민국 전체 현황

-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 2021년 대한민국 인구는 사상 첫 자연 감소를 시작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1949년부터 인구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초의 자연 감소가 발생함
- 통계청이 2021년 7월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총인구는 5천174만 명으로 2020년보다 9만1천명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
- 연평균 인구성장률도 -0.2%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함. 2020년까지는 1% 미만 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는데, 2021년 처음으로 마이너스 인구 증가를 기록하였음.
-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특히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전체인구 가운데 71.4%(3,694만 4,000명)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전년도 대비 34만4,000명 줄어들어 0.9% 감소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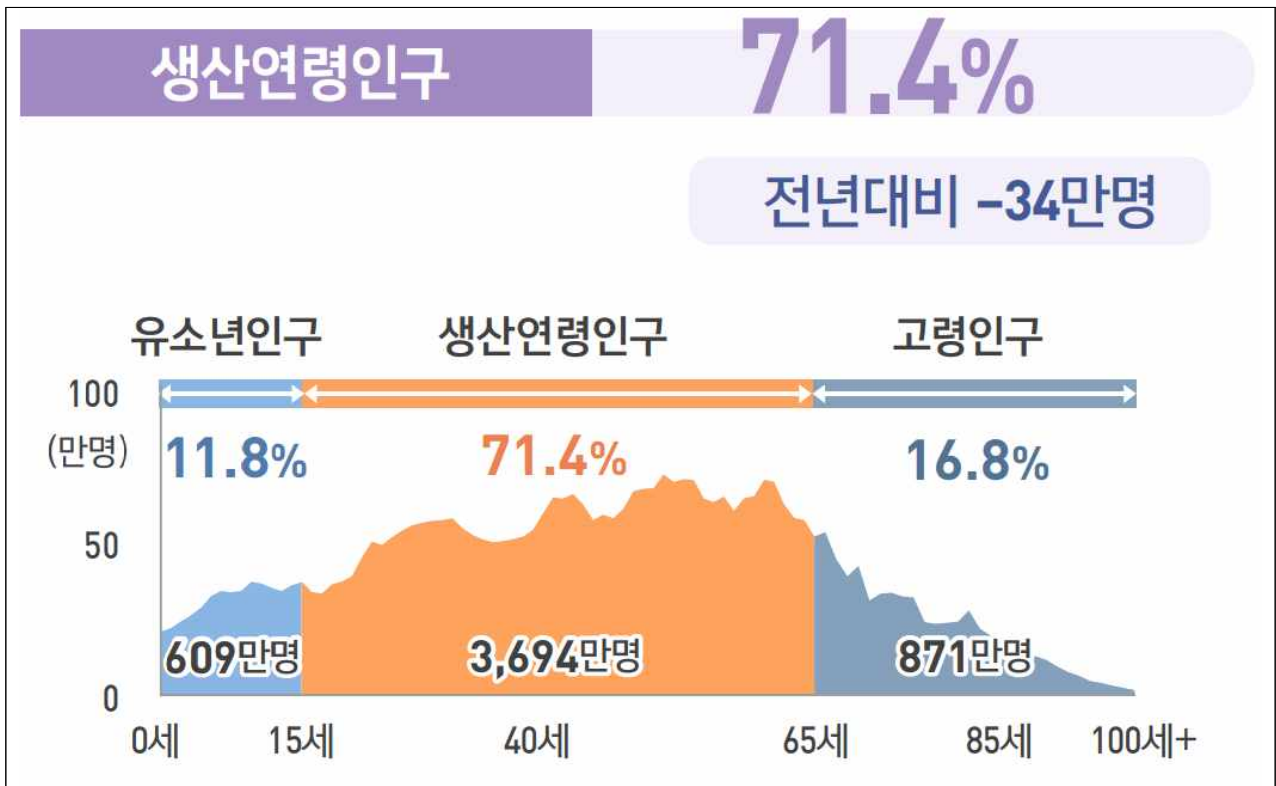


그림 10. 대한민국 인구 현황(2021)¹³⁾

-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1년 전과 비교해 41만 9,000명이 증가한 870만7,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6.8%를 차지함
- 대한민국 인구는 점점 고령화되고, 생산연령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2021년 대한민국 중위 연령은 44.5세로 역대 최고령을 기록함. 2023년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은 2021년과 비교하여 1.5세가 상승하여 46세에 도달함. 1994년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은 29세였으나, 약 30년이 지난 2023년에는 17세가 증가한 46세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갈수록 노쇠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여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규모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지표임.
- 이미 골드만삭스와 같이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영미의 경제산업 및 금융 기관,

13)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20169>

언론기관에서 발표한 2050년까지의 세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인하여 현재 세계 10권의 경제규모를 유지하지 못하고, 2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 대신 대한민국의 자리를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과 같은 인구 대국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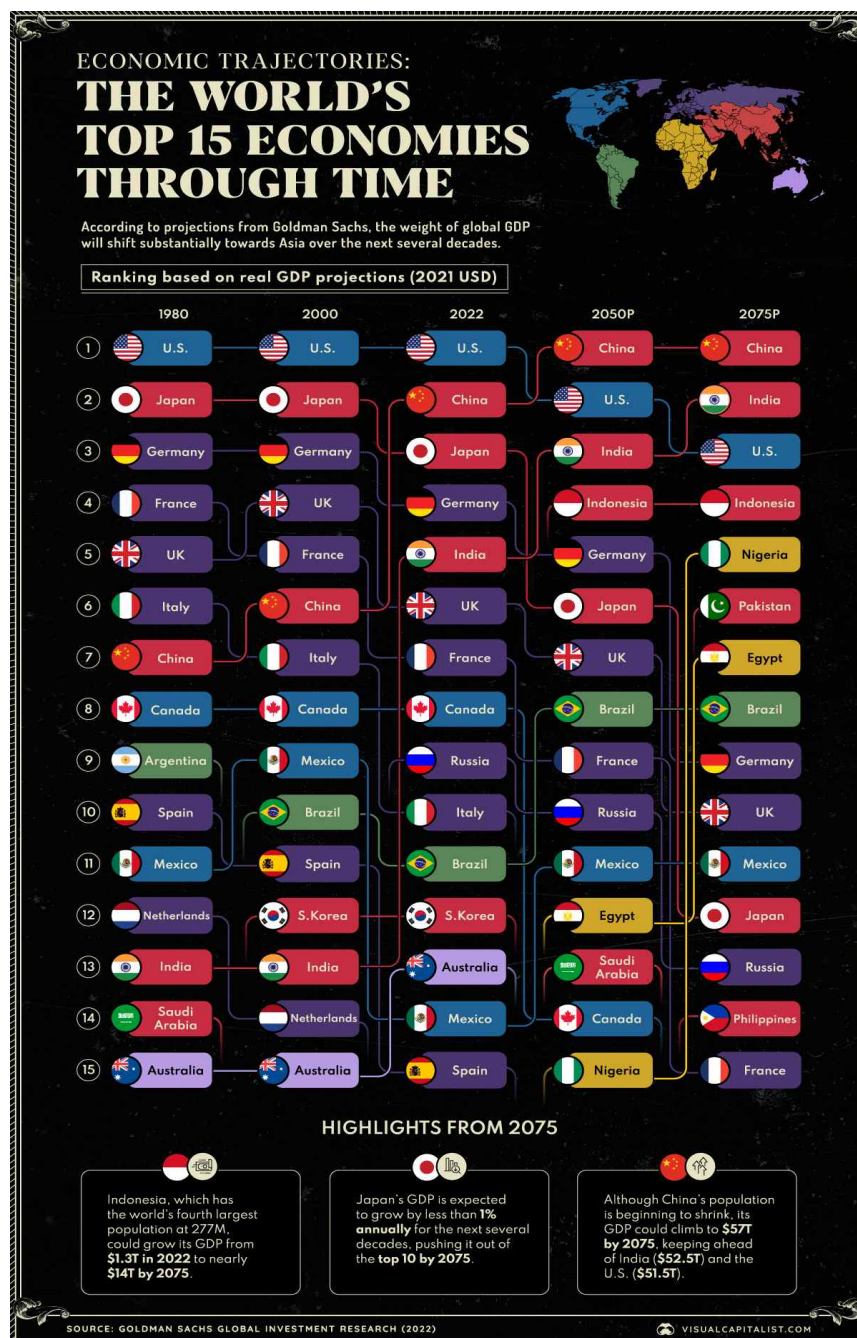


그림 11. 1980~2075년까지 세계 주요국 경제 규모 순위 전망도¹⁴⁾

■ 인구통계 분석: 3~4인 이상 가구 감소

- 대한민국 전체 가구 수는 2,202만 가구로 전년 대비 53만 8,000가구, 2.5%가 증가하였는데,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1인 가구로 총 717만 가구로서 전년도 대비 7.9% 증가함
- 3인 가구는 총 417만 가구, 4인 이상 가구는 총 404만 가구로서 3~4인 이상 가구가 1~2인 가구에 비해 소수를 차지함

14) 출처: <https://www.visualcapitalist.com/top-economies-in-the-world-1980-2075/>

본 자료는 미국의 세계적인 금융기관인 골드만삭스가 발간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도표이다. 인구의 자연감소 및 노쇠화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1990~2020년대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2050년도 이후 2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신 그 자리를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필리핀, 파키스탄 등과 같은 신흥국들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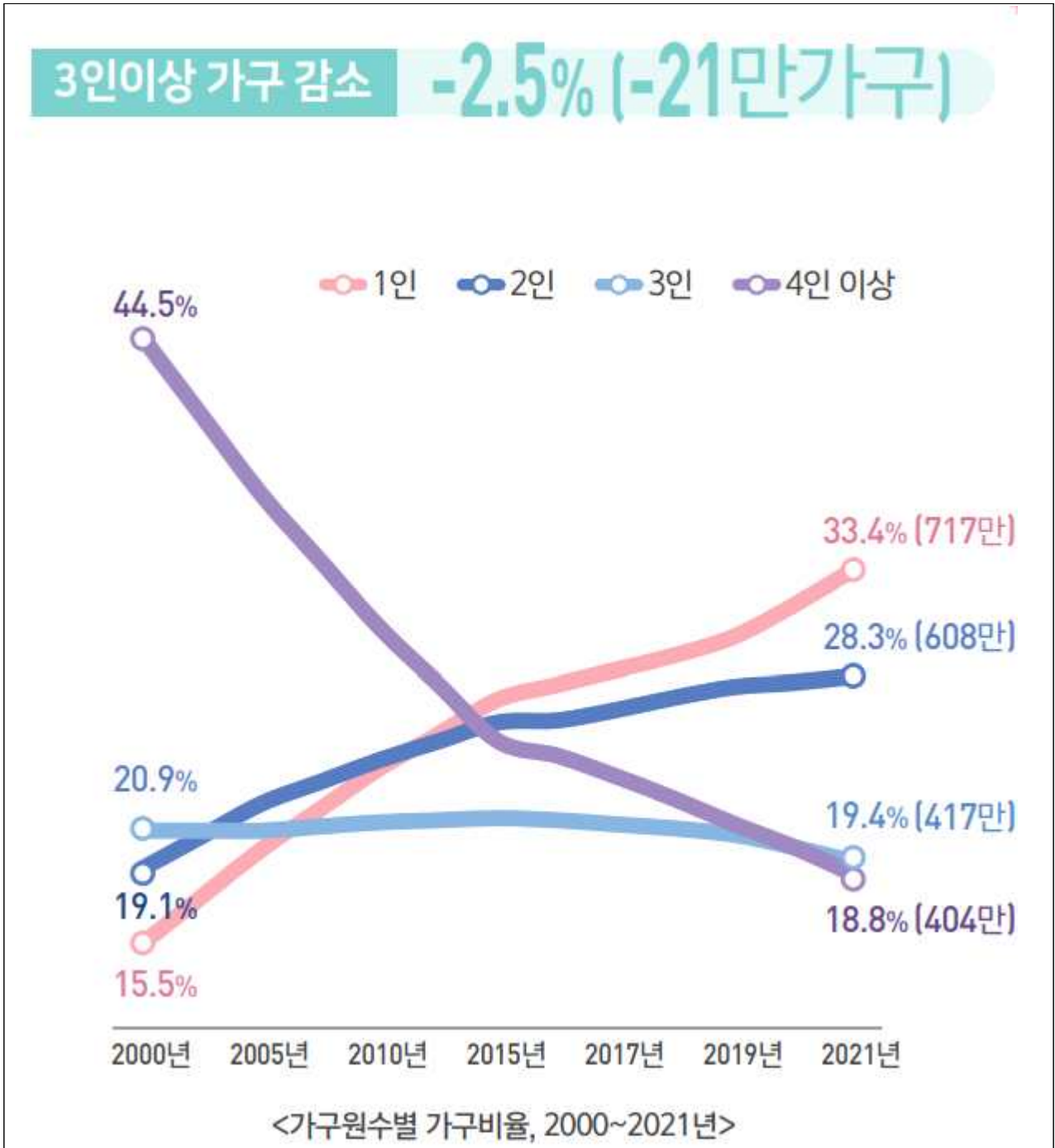


그림 12. 대한민국 가구원수별 가구비율, 2000~2021년¹⁵⁾

■ 인구통계 분석: 대한민국 2050년 인구 전망

- 2050년도에 이르면 대한민국의 17개 광역단체 중 충남, 경기도, 세종, 제주도 4개 권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광역단체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15)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20169>

-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전망되는 13개 광역단체(서울,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전북, 울산, 전남, 광주, 대전, 인천, 강원, 충북)는 2021년부터 이미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 감소 추세에 들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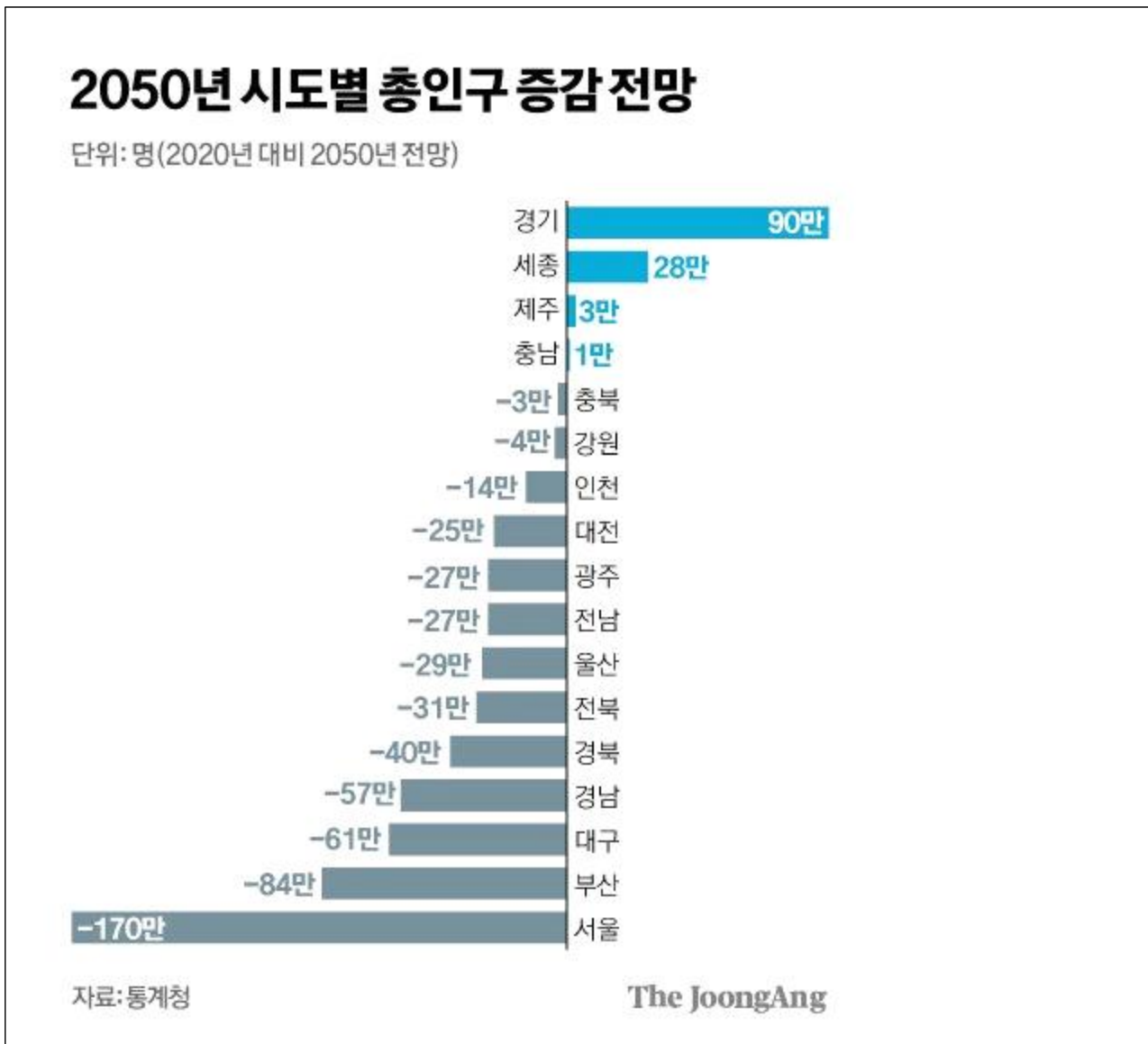


그림 13. 2050년 17개 광역단체 인구증감 전망¹⁶⁾

- 2050년 대한민국 총인구는 4,73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1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5,174만 명임. 2021년 대비 438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4400#home>

○ 충남은 2050년도에 2021년도 약 220만 명 인구 대비 1만 명(0.7%) 증가할 것으로 전망. 증가 예상 인구의 약 70%~100%는 천안시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아산시의 경우는 0%~3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충남은 2050년도까지 충남 내부에서도 시군 간의 지속적인 인구이동이 예상되며, 충남 15개 시군 인구 가운데, 충남 내부 인구 이동에 의한 인구 유입지역은 천안 또는 천안/아산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나머지 13~14개 시군은 인구 유출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됨.¹⁷⁾

■ 인구통계 분석: 2050년 시도별 학령(유소년)인구의 감소 전망

○ 2050년 학령(유소년, 6~21세)인구는 2020년 789만 명 대비 481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308만 명, 39.1% 가 감소하는 수치임.



그림 14. 2050년 17개 광역단체 유소년 인구 증감률 전망¹⁸⁾

17) 출처: 충남연구원 연구자료

18)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526_0001886204

○ 충남의 경우도 2020년 대비 3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인구통계 분석: 2020~2050년 충남 학령인구 변화 전망

○ 충남의 초중고 학령인구는 2020년 313,077명에서 2050년 159,27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현재 과밀학급 현상을 보이는 충남 천안은 2020년 7만9,115명에서 2040년 5만8,027명으로 21,088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¹⁹⁾

○ 충남의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20년 학교당 285명에서 2040년 195명,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에서 1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충남의 중학교 학생 수는 2020년 학교당 309명에서 2040년 186명, 학급당 학생 수는 26명에서 1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충남의 고등학교 학생 수는 2020년 학교당 494명에서 270명으로 감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4명에서 13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19) 원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2020.

재인용: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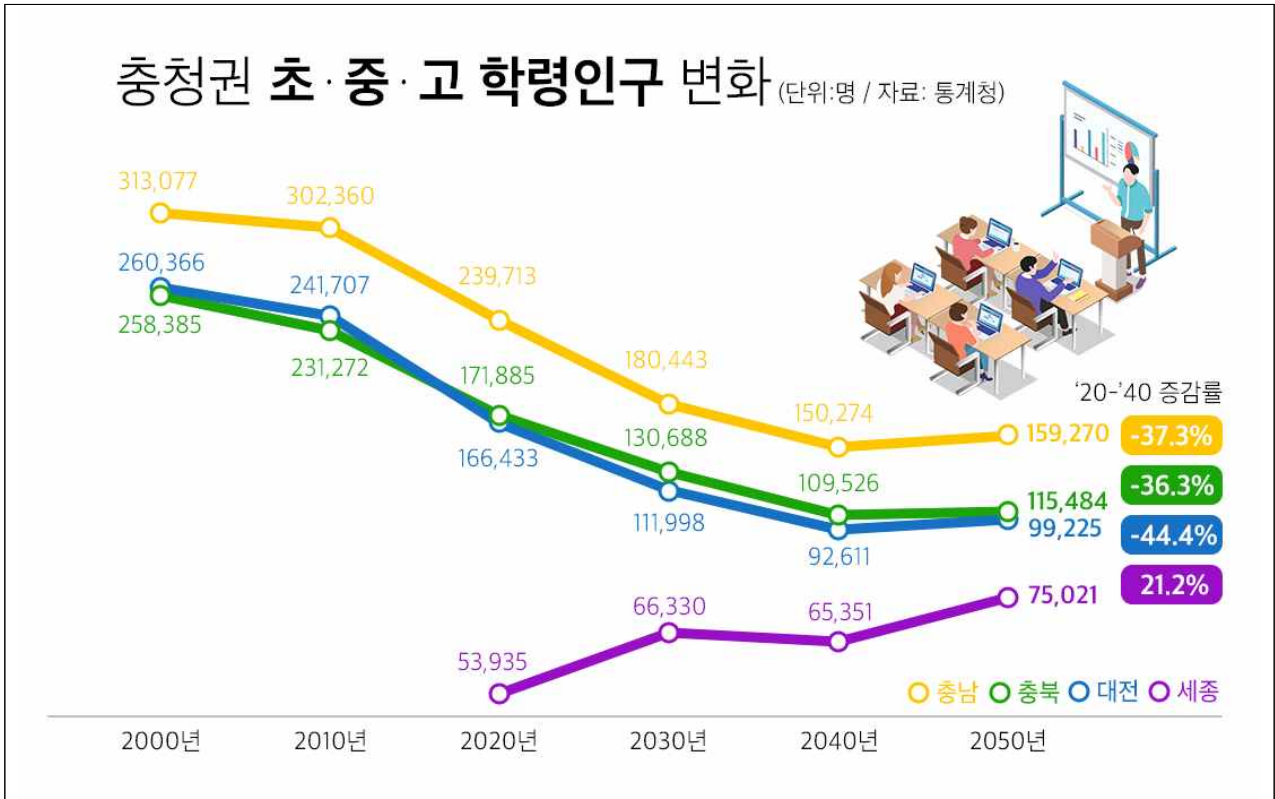


그림 15. 2050년 충청권 학령인구 감소 추이 전망²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인구 추이는 2021년을 기점으로 자연 감소에 접어들었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이나 그밖에 인구 유입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채, 이 상태 그대로 지속된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뿐더러 유소년 학령인구도 30% 가까이 감소하게 되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의 경우는 2050년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경기, 세종, 제주와 더불어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2021년보다 약 1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유소년 학령인구는 3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남의 중위 연령은 2020년 44.1세에서, 2050년에 이르면 60세로 높아질 전망이다. 평균연령이 아닌 중위 연령이 60세라는 것은 평균연령은 약 65세~70세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가 되면,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교에 대한 문제보다, 과밀 요양시설, 과대 요양원의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경기권과 동일한 성향의 과밀학급 현상을 보이는 충남 천안도 유소년 학

20) 출처(재인용): <https://www.cctoday.co.kr/news/userArticlePhoto.html>, 원출처: 통계청

령인구가 2040년까지 21,088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천안의 30개 읍면동 가운데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감소할지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규로 학교를 설립하거나 증축한다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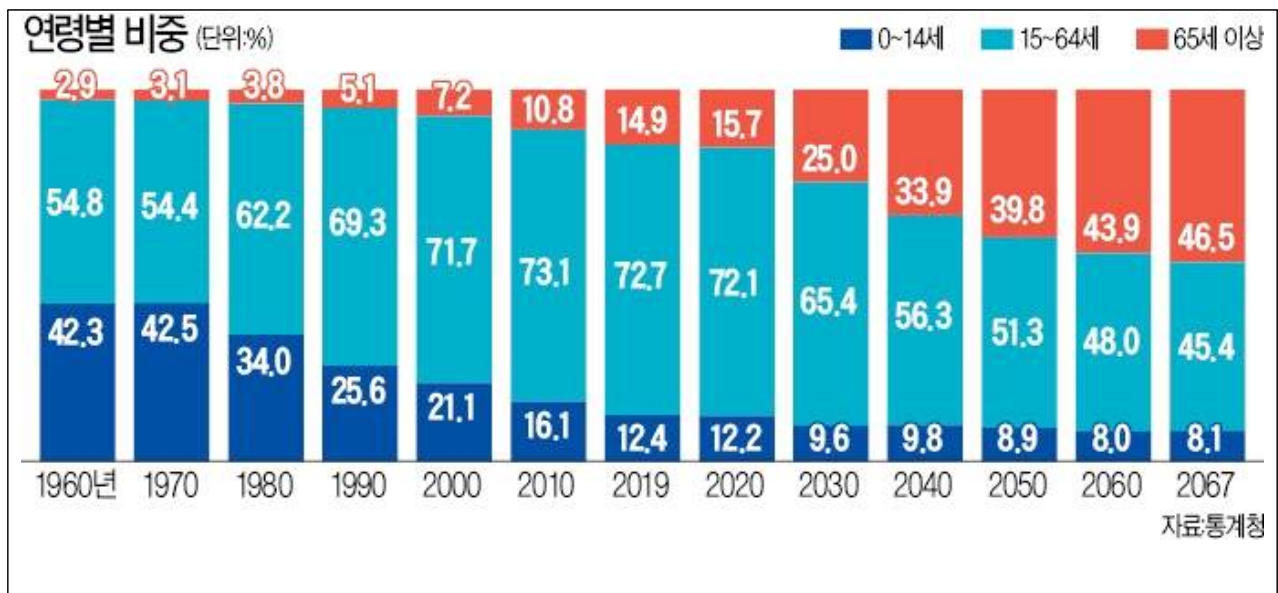


그림 16. 1960년~2067년 대한민국 연령별 비중 추이²¹⁾

천안의 30개 읍면동에서도 과밀학급 현상을 보이는 곳은 신도시로 개발된 불당동과 백석동 등 서북구에 위치한 지극히 소수의 지역에 불과하다. 그 외 다른 읍면동 지역은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학급 수 감소 및 학급 당 학생 수 감소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1) 출처(재인용):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110436571>. 원출처: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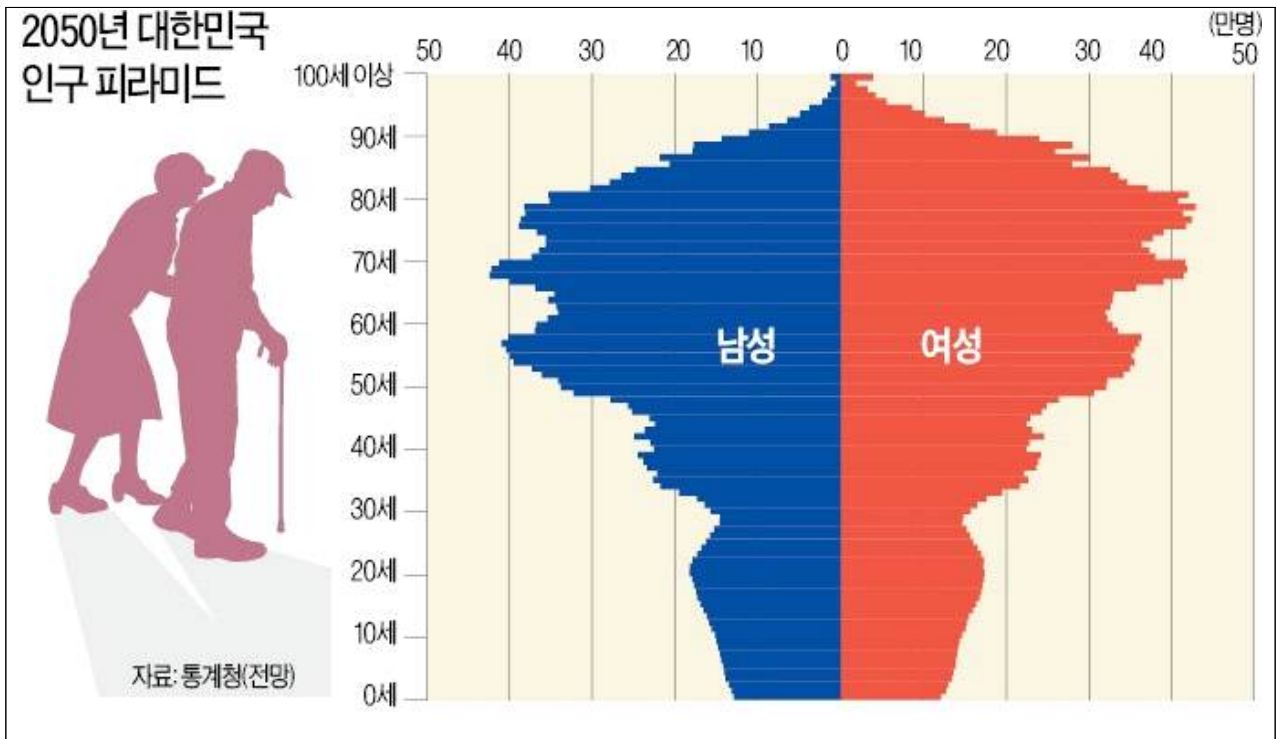


그림 17. 2050년 대한민국 인구피라미드²²⁾

2050년은 2023년 현재로부터 27년 이후이다. 27년 동안 충남의 학령인구는 약 33% 감소가 전망되며, 천안의 학령인구도 2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시행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과밀학급과 충남 아산신도시 계획 분석

▣ 아산신도시 건설 계획 내용 분석

- 현재 충남 도내에서 과밀학급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당동, 백석동은 2000년대 후반 LH(구 주택공사)에 의해서 아산신도시 2차 사업에서 개발된 지역임. 아산신도시 건설 계획(시행면적: 8.79 Km², 예상유입인구: 87,896명)은 1차와 2차 계획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불당동, 백석동은 그중 2차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개발되었음.

22) 출처(재인용):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110436571>. 원출처: 통계청

- 아산신도시 1, 2차 계획이 시행된 지역의 토지는 원래 대부분 자연녹지, 임야, 농지(논, 밭, 과수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 신도시 계획의 취지는 수도권인구와 수도권에 갖춘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었음.
- 명칭은 원래 아산신도시 2차 계획이었으나,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신방동이 함께 포함되어 개발되었으며, 개발 이후에는 불당동 지역만 별도로 불당신도시 또는 신불당지구로 불리고 있음.
-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도 불당신도시와 함께 신도시로 개발된 백석동 이 두 지역임.
- 최근 10년 동안 충남 도내에서 신도시 건설사업은 충남도청이전신도시, 아산신도시(아산 배방·탕정 + 천안 불당·백석·신방) 1, 2단계, 태안기업도시(2025년 완공 예정)가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음
- 그러한 충남도내 신도시 건설사업 가운데, 초기 예상치를 상회하여 인구가 유입된 지역은 아산신도시 1, 2차 계획에 의해 개발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음
- 충남도청이전신도시(내포신도시, 2009~2020)의 경우는 인구 10만 명을 예상했으나, 현재 약 25,000명 정도의 인구로 구성됨
- 아산신도시 건설 계획으로 조성된 불당동은 1, 2동을 합하여 2023년도 11월 현재 총 69,923명이 등록되어 있음. 천안시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인구 유입을 보이고 있으며, 주민 평균연령이 약 32세로 매우 젊은 연령대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 신도시로 새롭게 건설된 불당신도시는 신축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이 총 27 단지가 건설(입주시기 2004~2021)되었으며, 지리적으로 KTX천안아산역과

천안요금소, 북천안요금소가 인근에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이에 따라 젊은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재도 신축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건설이 계속되고 있음.

- 천안은 2023년에 천안 성환 종축장이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인구 유입을 예상하여 불당신도시 규모의 새로운 신도시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산업발전과 이를 뒷받침 할 신규 베드타운 건설에 힘입어 천안은 향후 10년 동안 약 2만5천 명 ~ 5만 명 정도의 인구 유입이 예상됨.

천안이 전국에서도 과밀학급 비율이 3~5위에 올라 있는 것은 불당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로 불당동 및 백석동에 인구가 급격히 유입된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불당신도시와 백석동 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은 그 인근 지역을 함께 활성화시켰으며, 불당동과 백석동에 위치한 불당초, 불무초, 아름초, 환서초등학교에서 심각한 과밀학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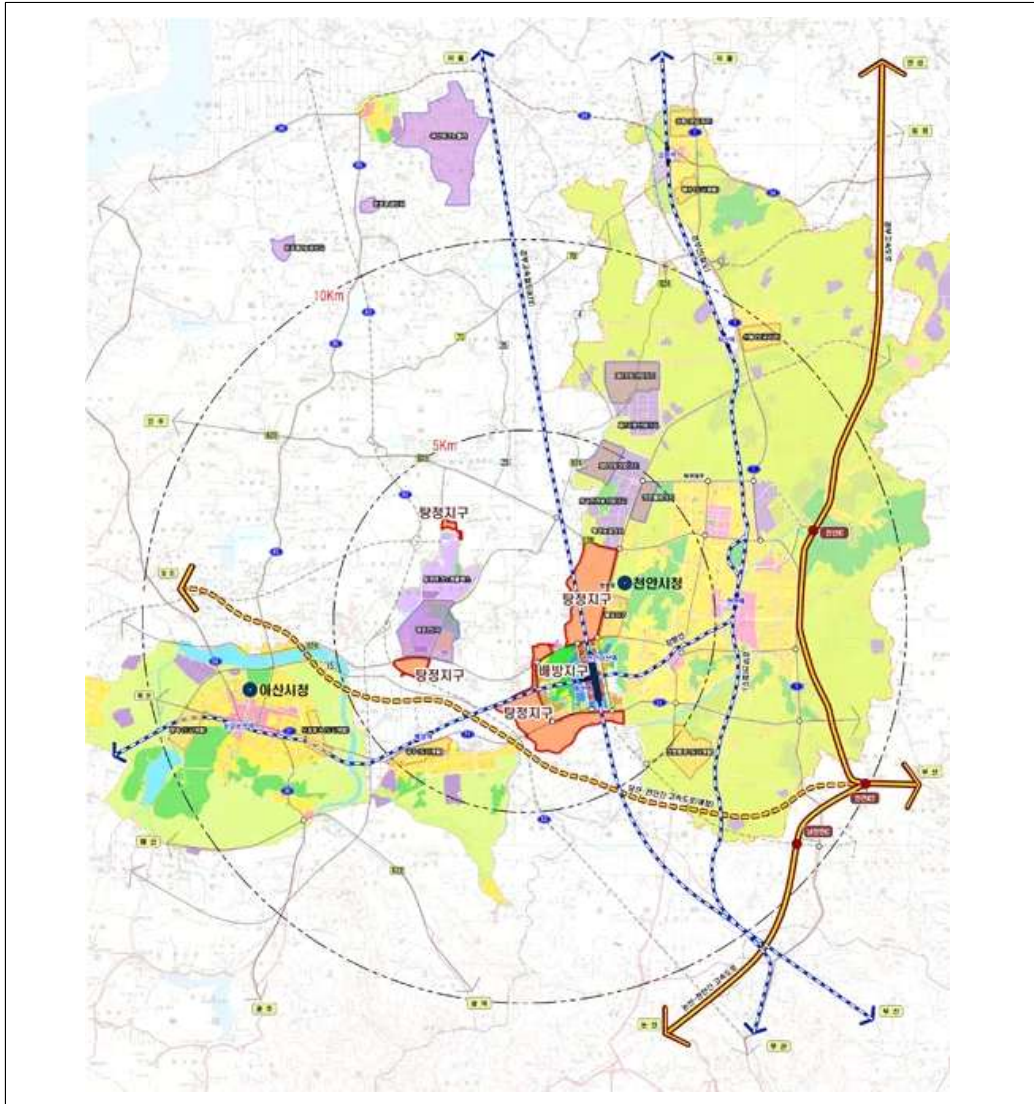


그림 18. 아산신도시 1, 2차 계획 지구²³⁾

위 그림 17. 지도에서 천안시청 건너편 탕정지구라고 표기된 지역이 바로 천안 불당신도시가 건설된 곳이다. 애초에 아산신도시라는 명칭으로 개발되어 행정구역상 아산시 탕정면의 명칭을 사용하여 탕정지구라고 명명되었으나, 그 지역은 행정구역상 천안시 불당동이 위치한 곳이며, 이곳의 자연녹지와 농지, 임야 등에 불당신도시를 개발한 것이다. 그리고 이 장소에 개교한 초등학교가 불무초등학교와 아름초등학교이며, 불당초는 먼저 개발된 탕정지구의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백석동 환서초등학교 역시 위 지도에서 볼 때 천안시청의 인근 윗부분에 위치해 있어서 과밀학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3) 출처: <https://namu.wiki/w/%EC%95%84%EC%82%B0%EC%8B%A0%EB%8F%84%EC%8B%9C>

위 그림 17.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당신도시와 백석동은 경부고속철도가 바로 근처에 지나가고, KTX천안아산역이 매우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한 천안시청이나 체육관 등 관공서 및 주민편의시설이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각종 국공립 연구시설과 갤러리아 백화점 등과 같이 다양한 연구, 교육,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그림 19. 천안불당신도시 경관(갤러리아백화점 인근)²⁴⁾

무엇보다, 불당신도시와 백석동은 그 인근(자동차로 30분 거리 이내)에 삼성SDI, 현대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반도체, 외국인투자산업단지 및 수만 개의 중견, 중소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러한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거주하기에도 최적의 장소이다. 그러다 보니, 지속적인 젊은 층의 인구 유입과 이로 인하여 그곳에 설립된 초등학교에서 심각한 과밀학급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의 기업은 294,000 개에 이르는데, 이는 전국의 4.0%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 기업의 약 70%가 천안과 아산에 있다. 또한 충남 소재 기업들의 연간 총 매출액으로 볼 때는 약 85% 정도가 천안과 아산의 기업들이 만들어 내고 있다. GRDP 면에서는 충남이 전국의 5.9%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 또한 1인

24)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190227005229>

당 지역총생산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의 뒤편 부록에 수록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간한 충남 서북지역 기업현황을 살펴보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0. 천안 백석동, 차암동, 성성동 전경²⁵⁾

25) 출처: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120704000005254>



그림 21. 천안불당신도시 평면도26)

26) 출처: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7/26/2023072600500.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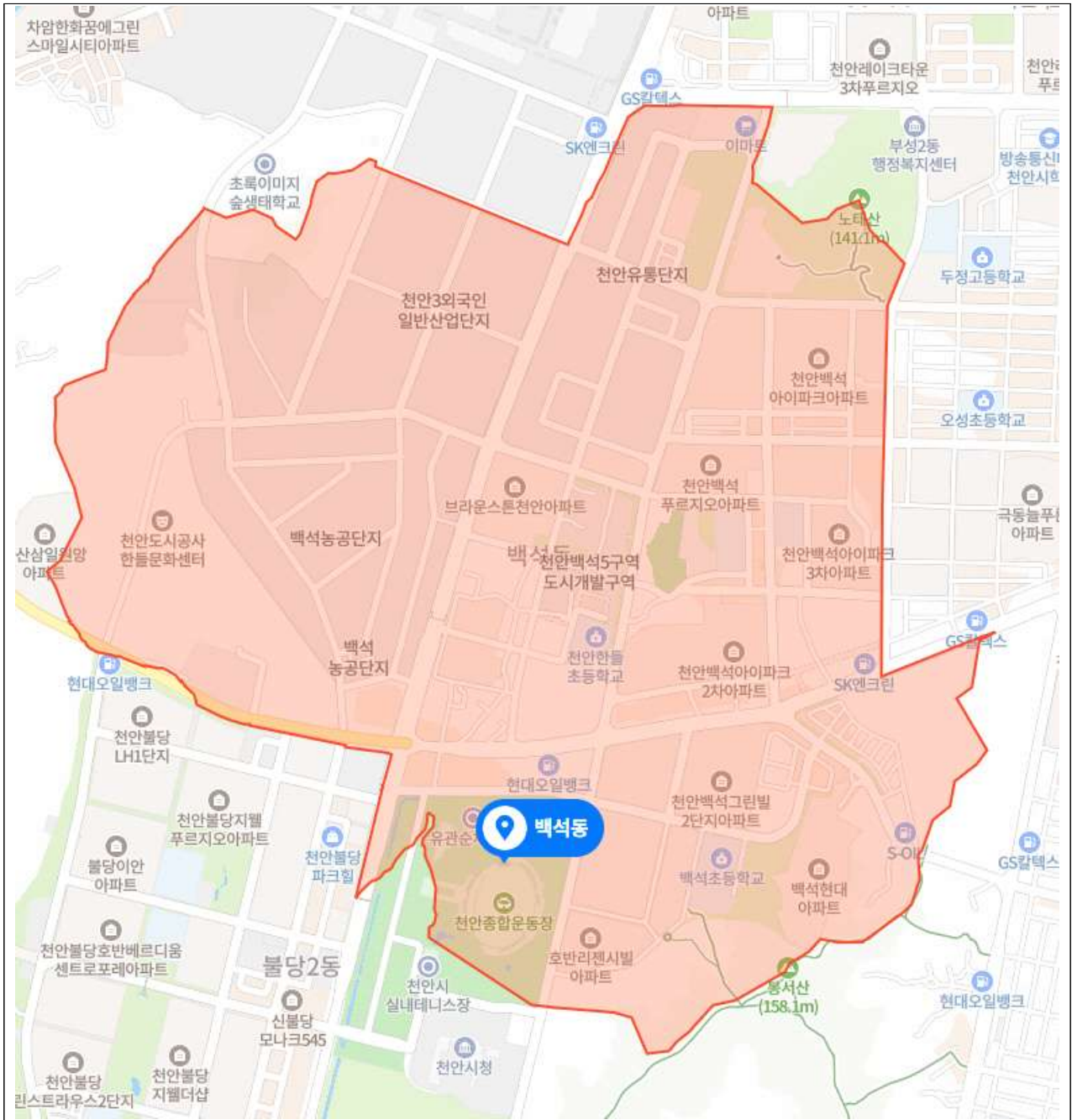


그림 22. 천안 백석동 평면도²⁷⁾

충남 천안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서도 과밀학급 수가 경기도의 수원, 용인, 오산, 김포에 버금가게 많은 이유는 바로 불당신도시로 건설된 불당동과 서북구 지역의 확장 발전으로 성장하게 된 백석동, 부성동 지역에 인구가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불당동(1, 2동 포함), 백석동, 부성동(1, 2동 포함)에 거주하는 인구를 모두 합하면, 22만4,156명(2023년 11월 통계)으로 이 5개 동에만, 천안시 전체인구의 약 30%가 거주

27) 출처: 네이버 지도, 2023.

하고 있다. 천안시는 총 30개의 법정 읍면동이 존재하는데, 그중 이 5개 동에만 천안시 전체인구의 30%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3. 천안불당초등학교²⁸⁾



그림 24. 천안아름초등학교²⁹⁾

28) 출처: 디지털천안문화대전, 2023.

<http://www.grandculture.net/cheonan/toc/GC04501872#mediaview>



그림 25. 천안불무초등학교³⁰⁾

천안시 불당동 1, 2동, 백석동, 부성 1, 2동은 신도시로 개발된 곳이며, 따라서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에는 수만 세대의 신축 아파트와 신축 오피스텔, 그리고 신축 상가가 지어졌으며, 인근에 KTX천안아산역, 경부고속도로 천안요금소, 경부고속도로 북천안요금소, 천안당진고속도로 등과 같이 교통망 또한 매우 탁월하다. 또한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수많은 글로벌 외국 기업들이 입주한 외국인투자산업단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현대모비스 천안공장, 현대모비스 아산공장 등 국가경제와 산업 및 무역을 선도하는 대기업 및 다수의 협력 기업들이 함께 입주해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이러한 탁월한 정주환경, 매우 편리한 교통망, 글로벌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일자리가 함께 공존하며 이 지역으로의 인구유입

29)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EC%B2%9C%EC%95%88%EC%95%84%EB%A6%84%EC%B4%88%EB%93%B1%ED%95%99%EA%B5%90_20200516_111618.jpg

30)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B2%9C%EC%95%88%EB%B6%88%EB%AC%B4%EC%B4%88%EB%93%B1%ED%95%99%EA%B5%90#/media/%ED%8C%8C%EC%9D%BC:%EC%B2%9C%EC%95%88%EB%B6%88%EB%AC%B4%EC%B4%88%EB%93%B1%ED%95%99%EA%B5%90_20200516_101747.jpg

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림 26. 천안환서초등학교³¹⁾

상기 그림 18. ~ 20. 의 사진은 불당동에 위치한 천안불당초, 불무초등학교, 천안아름초등학교와 백석동에 위치한 천안환서초등학교이다. 이 4개 초등학교에서 경기도의 과밀학급과 사실상 동일한 유형의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4개 학교의 적정 학생 수는 한 학교당 약 600~700명인데, 실제 학생 수는 약 3배에 달하는 1,900~2,300명에 달하고 있다. 천안아름초등학교의 경우는 2022년의 통계자료에서는 전국 6,163개의 초등학교 가운데 학생 수 2,310명으로 전국 1위의 과대·과밀학교가 되었다. 천안 환서초등학교는 전국 2위의 과대·과밀학교로서 학생 수는 2,269명이며, 천안 불무초등학교는 전국 6위의 과대·과밀학교로서 학생 수가 1,992명에 달했다.

경기도와 동일한 유형의 과밀학급이란 일종의 진성 과밀학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2050년도까지의 인구 전망 통계를 보면, 경기도만이 유일하게 2050년까지 유소년 학령인구가 계속 증가하며, 다른 16개 시도는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31)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D%99%98%EC%84%9C%EC%B4%88%EB%93%B1%ED%95%99%EA%B5%90#/media/%ED%8C%8C%EC%9D%BC:%EC%B2%9C%EC%95%88%ED%99%98%EC%84%9C%EC%B4%88%EB%93%B1%ED%95%99%EA%B5%90_20200507_141124.jpg

것은 지속적인 젊은 층의 인구 유입과 더불어 유소년 학령인구도 상당히 증가함으로써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우 심각한 과밀학급 현상을 보이는 천안의 4개 초등학교 가운데 일부 학교는 학교 식당의 수용인원이 제한적이다 보니, 전교 학생이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3시간 10분 걸쳐 점심식사를 해야만 한다.³²⁾ 또한 과학실습이나 음악수업 등 예체능 수업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고정적 확보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저학년의 돌봄대기자도 대폭 늘어나서 어린 학생들은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5. 해외 사례 분석

본 해외 사례 분석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유네스코(UNESCO)의 교육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OECD 회원국은 총 39개국이며, 그중 이스라엘과 튀르키예를 포함하여 총 29개의 유럽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로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한국과 일본 등 총 4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또한 남북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멕시코 등 총 6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안정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각종 사회문화적, 교육적 인프라가 건실하게 정착된 선진국이다. 따라서 OECD에서 발간한 각종 교육자료를 참고하면 회원국들의 과밀학급 현황이나 향후 2050년까지의 교육은 어떻게 계획하고 전망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유네스코는 유엔(UN)의 산하 기구로서 주요 임무는 유엔 회원국 및 세계의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International Science Program), 청년지원(Youth) 등이 있다.’³³⁾ 그밖에도 세계문화유산 보호, 문화적

32) 충남 도내 초중등학교에서 급식시간을 조정하는 곳은 총 11곳이다. 천안 8개 학교, 아산 2개 학교, 당진 1개 학교인데, 그 가운데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은 천안 불당신도시의 초등학교이다.

33) 출처: OECD 2030: 미래 교육과 역량,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the OECD education 2030 Project, OECD, 2015.

다양성 존중, 윤리교육 및 모두를 위한 정보 공유 사업 등의 임무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기로 하겠다. 유네스코에서는 현재와 2050년도까지 미래의 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과밀학급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 OECD 사례 연구: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 OECD 사례에는 과밀학급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그럼에도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통계자료는 있는데,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4.6명이고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0.3명임.
- OECD 39개 회원국 가운데, 인구 4천만 명 이상의 국가들(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멕시코 9개국)만 놓고 보면,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9.3명으로 올라감. 이는 한국의 경우보다 많은 수치임.
- 한국 초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1명이며, 중학교는 13.3명, 고등학교는 10.7명으로 나타나 있음.
- 교육지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뒷면 부록에 수록된 2023년 OECD 교육지표를 참고바람.(교육 부 보도자료)

교사 1인당 학생 수

(단위 : 명)

기준 연도	구분	교사 1인당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일반계	직업계
2021년	한국 (변화)	16.1 △0.5	13.3 0.3	10.7 △0.6	11.3 △0.6	8.5 △1.0
	OECD 평균	14.6	13.2	13.3	13.6	15.0
2019년	한국	16.6	13.0	11.4	11.8	9.5
	OECD 평균	14.5	13.1	13.0	13.0	13.4
2018년	한국	16.5	13.5	12.2	12.8	10.3
	OECD 평균	14.6	13.0	13.0	12.8	13.3

※ 교사 1인당 학생 수 = 전일제 환산치 학생 수 / 전일제 환산치 교사 수

※ 교사 1인당 학생 수 : '교사'는 기간제 포함 수업교사(주 업무가 수업이 아닌 교사 제외, 휴직교사 포함)

※ 교사 1인당 학생 수 : OECD 기준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학생과 교사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는 특수학교 교사의 학교급을 구분하기 어려워 특수학교의 학생 및 교사가 포함되지 않음. 단,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교사의 교육단계는 구분 가능하여 해당 교사 및 학생은 포함

※ 교사 1인당 학생 수 : 우리나라는 전일제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OECD는 전일제·비전일제 모두를 포함

※ 교사 1인당 학생수 지표는 격년으로 발표되어 「OECD 교육지표 2022」에 포함되지 않아 2020년 자료 미표시

표4. 교사 1인당 학생 수 한국 vs. OECD 평균³⁴⁾

■ OECD 사례 연구: 2030년 미래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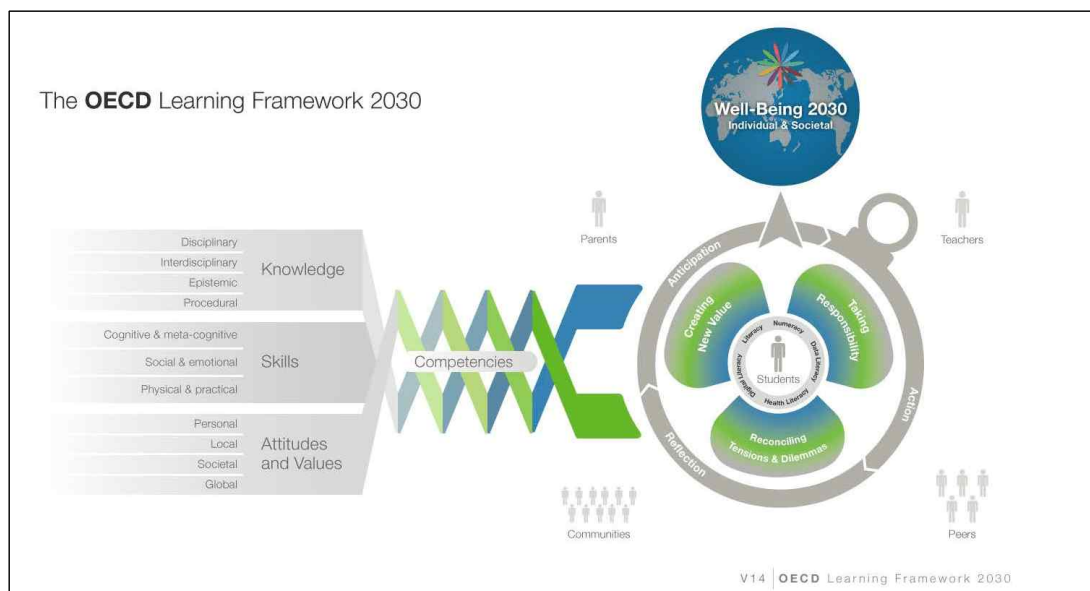


그림 27. 2030 OECD 학습 프레임워크³⁵⁾

34) 출처: <https://if-blog.tistory.com/14465>, 교육부 공식 블로그, 2023.

- OECD에서 출간된 『OECD 2030: 미래 교육과 역량』(『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the OECD education 2030 Project』)에 담긴 내용을 검토했을 때, 위 그림 21. 2030 OECD 학습 프레임워크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내용의 핵심은 가치 중심적이고 수학, 과학, 미래 직업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 역량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음.³⁵⁾
- OECD는 유네스코와 달리 아직까지 2050년도까지의 미래 교육 전망 및 방향성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는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이에 OECD는 2030 미래교육 프로젝트로 대신함.
- OECD의 미래교육 프로젝트는 주로 거시적인 가치를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과밀학급 해소와 같은 현장 중심적이며 미시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 그림에도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 당 학생 수에 대한 실무적 통계가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유네스코 사례 연구: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 유네스코의 경우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교육 차별 금지 협약” 비준 검토 및 과제 분석』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출간하였음.³⁷⁾

35) 출처: OECD ‘교육 2030: 미래 교육과 역량’, OECD, 2015.

36) 출처: OECD ‘교육 2030: 미래 교육과 역량’, OECD, 2015.

37) 출처: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교육 차별 금지 협약’ 비준 검토 및 과제 분석, 김용, 한국교원대학교산학협력단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2.

- 위의 연구 보고서에서 과밀학급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음
- 유네스코의 과밀학급 해결방안에서는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과밀학급 해소 계획도 함께 수록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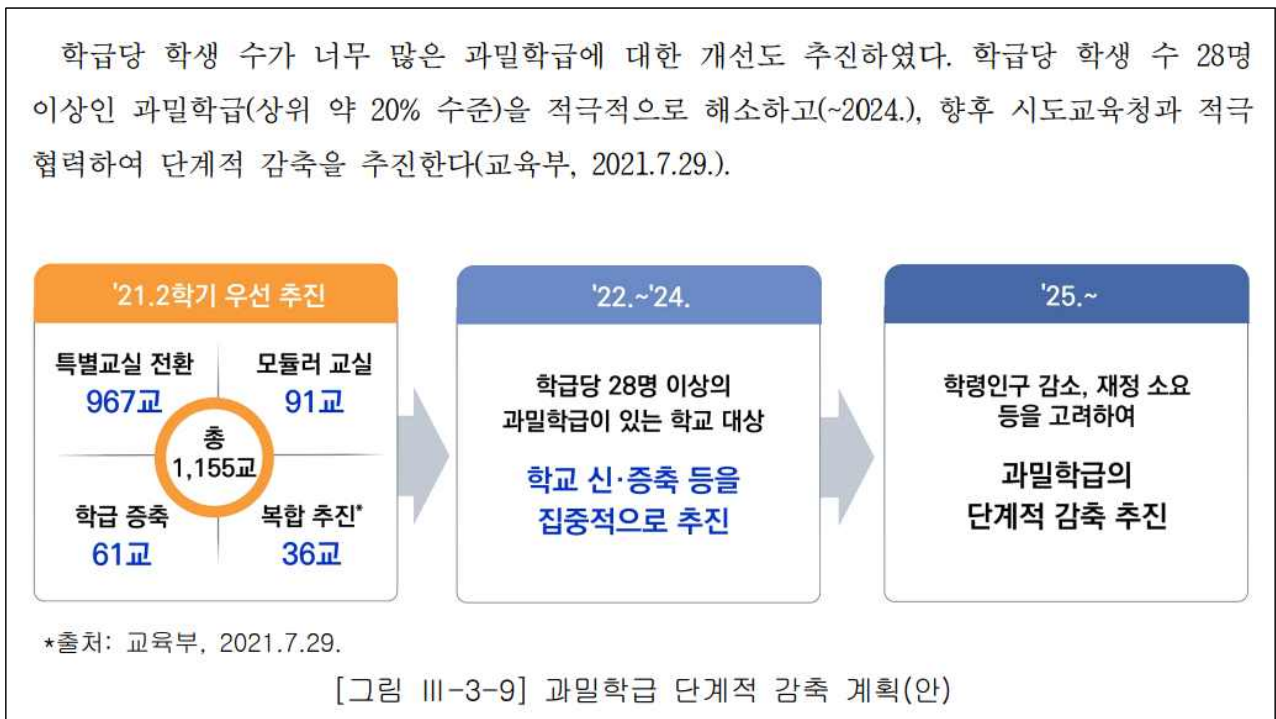


그림 28. 유네스코 연구보고서에 실린 한국 과밀학급 해소방안³⁸⁾

38) 출처: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교육 차별 금지 협약' 비준 검토 및 과제 분석, 김용, 한국교원대학교산학협력단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2.

특수학교의 신설은 부지확보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중증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청마다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중증 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고 특수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함으로써 중증 장애학생의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그 결과 2016년까지 170개였던 특수학교가 2021년 현재 187개로 6년 동안 매년 3~4개 학교가 늘었으며 2022년까지 196개교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이다(교육부, 2017a). 그 결과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16년 25,467명이 21년 27,027명으로 1,500명 가량 증가하였다(교육부 2016, 2021).

<표 III-7-1>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수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특수학교 수	170	173	175	177	182	187
특수학교 학생 수	25,467	25,798	25,919	26,084	26,299	27,027
특수학급 수	10,065	10,325	10,676	11,105	11,661	12,042
특수학급재학생 수	46,645	47,564	48,848	50,812	52,744	54,266

*출처: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임.

표 5. 유네스코 연구보고서에 실린 한국 특수학교 과밀학급 해소방안³⁹⁾

■ 유네스코 사례 연구: 2050년 유네스코 미래 교육 연구보고서

- 유네스코에서 출간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내용을 검토해 보면, 본 보고서는 “함께”, “우리”와 같이 교육적 차원에서 인류가 다 함께 공동으로 추구해 나아가야 할 사회계약적 가치로서의 2050년도 미래 교육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음
- 특히 총 177쪽으로 구성된 유네스코의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을 총 160회, 인공지능(AI)을 총 13회 언급하며, 교육테크의 눈부신 발전, 자동화, 산업구조 조정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고용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음.
- 2050년 인류의 미래 교육은 디지털과 인공지능에 기반한 고도화된 교육테크의

39) 출처: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교육 차별 금지 협약’ 비준 검토 및 과제 분석, 김용, 한국교원대학교산학협력단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2.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디지털 혁명, 디지털 기술,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격차,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프로세스, 디지털리티(digitality: 디지털 문화에서의 생활 조건), 디지털 역량, 디지털 생태계,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교육혁명을 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디지털 기술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디지털 연결을 통해 서로 언제든지 복합적으로 연결되고, 또한 전 세계의 정보와 문서자료, 예술 형식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켜 나가며,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들은 영상을 만들고, 다양한 미디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작하고, 게임과 앱을 코딩해 자신들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세상 속에 드러내게 된다.
- 학교 환경 또한 교육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어 새로운 하이브리드 형태의 학교나 가상현실로만 구현되는 학교 모델이 출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 2050년 인류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환경 속에서 서로 초연결됨과 동시에, 공간 안에서의 차이에 주목하는 교육학적 차별화 (Pedagogical differentiation)와 학습자를 공적·집단적 공간과 관계들로부터 탈맥락화하고 제거하는 초개인맞춤형 학습(Hyper-personalized learning)이 이루어져 교육학적 관점에서 학생 간 개별적 또는 개인적 차이와 함께 보다 큰 종합적 상호 이해가 함께 가치적 공존을 이루는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은 교육적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닌,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교육적 과정을 ‘데이터 세트(data set)’로 파편화시키고, 관리주의와 감시, 교직의 탈전문화 (de-professionalization) 추세를 가속화 시키는 역기능도 존재할 수 있음 경고하고 있음

- 특히 안면인식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국가가 정치적 감시의 목적으로 학생과 교사를 모니터링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이는 교육의 목표를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의 증진으로 승인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제 26조를 위배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이 보고서에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총 86회, 자유라는 단어가 총 35회 언급되는데, 이것은 인류의 미래교육이 결국은 인권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인간의 창의성과 도덕성, 판단력, 행동의 규범을 건전하게 조성해 나가는 자유의지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임
- 무엇보다 본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교육으로 총 2,250번이 언급되는데, 교사(총 406번 언급)와 학생(총 267번 언급)은 이러한 인공지능 및 디지털 환경 속에서 더욱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며, 학생들은 공감과 존중의 인간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유네스코에서 출간한 본 보고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OECD의 미래교육 2030보다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며, 동시에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교육환경에 보편적으로 활용될 것임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음. 학생들은 각자가 가진 개인적 차이를 고려한 초개인 중심학습이 가능해지며, 그와 함께 상호 공감과 존중의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유네스코의 미래교육 전망과 방향성을 현재 충남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 현상과 연관시켜 본다면,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발달은 앞으로 27년 이후인 2050년 이내에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현재와

같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교실이 많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유네스코가 제시한 2050년 미래교육은 IT기술, 디지털화, 인공지능, 로봇, 가상 현실 기술이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으며, 이는 과밀학급의 해소 방안에 매우 큰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미래의 학교는 현재와 같은 물리적 교실이 디지털 가상현실 공간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따라서 많은 교실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고하고 있음. 현재에도 우리의 교육환경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고민하고 더 나은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토목건설, 법제도, 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들여다보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학교들이 학생 수가 부족하여 줄줄이 폐교되고 있다는 현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폐교된 학교에 남겨진 수많은 교실은 지극히 일부만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공실 상태로 방치되어 노후화되고 허물어지고 있음.
- 현재 당장은 어려우나, 유네스코의 미래교육 전망의 내용을 검토해 본다면, 약 20~30년 이내에 IT기술, 디지털화, 인공지능, 로봇 등과 같은 공학적 기술이 고도화되면 이러한 기술이 비 교실 환경 속에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술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므로, 현재는 막대한 예산투입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교실을 새로 증축하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건물을 임대 활용하거나, 모듈러 교실을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법,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 별도의 신설학교를 설립하는 것 보다는 자연녹지인 근린공원의 일부를 교육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미 신도시로 개발되어 토지가격이 상당히 오른 지역에 추가적으로 신설 학교를 짓기 위하여 학교부지를 매입하고 그곳에 새로운

학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불필요하며, 엄청난 재정적 부담으로 세금을 소비하는 상당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이미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2050년도 천안의 학령인구도 현재보다 약 2~3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부록에 유네스코에서 발행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표지와 핵심내용을 발췌하여 수록함

III. 충남 과밀학급 해소 방안

지금까지 충남 과밀학급 발생 원인을 파악해 보았다. 충남에서 과밀학급이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해소 방안이 필요한 지역은 천안의 불당동에 위치한 불당초, 불무초, 아름초와 백석동의 환서초가 있다. 현재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는 충남의 여타 지역과는 다르게, 이 지역의 과밀학급 발생원인은 경기도 김포, 용인, 수원, 오산과 사실상 동일하다.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이 세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발생은 1~6학년 전 학년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외 충남의 여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 현상은 일시적이며, 위 세 학교와 다르게 학교 전 학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아닌, 한 학년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도 전년도 과밀학급 통계 집계 시기와 그것보다 몇 개월 늦은 차년도 새 학기 즈음에 발생하는 전출입 학생 통계 집계의 시간적 차이로 인하여 단지 행정적 수치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서, 전년도에는 충남의 일부 초등학교에서 과밀학급이 발생했다는 통계 결과가 산출되어 행정적으로는 과밀학급으로 집계 및 보고되었으나, 그 다음연도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과밀학급이 발생했던 학교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가는 바람에 사실은 과밀학급이 해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단지 일시적이거나 행정적인 집계의 시간 차이로 발생하는 과밀학급이 아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밀학급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충남 천안의 불당초, 불무초, 아름초, 환서초를 중심으로 충남 과밀학급 발생에 대한 해소 방안 및 정책을 검토하고 제언하고자 한다.

1. 도시계획 차원

▣ 과밀학급 발생 주요 원인

- 개발 초기의 법률적,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하여 2000년대 후반에 시작된 불당신도시와 백석지구 개발 당시에 향후 유입될 인구 전망에 착오가 발생함
-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인허가와 관련된 법률적, 제도적 미비점은 이는 향후에 중앙정부적 차원에서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개정되기 이전의 제도하에 인허가를 취득한 건설업체들은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을 시행 및 분양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과밀학급의 문제점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해결방안

- 지역적 차원: 불당동과 백석동에 위치한 불당초, 불무초, 아름초, 환서초 인근의 근린공원과 같은 공공자연녹지의 일부에 모듈러 교실과 같은 임시 학교시설을 구축하여 학생을 분산 배치함
- 불당신도시에 위치한 불당초, 불무초 및 아름초의 경우에는 현재의 학교 부지 이내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그 과정에서 모듈러 교실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모듈러 교실 시설의 선택 및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의사결정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부모와 학교 당국이 서로 조화롭게 합의하에 최종 결정을 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천안 불당신도시의 경우는 불무초 인근에 근린공원이 자리잡고 있으며, 해당 근린공원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음. 해당 공원의 전체 면적은 45,604.6m² (약 13,819평)로 자연녹지 건폐율은 20%이므로, 9120.92m² (2,763.8평)가 건축 부지로 활용이 가능함.



그림 29. 천안불당신도시 내부 불무초 인근의 근린공원 부지

2. 교육적 차원

1) 충남 과밀학급이 발생시키고 있는 문제점 분석

▣ 교사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행사의 어려움으로 교육의 질 저하 우려

○ 초등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가 충남의 2023년 3월까지 1,124명에 달했으나, 4월 30일에는 대기자가 0명에 이르러 다행히

100% 해소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천안 신도시 지역은 향후 돌봄교실 대기자가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음. 어린 아이를 자녀로 둔 맞벌이 하는 젊은 학부모의 경우는 직장 출퇴근을 위해서 돌봄교실이 꼭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지난 3~4월간 시도교육청별 대기수요 변화(교육부, '23.4.30. 기준) >											
교육청	3.3일	4.30일		교육청	3.3일	4.30일		교육청	3.3일	4.30일	
	대기	대기	해소율		대기	대기	해소율		대기	대기	해소율
경기	6,914	5,572	19%	경북	583	35	94%	대구	173	28	84%
경남	1,281	928	28%	제주	515	180	65%	대전	85	0	100%
강원	1,278	918	28%	광주	467	189	60%	인천	64	54	16%
충남	1,124	0	100%	전북	433	44	90%	울산	41	0	100%
충북	960	345	64%	전남	367	167	54%	세종	0	0	-
부산	696	0	100%	서울	296	180	39%	계	15,277	8,640	43%

표 6. 2023년 3~4월간 시도교육청별 돌봄교실 대기수요 변화⁴⁰⁾

- 수용 가능 학생 수에 비해서 재학생 수가 월등히 초과하는 천안 불당신도시와 백석지구의 환서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습공간이 부족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음악실이나 과학실 및 각종 예체능 활동을 위한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적 학업성취도 및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부정적인 평균 결과치가 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 과밀학급 발생으로 인한 보건 위생의 우려

- 교내 학생 식당의 수용인원 수가 재학생 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을 경우, 매일 학생들이 번갈아서 2~3시간에 걸쳐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는

40) 출처: 교육부,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돌봄학교 정책 운영방향', 2023.

교육뿐만 아니라 위생 보건의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제기됨.
특히 식중독이나 기타 유행성 질환이 만연하게 되면, 좁은 공간을 시간 차를
두지 못하고 연이어 번갈아서 사용하게 된다면, 수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질병에 감염될 우려도 상존함.

3. 법규 및 조례

1) 학교 용지 확보 특례 지정 내용 및 학교시설 관련 법규 분석

▣ 국회 및 경기도의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법 분석 및 개정 건의 현황

- 학교용지 확보 특례 지정: 경기도는 전국 과밀학급의 약 50%가 분포하는
광역시자치체임. 2021년 국정감사 자료⁴¹⁾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 과밀학급은
43,439개인데, 이 가운데서 경기도에 17,481학급이 소재하여 전국 과밀학급의
43.2%를 차지하였음. 경기도 내 소재 총 2,468개 학교 가운데 총 1,116개교가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학교이다. 이는 경기도 소재 전체 학교의 45% 이상에 해
당함.
- 이에 경기도는 학교 증개축 및 수선 부담 해소를 위한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를 추진하기로 함
- 2023년 10월 30일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현재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음. 발의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핵심을 과밀학급
해소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음.⁴²⁾

41) 출처: 교육부 ‘2020년 학급당 학생 수 구간별 학급 수 현황’, 2021.

42) 출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의원 외 11인 공동발의, 발의 연월일 2023.10.30.

주요 내용: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대규모 도심 개발 추세가 맞물리면서, 비도심·구도심 지역의 학생 규모는 급격히 감소하고, 특정 지역의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존의 학교 공간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캠퍼스형 학교 구상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체계상 학교시설 용도로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의 학교 설립·이전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하여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의4제4항제2호 및 제6조제2항 등).

■ 현행 학교용지 특례법 및 그 시행령 활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

- 이와는 별도로, 현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학교용지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학교용지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현재의 특례법과 시행령으로도 필요시 추가적인 교지 확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학교용지법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고 명시되어 있음
- 이와 관련된 학교용지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학교용지법 시행령)

[시행 2023. 1. 31.] [대통령령 제33240호, 2023. 1.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조(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 ①교육감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3.>

1. 각급학교가 공공의 운동장 또는 종합체육시설에 인접하여 그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소규모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8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 학교용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와 인접하여 공원녹지를 체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 중 체육장 기준면적을 완화하거나 체육장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23.> [전문개정 2005. 12. 14.]

상기의 학교용지법 시행령 제 7조 2항에 의하면, “학교용지가 공원녹지와 인접하여 공원녹지를 체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학교의 체육장 기준면적을 완화하거나 체육장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학교용지를 확보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물론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 시점이,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또한 ‘공원녹지와 인접한 학교는 공원녹지를 체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럴 때는 학교용지에서 체육장 면적을 축소 또는 아예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음. 만약 시민공원과 인접한 신규 학교가 설립 당시에 체육장(운동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필요시 공원녹지를 체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체육장을 갖추고 설립된 이후라 하더라도, 과밀학급이 발생한다면, 교내 운동장을 활용하여 교실을 추가 확보하고, 공원녹지의 일부를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사료됨.

2) 충청남도교육청 과밀학급 및 학교 용지 확보 관련 조례 분석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리고 “학교복합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제5조(기능) 학교복합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2. 방과 후 학교·초등 돌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3.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4. 구도심,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6.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따라서, 일례로 천안불당신도시에 신규 설립된 불무초에 인접한 공원녹지의 일부를 학교 운동장으로 활용하거나, 학교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의 상생 및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사료됨.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후면에 수록된 부록 참조).

IV. 천안 불당신도시 및 백석지구 과밀학급 해소 추진 전략

1. 거시적 연대적 추진 전략

1) 관련 법규 제개정 및 기존 법령 해석을 통한 시행 근거 마련

- 우선, 국회 관련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검토중에 있으며,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시도교육청은 필요시 추가적인 교육 용지 또는 기존의 민간시설을 구매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현행 학교용지 특례법 및 관련 시행령에 대한 법령적 검토 및 재해석을 통하여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지역의 근린공원이나 자연녹지 및 그밖의 유휴 공공용지를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갈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과밀학급 발생이 가장 심각한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수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였음. 이 모임의 국회의원들은 신도시개발에 따른 과밀 학급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과밀학급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결의함

2)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연대의식에 기반한 공동체 구축 및 실천

-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 모임’에서 국회에 제안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 발의: 안민석 의원)은 1. 국가교육발전 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목표 수립, 2.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수립 및 고시 3.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 조사 및 점검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하기고

이를 유지 상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로 감소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함.

- 충남의 경우에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구형서 의원이 주도하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을 초 4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연구모임의 구성원들은 충남도와 천안시 의원, 과밀학급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학부모 대표), 교육청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로 이루어져, 이론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현실적인 구체적인 정책 방향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공동체적인 자세로서 보다 명확한 해소 방안들이 제시되어 나갈 수 있었음.
- 무엇보다, 과밀학급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 일부 시설 및 인근 공공시설 또는 용지를 지역과의 조화로운 상생 발전과 소통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교육, 평생교육, 예체능 교양시설, 체육장으로 함께 활용 할 수 있는 보다 개방적인 접근 태도가 필요함
- 과밀학급 해소는 지역의 정치인, 충남도 및 해당 기초지자체 공무원 관계자, 학계 전문가, 학부모 및 교육부 관계자가 서로 효과적인 소통을 통하여 꾸준히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과 이에 대한 결실이 필요함

2. 충남 자체적인 정책 기획 및 시행의 필요성

- 충남 북부지역의 과밀학급 발생 요인과 매우 닮아 있는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 자체적인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최근 제시하였음. 2023년 11월 29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발표한 ‘2024년도 학생 배치 계획’에 의하면 경기도 교육청은 과밀학급 개선을 위해 2024년도 경기도 내 초중등 학생의 학급당 학생 수를 1~2명 감축시키기로 함.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10월에 ‘과밀학급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었는데, 해당 학생배치계획은 그러한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임.

- 충남교육청도 2023년 10월에 충남 도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자체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산업화 기반 시설이 밀집된 천안, 아산 지역의 과밀학급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함.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학령 인구 추이, 공동주택 개발 등 여러 변화를 촘촘히 살펴 학교 신증설을 적기에 추진하고 과밀해소 및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에 필수 요인인 교원 증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표명함

3. 글로벌 사회에서 과밀학급의 흐름 및 미·일·독·영·프 등 주요 국가의 과밀학급 대응 방안

■ 글로벌 사회에서 경제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학령인구 변화 추이(1950~2100년)

최근에 들어와 대한민국 사회는 과밀학급, 과대학교, 과소학급, 과소학교 등과 같이 학령인구의 변화로 인하여 학급당 학생수의 변화를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는 과소학급과 과소학교의 차원을 넘어서 폐교 또는 통폐합을 경험하고 있으며, 산업화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은 과밀학급과 과대학교가 발생시키는 여러 문제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과 충남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충남이나 대한민국만이 겪고 있지만은 않다. 최근 발표한 세계의 학령인구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세계 인구 가운데 학령인구는 2050년까지 증가하다가, 이를 정점으로 다시 서서히 감소하여 2100년에 이르면 2020년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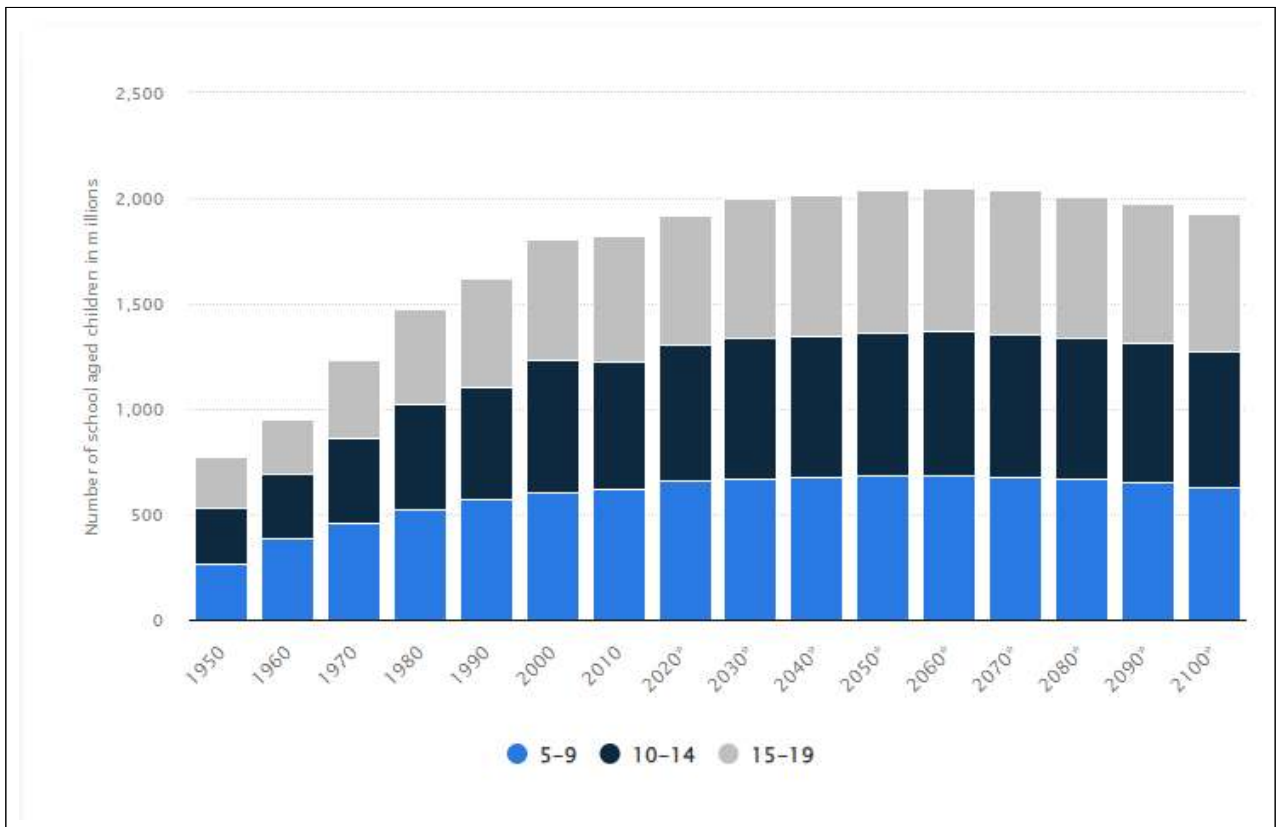


그림 30. 세계 학령인구 증감 추이 (1950년~2100년 기간)⁴³⁾

2020년 현재 세계 학령인구는 약 18억 명에 달한다. 이것은 2050년에 이르면 약 20억 명까지 증가하여, 2070년대에 이르기까지 20억 명 선을 유지하다가, 2070년대부터 서서히 감소하여 2100년에 이르면 2020년과 동일한 18억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산업화의 시기를 맞는 196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난 약 70년간 경험해 왔던 인구변화 현상이 현재의 신흥국과 중진국, 저개발국에까지 확산되어 이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경험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지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글로벌 사회에서 경제 및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아직은 신흥산업국이나 중진국, 또는 저개발국의 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개발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학령인구의 감소는 약 50년 이내에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회적 법규와 질서가 안정화되고, 시민들의 소득향상과 더불어 정주 환경이 적

43) 출처: statista.com

절하게 갖추어졌으며,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이 가능한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그대신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현재 충남 북부 또는 경기도와 같이 산업화가 고도화되고 이에 따라 지역민들의 소득이 상승하며,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과밀학급과 과대학교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 사실상 이러한 현상은 이미 우리 대한민국보다 먼저 산업화되고 선진사회로 진입한 미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은 국가들에서 먼저 발생하였다.

이러한 선진 국가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밀학급, 과대학교, 과소학급, 과소학교와 같이 상호 역설적이면서도 사회문화적 가치와 의미의 관점에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이미 지속적으로 경험해 왔으며,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와같이 상호 모순되고 역설적인 현상이 동시대에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학령인구 변화 및 과밀학급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대응 방법

○ 일본의 학령인구 변화 및 과밀학급에 대한 시선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20년 기준 초등학생 숫자는 1,090만 명이며, 중등학생 숫자는 398만 명이다.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학령인구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약 100만 명의 학령인구가 추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후쿠시마현의 오쿠마에서는 이미 지난 10년 동안 99%의 학령인구가 감소하였다. 이것은 2011년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로 인하여 발생한 불가피한 조치였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형의 재난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에 근접한 학령인구의 감소가 있었다. 지난 10년(2010~2019)동안, 나라현의 카미키타야마에서는 학령인구의 81%가

감소하였으며, 군마현의 남모쿠에서는 65%, 나가노현의 오타키에서는 64%가 감소하였다.

그런데, 도쿄도와 오사카부, 아이치현 및 후쿠오카현과 같이 산업경제가 발달한 237개의 도시 또는 권역에서는 학령인구(초중등 학생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과 충남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구가 고령화되고 자연 감소하고 있으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도시의 학령인구는 선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⁴⁴⁾

이러한 학령인구의 전체적 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도시에서는 학령인구 증가의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 정부의 대책은 두 가지로 축약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과소학급 및 과소학교의 통폐합이고, 두 번째는 학급당 학생 수를 평균 35명(실제 학급 당 학생수 범위: 33명~45명)으로 유지하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명 선에서 유지하고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1명이 더 많은 것이다.

일본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이면서, 또한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국가에 속한다. 일본 정부는 학급 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과 현행 평균 35명 선으로 유지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도나 학급의 보건위생 환경 개선에 있어서 뚜렷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거나 이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은 그동안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OECD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 또한 과밀학급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로 사료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표면적인 변화는 아직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미국의 과밀학급에 대한 시선 및 적극적인 대응

미국과 같은 경우는,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서유럽 국가들과 같이, 초중등

44) 출처: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2/07/19/national/school-students-decrease/>

교육 정책에 대한 수립 및 결정 권한의 무게 중심이 각 주의 교육 당국에 있다. 사실상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중등 교육 정책은 기본적으로 각 주정부의 관할이다. 그러므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연방정부가 법안을 수립하거나 이를 위한 행정제도를 구성한 것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 대신 주 정부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뉴욕주에서 2007년에 제정된 「우수교육계약법(Contract for Excellence / C4E)」과 같은 법령이다.⁴⁵⁾ 여기서 계약은 전문 용어인 Contract를 번역한 것인데, 이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정에 따라서 안 지켜도 되는 약속 또는 그런 종류의 내용이 아닌, 법률적 책임이 따르는 준수해야만 하는 강제성이 수반된 계약을 의미한다.

특히 본 “우수교육계약법”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뉴욕주 초중등학교에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뉴욕주의 “우수교육계약법”에 의하면 1개 학급당 적정 학생 숫자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은 19.9명, 초중등학교 4~8학년은 22.9명, 중등학교 9~12학년은 24.5명이다. 이법을 시행한 2007년부터 약 5년 동안 뉴욕주는 약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천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교사의 추가 임용을 위해서 72개 교에 약 1,800만 달러를 지원했다.⁴⁶⁾

미국은 우리나라 및 일본과 다르게 학령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민자의 나라답게 꾸준하게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 미국의 학령인구 추이다.

45) 출처: <https://www.p12.nysed.gov/mgtserv/C4E/22-23home.html>

46)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8486632557864&mediaCodeNo=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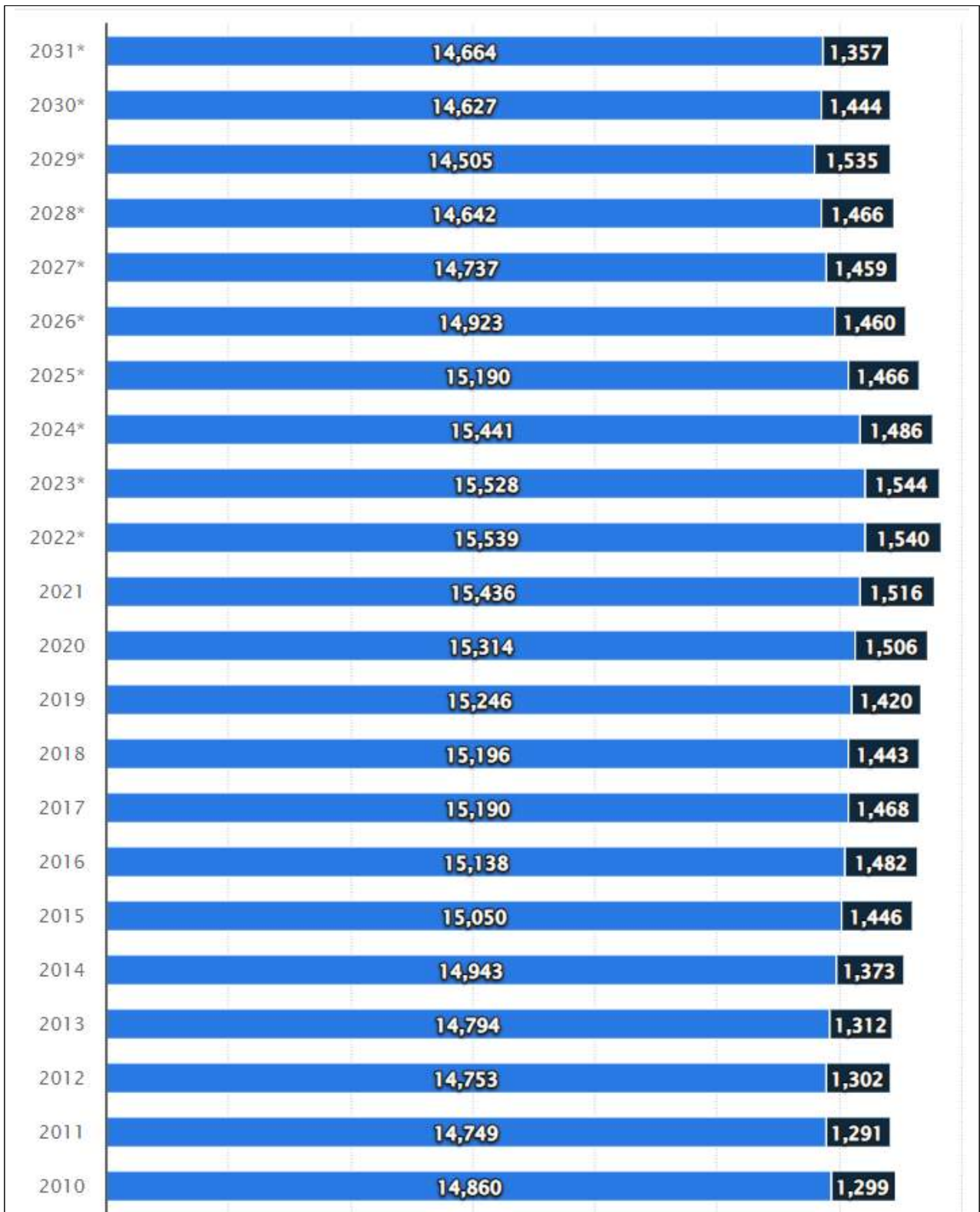


그림 31. 미국 고교학생수 변화 추이(파란색: 공립고, 검은색: 사립고)⁴⁷⁾

만약 추가적인 이민이 허용되어 더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에 정착하게 되면, 학령

47) 출처: statista.com

인구의 증가추세는 지속될 수도 있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던 뉴욕주의 경우는 특히 주도인 뉴욕시에 엄청난 과밀학급 발생으로 현재 충남 천안시 또는 경기도의 산업도시가 겪고 있는 것과 유사한 문제점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림 32.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뉴욕시 초등학교 교사들⁴⁸⁾

위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팻말을 들고 있는데, 그 내용이 “OUR KIDS NEED SMALLER CLASS SIZES. (우리 학생들은 더 작은 규모의 교실이 필요합니다.)”라고 적혀있다. 물가와 생활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뉴욕시⁴⁹⁾의 경우는 빈부의 격차 또한 심하여, 고급주택가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중저소득층이 밀집한 구역에 있는 학교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를 영어로 “high-need school⁵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법률적 용어로서, 정의하자면 “재정과 복지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의미한다. 특히 연방정부에서도 미국 각 지역의

48) 출처:

<https://www.cityandstateny.com/politics/2023/11/report-more-300k-nyc-students-are-overcrowded-classrooms/392220/>

49) 출처: <https://www.cnn.com/2023/08/22/us-cities-with-the-highest-cost-of-living.html>

50) 출처: <https://definitions.uslegal.com/h/high-need-school/>

high-need school을 “Title 1 school”이라는 명칭으로 지정하여, 이를 위한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뉴욕시에는 high-need school이자 title 1 school에 지정된 초등학교가 665개가 있는데, 그중 최소한 50%가 넘는 학교에서 과밀학급, 과대학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약 30만 명의 학생들이 과밀학급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⁵¹⁾

■ 미국의 인구 전망 및 학령인구의 가파른 증가(2010~2050년도)

이민자의 국가인 미국은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다. 미국도 2022년 현재 인구의 17%가 65세 이상으로 점점 초고령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STEM 중심의 이민 정책을 통해서 수학과 과학 및 공학 분야의 고급 두뇌 및 젊은 인구 중심의 이민 정책을 대단히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이러한 젊은 이민자들의 자녀 세대인 학령인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 약 5천 만명의 학령인구가 80년 뒤인 2100년에는 약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1) 출처:

<https://www.cityandstateny.com/politics/2023/11/report-more-300k-nyc-students-are-overcrowded-classrooms/392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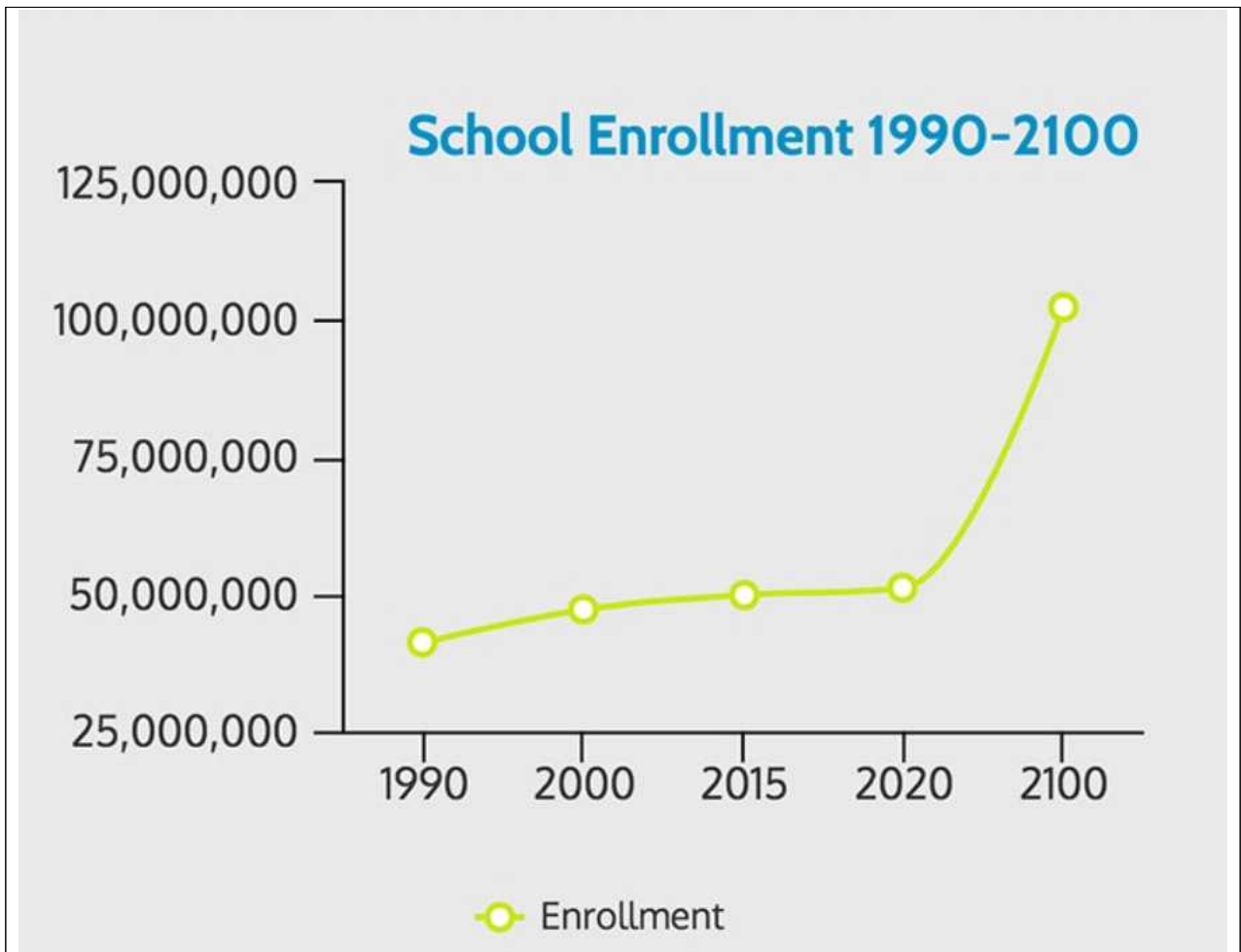


그림 33. 미국 K-12(유치원, 초중등) 학령인구 증가 추이⁵²⁾

사실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미국도 2050년도에 이르면 전 인구의 22%가 65세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52) 출처: <https://gensteel.com/resources/infographics/steel-buildings-solve-school-overcrow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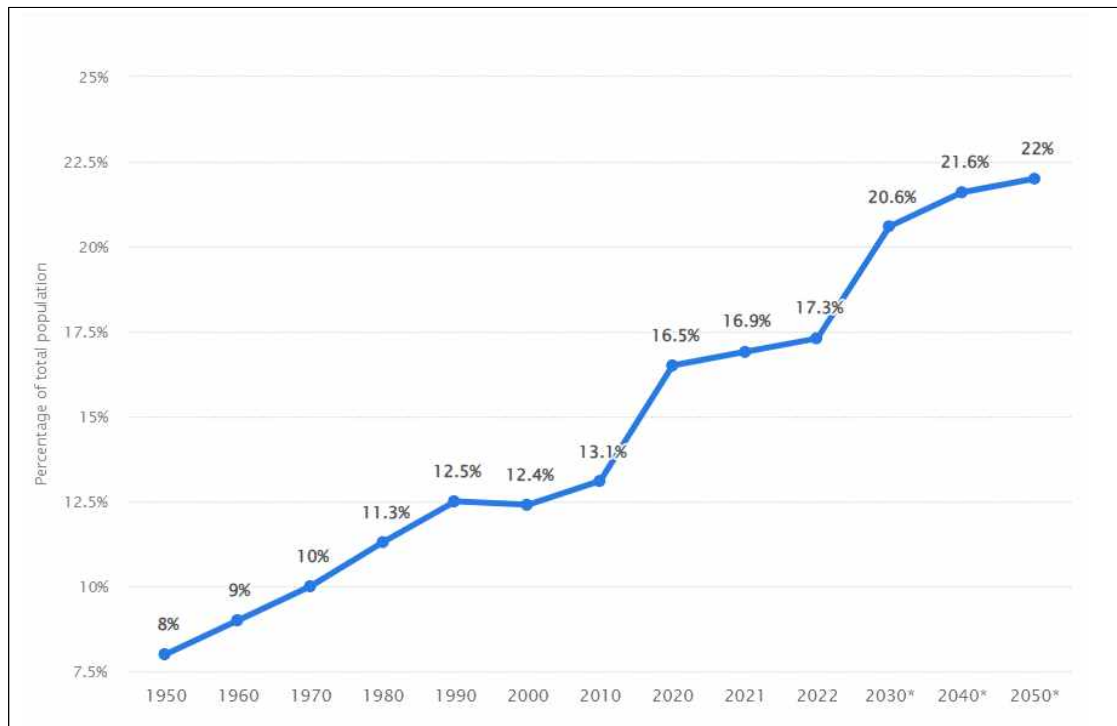


그림 34. 미국의 전체인구 대비 초고령 인구 증가 전망(1950~2050) 그래프

그런데도 2050년까지 미국의 인구는 2023년 현재 약 3억 3천만 명에서 4억 명 ~ 4억 7천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도 고령화 인구가 계속 증가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전체 인구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학령인구와 젊은 인구 또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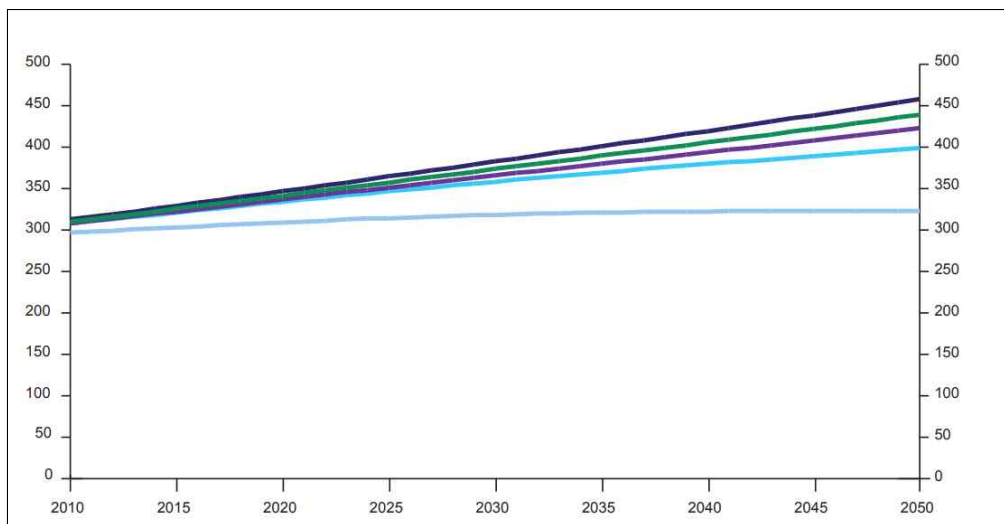


그림 35. 미국의 2010~2050년도까지 인구 증가 전망 그래프⁵³⁾

53) 출처: United States Population Projections: 2000 to 2050. Jennifer M. Ortman and Christine E. Guarneri. <http://census.gov> (미국 인구조사국). 미국의 인구는 2050년도까지 모든 연령에 걸쳐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학령인구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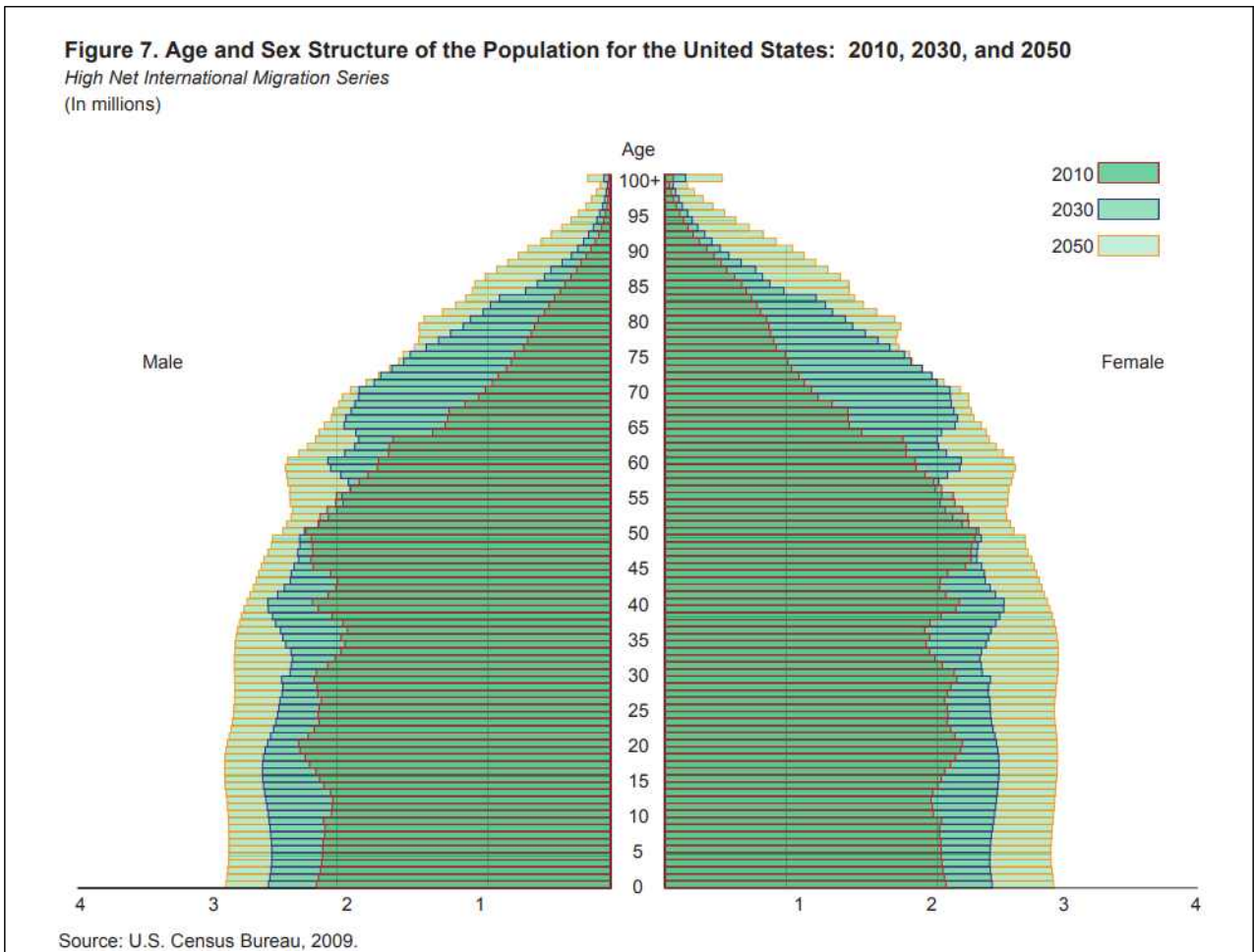


그림 36. 미국의 2010년, 2030년, 2050년 인구 증가 추이⁵⁴⁾

■ 미국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 ①관련 법규 제·개정, ②재정지원, ③통합학교 (Combined School) 운영

2023년 현재 미국 전역에는 98,755개의 공립학교가 있으며, 32,461개의 사립 학교가 분포하고 있다. 미국은 유치원부터 초·중·등 교육 학제가 50개 각각의 주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유치원 및 초·중·등학제는 각 주정부가 중심으로 관할하며, 연방정부는 일부 법률 및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주의 교육 당국은 자신의 주에 적합한 초·중·등 교육 제도 및 교육과정을

54) 출처: United States Population Projections: 2000 to 2050. Jennifer M. Ortman and Christine E. Guarneri. <http://census.gov> (미국 인구조사국). 2050년까지 모든 연령대에 걸쳐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특히 학령인구의 가파른 증가를 보여주는 미국의 인구 전망 추이 그래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2020~2012년도 미국 전체 공립 초중등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18.3명이며, 대다수의 공립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는 19명이다. 또한 미국 전체 공립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대부분 15명~23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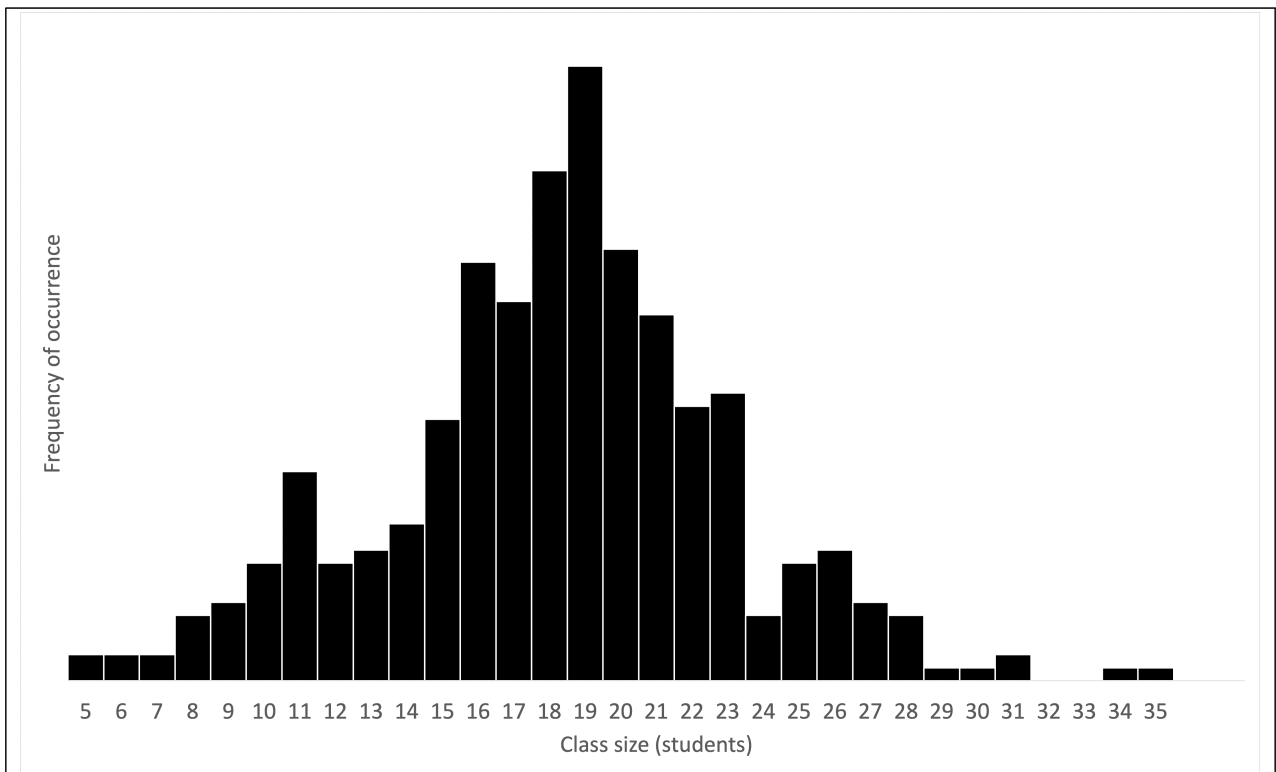


그림 37. 미국 공립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범위(2020~2021)⁵⁵⁾

그런데, 미국의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현재 미국의 전체 초중등학교 가운데 약 25%의 학교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⁵⁶⁾ 그리고 향후 미국의 학령인구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에, 과밀학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보다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이미 우리

55) 출처: <https://seatingchartmaker.app/articles/class-size-statistics/>

56) 출처:

<https://drsheilajohnson.medium.com/impact-of-overcrowding-in-american-schools-on-student-performance-b4603ea97d70>

대한민국에서도 추진 중인 내용이며, 이에 표면적인 큰 차이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가지 매우 두드러진 차이점은 K-12 학제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는 미국의 초중등 교육제도에서, 통합학교(Combined School)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합학교의 정의는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이 한 학교를 다니며 교육을 받는 학교를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이 한 지붕 아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초등 및 중고등학생이 동일한 학교를 다니며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산 배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교 뿐만 아니라 과소학급이나 과소학교를 서로 통합시키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1980~1981년 통계에서 미국 전역에는 1,743개의 통합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통합학교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현재는 6,783개의 학교가 통합학교로 운영되고 있다.⁵⁷⁾

현재 대한민국과 충남은 과밀학급과 과대학교뿐만 아니라 과소학급과 과소학교 발생의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물론 1980년대나 90년대와 같은 과거에도 산업화 및 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와 매우 유사한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당시 과거의 대한민국 사회는 한 해에 약 100만 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여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위 연령이 28~29세의 매우 젊은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3년도 현재의 고령화 및 학령인구 감소, 중위 연령이 약 45세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연령의 양극화, 도시와 시골의 양극화, 과밀학급과 과소학급의 양극화와 같은 문제는 문제점은 더욱 관심있게 바라볼 수 있다.

57) 출처: <https://admissionsly.com/how-many-schools-are-there/>

▣ 유럽의 과밀학급 현황 및 해소 방안

유럽은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만큼 글로벌 산업 및 경제 분야에서 유럽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단히 크며, 특히 독일과 영국, 프랑스는 유럽을 대표하는 경제 산업 분야의 강국이자 기술 선진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다져오고 있다.

특히 독일, 영국, 프랑스는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할 때, 인구 규모나 경제산업 구조가 매우 비슷하며, 국민소득 또한 우리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인구 규모나 구조로만 볼 때는, 이웃 국가인 일본보다도 더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 2021년 현재 독일의 인구는 약 8,300만 명, 영국의 인구는 약 6,730만 명, 프랑스의 인구는 약 6,775만 명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인 약 5,100만 명에 비하면, 독일은 3,200만 명이 더 많고, 영국은 1,630만 명, 프랑스는 1,675만 명이 더 많다. 그런데 만약 남북한의 인구를 합하면, 남한 약 5,100만 명 + 북한 약 2,600만 명으로 총 7,800만 명에 이른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인구 총합계를 놓고 비교했을 때는, 독일보다 약 500만 명 부족하지만, 영국보다 1,070만 명이 더 많고, 프랑스보다 1,025만 명이 더 많은 숫자이다.

인구 구조 및 규모로 볼 때, 대한민국을 유럽의 주요 3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유럽 3개국은 전체인구에서 이민자의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 유럽 3국은 인구 증가세에 있는데, 이는 주로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출신의 이민자들을 기반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원래 그 국가에 대대손손 거주해 온 원주민인 게르만족 독일인이나 앵글로색슨족 영국인, 켈트족 및 게르만족 프랑스인의 숫자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유럽에 과밀학급이 발생하면, 주로 이러한 이민자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게 된다. 2021~2020년 통계를 살펴보면, 독일은 전체 인구 가운데 약 1,370만 명이 이민 1세대이며, 영국은 약 1,040만 명, 프랑스는 전체인구 가운데 약 7백만 명이 이민자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경제 산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

해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외에 서부유럽 및 중부유럽 국가에 많은 이민자들이 몰리고 있다. 다음은 2019년도 21개 유럽 주요 국가들의 학급 당 평균 학생 수에 대한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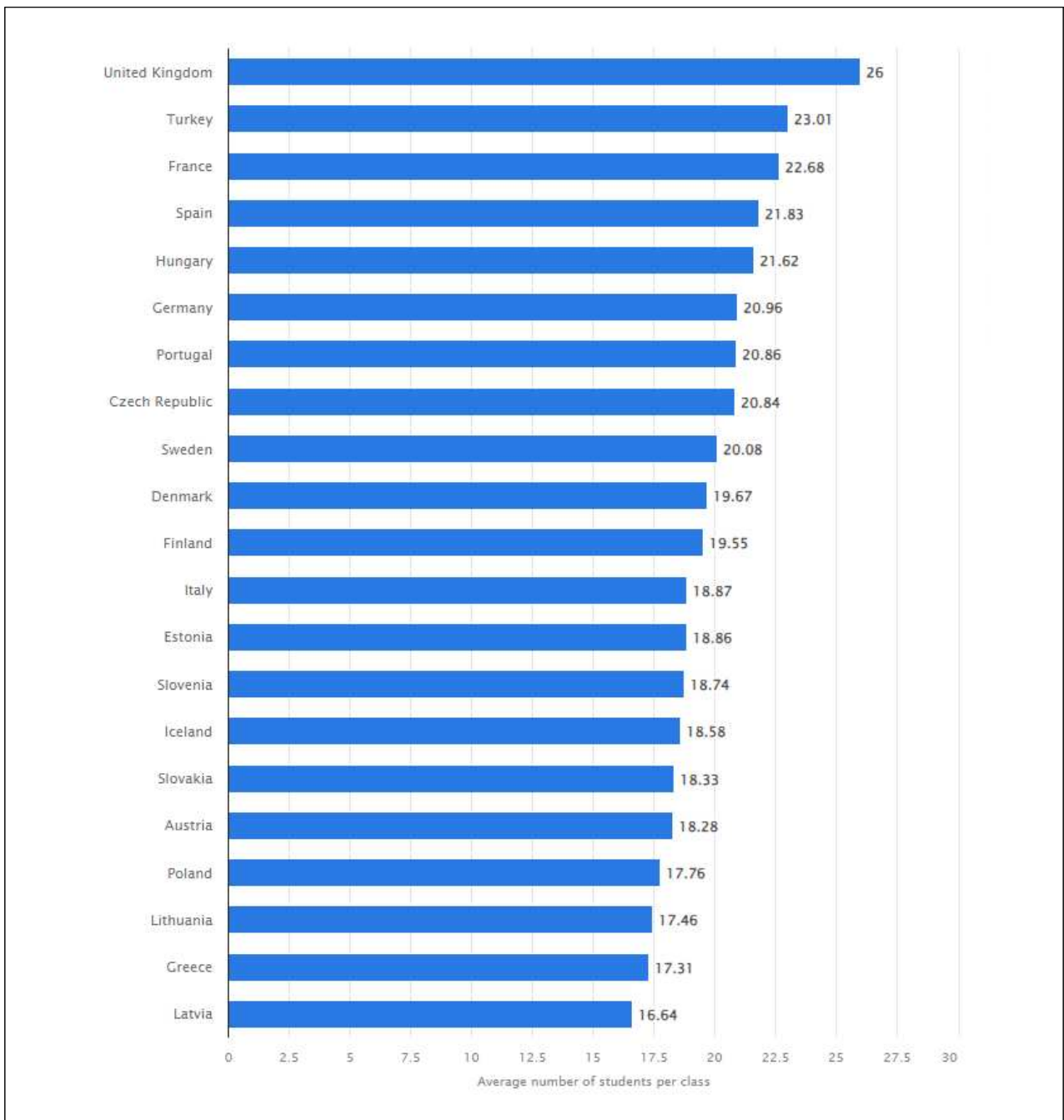


그림 38. 21개 유럽 주요 국가의 평균 학급 당 학생 수⁵⁸⁾

58) 출처: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078190/students-per-class-in-europe/>

영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20개 국가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3명 이하이다. 그러나 평균의 함정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도 25명 이하이다. 왜냐하면, 전국에 분포한 모든 학교의 평균값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평균값만을 보았을 때, 영국을 제외하고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는 2021년 영국 노동당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2021년까지 5년 동안 학급당 학생 수가 31명 이상인 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 수가 약 20,000명 증가하였다. 영국 전역에서 8명의 학생 중에서 1명은 31명 이상의 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다.⁵⁹⁾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영국 정부는 야외 수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부의 교실을 비롯한 여러 공간을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⁶⁰⁾

또한 영국의 통치권역이었던 남아프리카대학교(University of South Africa)에서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교실이나 공간을 확보하거나, 교원을 더 수급하거나,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 이외에도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에서 재직하는 교사들에게 과밀학급 대응을 위한 맞춤형 특별 연수를 시키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출간되었다.

다시 말하면, 과밀학급 해소 방안은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접근만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교사 연수 시 과밀학급에서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법, 학생 및 학부모들과의 보다 원활한 소통, 학교 시설 및 공간 활용방안, 교사와 학생들의 스트레스 줄이기 방법과 같은 과밀학급이 발생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위한 맞춤형 특별 직무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석사학위)가 발간되어 있다.⁶¹⁾

59) 출처:

<https://topicuk.co.uk/primary-schools-ease-overcrowding-with-outdoor-classrooms-and-canopies/>

60) 출처:

<https://topicuk.co.uk/primary-schools-ease-overcrowding-with-outdoor-classrooms-and-canopies/>

61) 출처: Addressing Issues of Overcrowdedness in Eastern Cape Schools. Jacobus P. Coetzee, 1999. University of South Africa.

Section B: The role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e overcrowded schools in dealing with the issues of overcrowdedness in schoo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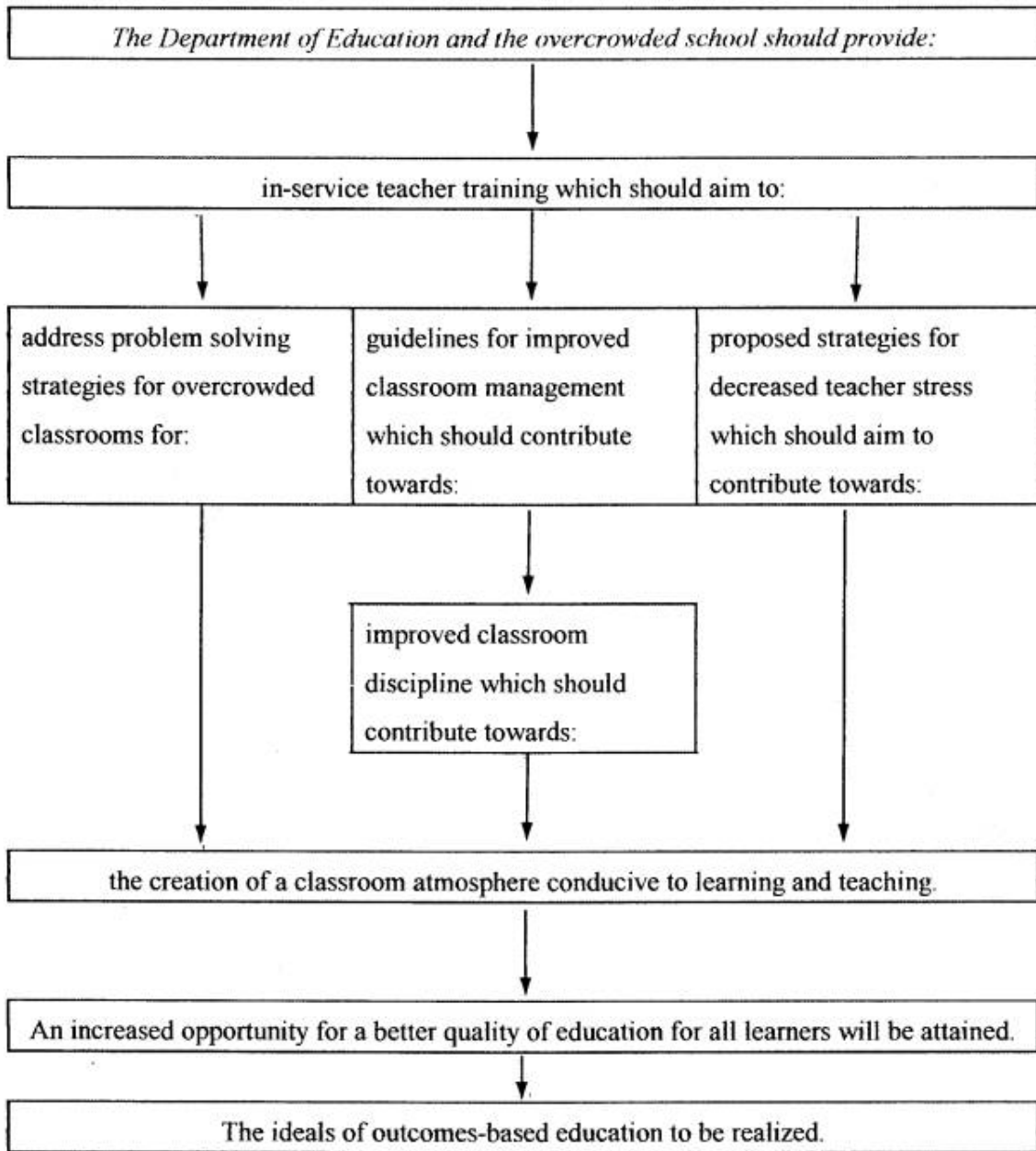


그림 39. 다른 차원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과밀학급 발생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위한 맞춤형 교원직무연수를 강조하는 내용⁶²⁾

62) 출처: Addressing Issues of Overcrowdedness in Eastern Cape Schools. Jacobus P. Coetzee, 1999. University of South Africa.

이와 같이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그렇지 않은 교사들과는 다른 일종의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원 직무연수에서 이러한 종류의 맞춤형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효과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교육 및 학습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내용도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와 비교할 때,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국가이다. 프랑스 교육부 교육통계 조사국의 2022년 자료에 의하면, 독일은 과밀학급 발생 비율이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프랑스도 영국에 비하면, 과밀학급 발생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과밀학급 발생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은 학급 당 학생 수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사전에 지속적으로 관찰 및 통계를 작성하고, 이러한 내용을 언론 및 온라인에 공개함으로써,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교육부와 각 지방 교육청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간구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과 프랑스처럼 과밀학급이나 과소학급 문제에 대한 선제적 관찰 및 관련 통계 자료 작성과 언론과 온라인에 공개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충남 과밀학급의 발생 유형 및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명 진성 과밀학급이다. 이러한 유형은 국가전략산업 또는 국가적 주요산업의 발달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이와 함께 학령인구도 계속 증가하여 발생하게 되는 과밀학급이다. 이러한 진성 과밀학급은 대한민국에서 산업이 가장 발달한 경기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의 경우는 현재 천안 불당신도시와 백석동에 위치한 불당초, 불무초, 아름초, 환서초에서 경기도와 동일한 과밀학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진성 과밀학급 현상은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부터 6학년에 걸쳐서 모든 학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진성 과밀학급의 경우는 도시계획적, 교육적 차원의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일시적 과밀학급 발생 현상으로써, 이것은 첫 번째 유형과는 다르게, 모든 학년에 걸쳐서 나타나지 않는다. 충남의 경우는 대부분 한 학년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일시적 산업수요에 의한 일시적 대량 고용 창출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과밀학급 현상을 보이는 그 학령인구 세대 또한 실제로 많이 일시적으로 유입되었으나, 그 이후 산업수요에 의한 고용 창출이 정체되어 이에 따라서 인구 및 학령인구 유입 또한 정체된 상태이다. 이런 경우는 충남의 아산, 당진, 서산, 논산의 초·중등학교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 기업체의 입주 및 이로 인한 특정한 세대에서 다량의 인구 유입이 있었으나, 그 추세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은 채 정체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인구 유입이 매우 느린 상태에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사실상 아산, 서산, 당진, 논산 지역은 오랫동안 인구가 정체 또는 외부로 유출되어 역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경우는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는 특정한 학년 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교실 확보를 위한 분산 배치 또는 모듈러 교실 임대 계약을 통한 교실의 추가 확보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실은 더 이상 과밀학급이 존

재하지 않으나, 행정적 차원의 과밀학급 기록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학년에서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행정 데이터로 기록된 직후에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바람에 기록은 과밀학급으로 남아 있으나 사실은 더 이상 과밀학급이 아닌 경우이다. 이것은 행정 서류상에 남아 있는 기록에 불과하므로, 만약 필요시 적절한 시기에 행정 서류를 절차에 의해 수정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해소 방안이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다.

천안 불당초, 불무초, 아람초, 환서초를 제외하고, 과밀학급이 발생했다고 보고된 학교들은 모두 위의 두 번째 사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의 사례는 해결 방식이 첫 번째의 경우보다 훨씬 수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분류한 첫 번째 유형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종 국내외 사례 및 교육 보고서를 통하여 도시계획적 차원, 법률적/제도적 차원,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사례, 즉 진성 과밀학급 발생의 사례의 경우는 이러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교육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국내의 주요 산업이 발달한 시도 광역단체들이 몇 가지 공통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첫 번째는 모듈러 교실 활용이다. 모듈러 교실은 임대 가능하며, 학교의 유휴부지에 배치가 가능하여 현재 전국의 여러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충남 천안 백석동 환서초의 경우에도 이미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고 있다. 환서초의 경우는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는 일부 학부모들을 위하여 모듈러 교실 임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만족하는 모듈러 교실을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절차와 과정 및 그 결과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심각한 과밀학급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불당동의 불당초, 불무초와 아람초의 경우에도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수도 있다. 아람초의 경우는 지하에 LNG 가스관이 통과하여 지반이 약하므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충남 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을 받았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모듈러 교실은 주로 별도의 독립된 건물로 학교내 유휴부지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기존의 콘크리트 교실 건물 위에 수직증축 방식으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콘크리트 방식으로 4층의 건물을 올린 상태에서 그 위에 6층 이상의 역할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모듈러 증축을 한다는 것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 제시도 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층에서 6층 이상까지 걸어 올라간다는 것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서울이나 경기도의 여러 학교에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듈러 수직 증축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불당동의 경우에는 그 내부에 몇 개의 근린공원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근린공원들은 불당초, 불무초와 아름초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자연녹지의 일부를 임시적으로 학교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교육 활성화와 공익적 차원에서 활용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법률적 제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 내부에 개발된 공원부지는 10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제도만 강조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이것을 완화하거나 교육특례지구 지정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우회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불당동 내에 조성된 시민공원의 일부를 그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모듈러 교실 설치 부지 또는 학교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불당초, 불무초와 아름초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불당 신도시가 완공된지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이러한 근린공원의 일부를 교육적으로 활용해도 법률적으로 무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작업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매우 진지한 검토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OECD 2030 미래교육 보고서와 유네스코의 2050 미래 교육 전망 보고서 및 이와 관련된 여러 보고서를 검토함으로써, 과밀학급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찾아보고자 시도하였다. 해외에는 과밀학급에 대한 개념 또는 보고가 없으나,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통계자료는 계속 산출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많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2027년이 지나면, 학령인구의 감소 및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OECD 평균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네스코 미래 교육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27년 뒤에 다가올 2050년도의 미래 교육에서는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과 같은 공학적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적 공감대와 소통이 활성화 되는 통합적 교육과 더불어 학생 개인의 학습성취도나 개성의 차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초개인학습을 통한 학력 증진의 극대화가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미래 공학적 기술을 가지고 현재의 물리적인 교실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현재 천안의 경우는 불당동과 백석동과 같은 지역에서 과밀학급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2050년도에 이르면 천안의 학령인구도 2만 명 ~ 3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50년도가 되면 대한민국은 인구의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그런 가운데서 오직 경기도만이 2050년도에 현재 2023년보다 학령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충남을 비롯하여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일제히 학령인구 감소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미 개발을 마치고 토지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신도시 내부에 학교부지를 매입하여 거기에 학교를 신설하고 콘크리트 교실을 건축하는 것은 엄청난 세금을 낭비하는 무책임한 행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충남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8대 방안』

1. 신도시가 이미 개발된 이후에는 해당 신도시 내에 추가적으로 별도의 부지를 매입 후 여기에 신규학교 설립 또는 분교를 신설하는 것을 지양한다.
2. 미국의 K-12 학제 시스템과 같이 한 개의 학교(한 지붕)에서 초중등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혼합학교(Combined Schools)를 운영하여,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학생의 분산 재배치와 과소학급 및 과소학교의 통합 운영에 활용한다.
3. 디지털 스마트 기기에 이미 익숙한 현재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디지털 기기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4. 신도시 내부에 조성된 근린공원, 시민공원 부지의 일부를 교육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적극 활용한다.
5. 모듈러 교실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별도의 독립된 모듈러 교실도 가능하며, 기존 콘크리트 교실 위에 모듈러 교실 수직증축도 검토하고 고려한다.
6. 향후 새로운 신도시개발 프로젝트 수요가 발생할 때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주거용 주택에 대한 철저한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도시개발 및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7. 새로운 신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수립할 때에는 기존의 신도시 건설 시 종종 발생했던 유입 인구가 당초 예상치보다 초과할 때를 대비하고, 과밀학급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시 언제든지 공원부지를 일시적으로 교육용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면 해당 부지는 원칙적으로 다시 공원으로 환원한다.
8. 향후 닥치게 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과밀학급 및 과소학급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언론 및 온라인을 통하여 공개한다.

현재 충남 천안시 불당동과 백석동 일원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은 경기도 오산, 김포, 용인, 수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의 유형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차이점은 경기도를 제외하고, 2050년도까지 전국의 모든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이다. 천안 또한 여기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미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 2~3만 명의 학령인구가 천안에서도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설 학교를 설립하거나 분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예산의 불필요한 과다 지출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유네스코에서 전망하는 바와 같이 2050년도까지 디지털,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과 같은 각종 공학적 기술이 고도화되어 이를 기반으로 생산된 교육도구들의 활용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현재 콘크리트로 건설된 물리적 학교 또는 교실 환경은 활용도가 갈수록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티지털 트윈(Digital Twin) 및 AI On Device와 같은 기술이 폭넓게 상용화되면 인류는 가상현실 공간 속에서 학교와 도서관, 영화관, 백화점 이용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장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충남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8대 방안』을 바탕으로 불필요하고 과다한 예산투입이 발생하지 않고, 최대한 효과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급이 발생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위한 맞춤형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수단만을 가지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려는 태도를 지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과밀학급이 발생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생 및 학부모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안과 이를 기반으로 교육 및 학습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

부

붙임 1
최근 5년 간 (2019~2023) 과밀학교(학급) 현황

(기준: 매년 3.5.자 학교현황, 단위: 교, 급, 명, %)

구분	연도	학교현황				과밀현황			
		학교수	일반 학급수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과밀 학교	비중	과밀 학급	비중
초	2019	420	5,634	122,492	21.7	103	24.5%	1,381	24.5%
	2020	421	5,565	119,776	21.5	95	22.6%	1,393	25.0%
	2021	422	5,619	118,719	21.1	69	16.4%	960	17.1%
	2022	421	5,811	118,771	20.4	52	12.4%	570	9.8%
	2023	421	5,854	116,144	19.8	20	4.8%	257	4.4%
중	2019	188	2,080	56,050	26.9	87	46.3%	1,297	62.4%
	2020	186	2,103	57,498	27.3	85	45.7%	1,398	66.5%
	2021	186	2,159	59,439	27.5	83	44.6%	1,409	65.3%
	2022	186	2,213	59,964	27.1	81	43.5%	1,385	62.6%
	2023	186	2,259	59,564	26.4	76	40.9%	1,258	55.7%
고	2019	117	2,322	60,515	26.1	43	36.8%	938	40.4%
	2020	117	2,302	57,673	25.1	34	29.1%	784	34.1%
	2021	117	2,295	56,728	24.7	30	25.6%	743	32.4%
	2022	117	2,288	56,165	24.5	30	25.6%	741	32.4%
	2023	118	2,313	57,445	24.8	36	30.5%	826	35.7%
계	2019	725	10,036	239,057	23.8	233	32.1%	3,616	36.0%
	2020	724	9,970	234,947	23.6	214	29.6%	3,575	35.9%
	2021	725	10,073	234,886	23.3	182	25.1%	3,112	30.9%
	2022	724	10,312	234,900	22.8	163	22.5%	2,696	26.1%
	2023	725	10,426	233,153	22.4	132	18.2%	2,341	22.5%

학급당
학생
수

초

중

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1.7

21.5

21.1

20.4

19.8

26.9

27.3

27.5

27.1

26.4

26.1

25.1

24.7

24.5

24.8

과밀
학교

초

중

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3

95

69

52

20

87

85

83

81

76

43

34

30

30

36

과밀
학급

초

중

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381

1,393

960

570

257

1,297

1,398

1,409

1,385

1,258

938

784

743

741

826

붙임 2

시·군별 과밀학교(학급) 세부 현황

(기준: 2023.3.5.자 학교현황, 단위: 교, 급, 명, %)

구분	지역	학교현황				과밀현황			
		학교수	학급수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과밀 학교	비중	과밀 학급	비중
초	천안	79	1,761	40,614	23.1	9	11.4%	205	11.6%
	공주	28	251	3,791	15.1	2	7.1%	10	4.0%
	보령	31	264	3,916	14.8	-	0.0%	-	0.0%
	아산	48	1,047	23,784	22.7	4	8.3%	16	1.5%
	서산	30	478	10,120	21.2	1	3.3%	4	0.8%
	논산	31	291	4,869	16.7	2	6.5%	11	3.8%
	계룡	5	127	2,784	21.9	-	0.0%	-	0.0%
	당진	32	491	10,294	21.0	-	0.0%	-	0.0%
	금산	17	131	1,718	13.1	-	0.0%	-	0.0%
	부여	24	179	1,962	11.0	-	0.0%	-	0.0%
	서천	18	135	1,525	11.3	-	0.0%	-	0.0%
	청양	12	80	818	10.2	-	0.0%	-	0.0%
	홍성	21	262	5,152	19.7	2	9.5%	11	4.2%
	예산	24	196	2,750	14.0	-	0.0%	-	0.0%
	태안	21	161	2,047	12.7	-	0.0%	-	0.0%
	계	421	5,854	116,144	19.8	20	4.8%	257	4.4%
중	천안	31	684	19,989	29.2	22	71.0%	539	78.8%
	공주	14	96	2,099	21.9	3	21.4%	27	28.1%
	보령	12	94	2,191	23.3	1	8.3%	15	16.0%
	아산	20	420	11,677	27.8	13	65.0%	282	67.1%
	서산	16	197	5,106	25.9	8	50.0%	100	50.8%
	논산	14	110	2,581	23.5	6	42.9%	36	32.7%
	계룡	3	63	1,801	28.6	3	100.0%	40	63.5%
	당진	14	184	4,969	27.0	6	42.9%	107	58.2%
	금산	8	48	1,106	23.0	3	37.5%	18	37.5%
	부여	11	57	1,163	20.4	2	18.2%	13	22.8%
	서천	9	45	863	19.2	1	11.1%	3	6.7%
	청양	5	27	499	18.5	-	0.0%	-	0.0%
	홍성	10	99	2,531	25.6	4	40.0%	50	50.5%
	예산	11	84	1,865	22.2	2	18.2%	15	17.9%
	태안	8	51	1,124	22.0	2	25.0%	13	25.5%
	계	186	2,259	59,564	26.4	76	40.9%	1,258	55.7%

구분	지역	학교현황				과밀현황			
		학교수	학급수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과밀 학교	비중	과밀 학급	비중
고	천안	23	677	19,334	28.6	15	65.2%	405	59.8%
	공주	10	170	3,389	19.9	-	0.0%	-	0.0%
	보령	6	90	1,791	19.9	-	0.0%	-	0.0%
	아산	11	327	9,846	30.1	9	81.8%	270	82.6%
	서산	8	165	4,214	25.5	5	62.5%	51	30.9%
	논산	13	197	3,699	18.8	1	7.7%	2	1.0%
	계룡	2	51	1,435	28.1	2	100.0%	34	66.7%
	당진	8	152	3,937	25.9	4	50.0%	64	42.1%
	금산	4	48	973	20.3	-	0.0%	-	0.0%
	부여	5	61	1,087	17.8	-	0.0%	-	0.0%
	서천	7	66	1,233	18.7	-	0.0%	-	0.0%
	청양	2	30	563	18.8	-	0.0%	-	0.0%
	홍성	8	114	2,528	22.2	-	0.0%	-	0.0%
	예산	7	109	2,334	21.4	-	0.0%	-	0.0%
	태안	4	56	1,082	19.3	-	0.0%	-	0.0%
	계	118	2,313	57,445	24.8	36	30.5%	826	35.7%
합계	천안	133	3,122	79,937	25.6	46	34.6%	1,149	36.8%
	공주	52	517	9,279	17.9	5	9.6%	37	7.2%
	보령	49	448	7,898	17.6	1	2.0%	15	3.3%
	아산	79	1,794	45,307	25.3	26	32.9%	568	31.7%
	서산	54	840	19,440	23.1	14	25.9%	155	18.5%
	논산	58	598	11,149	18.6	9	15.5%	49	8.2%
	계룡	10	241	6,020	25.0	5	50.0%	74	30.7%
	당진	54	827	19,200	23.2	10	18.5%	171	20.7%
	금산	29	227	3,797	16.7	3	10.3%	18	7.9%
	부여	40	297	4,212	14.2	2	5.0%	13	4.4%
	서천	34	246	3,621	14.7	1	2.9%	3	1.2%
	청양	19	137	1,880	13.7	-	0.0%	-	0.0%
	홍성	39	475	10,211	21.5	6	15.4%	61	12.8%
	예산	42	389	6,949	17.9	2	4.8%	15	3.9%
	태안	33	268	4,253	15.9	2	6.1%	13	4.9%
	계	725	10,426	233,153	22.4	132	18.2%	2,341	22.5%

붙임 3
2019~2026 초 · 중 · 고등학교 신설 (예정) 현황

구분	개교 시기	지역	학교명	설립규모(급, 명)		신설사유
				학급(특)	학생	
개교 완료 (11교)	2019.3.	아산	아산공수초	46(1)	1,283	아산공수지구개발
		예산	덕산고(신설대체이전)	27(3)	741	내포신도시개발
	2020.3.	천안	천안희망초	40(1)	1,244	신부,두정동지구개발
	2020.9.	천안	천안호수초	34(1)	912	아산배방지구개발
	2021.3	당진	대덕초	38(1)	1,001	대덕수청지구개발
	2022.3	아산	한들물빛초	62(1)	1,672	아산탕정지구개발
			한들물빛중	28(1)	757	아산탕정지구개발
	2023.3.	천안	천안가람초	46(1)	1,352	천안성성지구개발
			천안능수초	40(1)	1,089	천안청당지구개발
		아산	아산세교초	40(2)	1,034	아산탕정지구개발
			이순신고	39(3)	1,101	아산탕정지구개발
설립 확정 (18교)	2023.9.	아산	아산갈산초	55(1)	1,435	아산탕정지구개발
	2024.3.	아산	(가칭)산동초	58(3)	1,490	아산일반산단개발
			(가칭)아산온샘중	36(2)	903	아산탕정지구개발
		당진	(가칭)중앙초	41(1)	1,047	당진수청2지구개발
			(가칭)수청중	31(1)	905	당진수청지구등개발
		홍성	홍북초(신설대체이전)	40(1)	1,038	충남내포신도시개발
	2024.9.	아산	신창중(신설대체이전)	47(3)	1,121	신창면남성리개발
	2025.3..	천안	(가칭)천안성성2중	42(3)	1,092	천안성성2지구개발
		아산	(가칭)아산월천초	39(2)	896	배방월천지구개발
			(가칭)아산모종중	46(2)	1,185	모종샛들지구개발
			(가칭)아산세교중	40(2)	1,027	아산탕정지구개발
			(가칭)북아산고	25(1)	775	원거리통학·과밀해소
		당진	(가칭)당진혜성초	52(2)	1,298	당진수청1지구개발
		계룡	(가칭)대실초	32(1)	714	계룡대실지구개발
		홍성	(가칭)홍성주촌중	42(1)	1,093	충남내포신도시개발
	2026.3.	아산	(가칭)아산천우물초	45(1)	1,210	신창면남성리개발
			(가칭)아산애현초	36(2)	847	아산탕정지구개발
		홍성	홍주초(신설대체이전)	44(2)	1,038	충남내포신도시개발

* 단순이전 · 통폐합 제외

붙임 4

시·도별 학급당 학생 수

(기준: 2022 교육통계, 단위: 교, 급, 명)

시·도	초등학교 (충남 상위14번째)				중학교 (충남 상위4번째)				고등학교 (충남 상위4번째)			
	학교	학급*	학생	급당인원	학교	학급	학생	급당인원	학교	학급	학생	급당인원
OECD**				21.1				23.3				
전국	6,163	119,803	2,664,278	22.2	3,258	51,352	1,348,428	26.3	2,373	53,873	1,262,348	23.4
서울	609	17,563	393,565	22.4	390	8,187	205,387	25.1	320	8,782	207,388	23.6
부산	304	6,755	154,858	22.9	170	2,917	74,941	25.7	142	3,340	70,161	21.0
대구	233	5,217	121,485	23.3	125	2,508	61,975	24.7	94	2,625	59,373	22.6
인천	260	6,680	155,906	23.3	142	2,855	78,827	27.6	127	3,063	71,760	23.4
광주	155	3,848	83,929	21.8	92	1,736	43,586	25.1	68	1,702	41,693	24.5
대전	149	3,666	76,960	21.0	89	1,565	40,303	25.8	62	1,775	39,153	22.1
울산	121	2,936	66,450	22.6	64	1,254	32,966	26.3	57	1,274	29,557	23.2
세종	52	1,519	32,230	21.2	27	619	14,809	23.9	21	491	11,484	23.4
경기	1,320	31,055	767,346	24.7	653	13,006	380,345	29.2	486	13,465	340,895	25.3
강원	349	4,036	71,530	17.7	161	1,559	37,922	24.3	115	1,705	36,821	21.6
충북	256	4,084	83,827	20.5	128	1,721	42,601	24.8	82	1,633	39,112	24.0
충남	411	5,835	118,228	20.3	185	2,218	59,883	27.0	117	2,289	56,081	24.5
전북	421	4,901	91,290	18.6	211	2,050	49,084	23.9	133	2,208	48,265	21.9
전남	426	4,999	90,238	18.1	250	1,987	46,826	23.6	144	2,208	44,913	20.3
경북	473	6,201	127,385	20.5	261	2,821	63,810	22.6	185	3,003	62,986	21.0
경남	510	8,691	187,423	21.6	265	3,607	95,037	26.3	190	3,621	84,613	23.4
제주	114	1,817	41,628	22.9	45	742	20,126	27.1	30	689	18,093	26.3

* 특수학급 제외

** OECD평균: 2019년 기준, 2021 발표자료(OECD 교육지표 2021)

붙임 5

시 · 도별 과밀학급 현황

(기준: 2022 교육통계, 단위: 급, %)

시·도	초 (충남 상위5번째)			중 (충남 상위2번째)			고 (충남 상위2번째)			계 (충남 상위3번째)		
	전체	과밀	비율	전체	과밀	비율	전체	과밀	비율	전체	과밀	비율
전국	126,014	12,574	10.0%	53,914	22,078	41.0%	55,781	10,112	18.1%	235,709	44,764	19.0%
서울	18,367	1,971	10.7%	8,499	2,094	24.6%	9,046	1,527	16.9%	35,912	5,592	15.6%
부산	7,105	529	7.4%	3,045	749	24.6%	3,433	272	7.9%	13,583	1,550	11.4%
대구	5,479	578	10.5%	2,600	638	24.5%	2,692	305	11.3%	10,771	1,521	14.1%
인천	7,065	493	7.0%	2,995	1,630	54.4%	3,172	705	22.2%	13,232	2,828	21.4%
광주	4,009	134	3.3%	1,803	312	17.3%	1,748	392	22.4%	7,560	838	11.1%
대전	3,811	176	4.6%	1,648	575	34.9%	1,836	243	13.2%	7,295	994	13.6%
울산	3,100	42	1.4%	1,321	456	34.5%	1,323	161	12.2%	5,744	659	11.5%
세종	1,587	9	0.6%	643	-	-	505	6	1.2%	2,735	15	0.5%
경기	32,692	5,759	17.6%	13,711	9,194	67.1%	13,991	3,705	26.5%	60,394	18,658	30.9%
강원	4,204	54	1.3%	1,640	620	37.8%	1,764	145	8.2%	7,608	819	10.8%
충북	4,326	242	5.6%	1,827	586	32.1%	1,711	357	20.9%	7,864	1,185	15.1%
충남	6,223	572	9.2%	2,373	1,375	57.9%	2,402	764	31.8%	10,998	2,711	24.6%
전북	5,157	141	2.7%	2,143	746	34.8%	2,269	303	13.4%	9,569	1,190	12.4%
전남	5,317	320	6.0%	2,123	798	37.6%	2,299	29	1.3%	9,739	1,147	11.8%
경북	6,518	593	9.1%	2,958	138	4.7%	3,111	85	2.7%	12,587	816	6.5%
경남	9,169	678	7.4%	3,811	1,753	46.0%	3,767	801	21.3%	16,747	3,232	19.3%
제주	1,885	283	15.0%	774	414	53.5%	712	312	43.8%	3,371	1,009	29.9%

* 전체학급수에는 특수학급 포함

I. 충남 기업분포 일반 현황

1 조직 및 인력

(단위 : 명)

구 분		계	1급	2~3급	4~6급	공무직
정 원		24	1	6	14	4
현 원	계	19	-	5	10	3
	기업성장지원팀	7	-	3	4	-
	사업지원팀	5	-	1	4	-
	글로벌지역혁신팀	6	-	1	2	3

2 관할구역 현황 및 업종분포



구 분	관할구역
충남 (7개시·군)	- 천안시, 아산시 (디스플레이, 기계, 자동차) - 서산시, 당진시 (철강, 금속) -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기타 경공업)

(‘21년 기준 충남지역 중소 제조업, 단위 : 개사, 명, %)

구 분	중소기업 수	비 율	종사자 수	비 율
기 계	4,365	23.7	62,255	31.5
금 속	2,656	14.4	30,930	15.6
전 기	833	4.5	10,493	5.3
전 자	981	5.3	14,334	7.2
섬 유	662	3.6	4,475	2.3
화 공	1,732	9.4	27,962	14.1
식 료	4,197	22.8	24,964	12.6
잡 화	2,986	16.2	22,318	11.3
합 계	18,412	100.0	197,731	100.0

Ⅱ. 충남지역 경제 산업 동향

□ 지역 특징

- 충남은 삼성SDI(축전기), 삼성전자(반도체), 삼성디스플레이(OLED 등), 현대차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업체 집적화

i) **(기업분포)** 전국의 4.0% 비중(충남 294천개 / 전국 7,286천개, '20년)

ii) **(GRDP)** 전국의 5.9% 비중(전국 시·도 중 3위, 115조원 '20년)

* 생산액 및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제조업 비중이 높아 지역성장 견인

** 3차산업 비중도 꾸준한 증가 (1차산업 3.96%, 2차산업 63.54%, 3차산업 32.50% 비중)

iii) **(무역규모)** 전국의 10.8% 비중 (전국 3위, 1,060조\$ / 9,801조\$, '20년)

*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 둔화, 글로벌 교역감소 속에서도 → 비대면 수요 확대 등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 신산업 분야가 수출회복 견인

** 중소기업 수출비중 증가(%) : ('18) 5.6% → ('19) 6.1% → ('20) 6.6%

□ 산업 한계점

-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지역경제 급격한 변화 ⇨ 뉴노멀 2.0시대, 비대면 경제 전환 대응 필요

i) **(차세대 디스플레이)** 대기업 中心 생태계 ⇨ 中企 中心 전략 육성

* 대기업 중심 산업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어, 기술 전환시 중소벤처기업의 사업 전환 한계

ii) **(친환경자동차부품)** 내연기관 ⇨ 친환경자동차 모빌리티 전환

* 강소연구개발 특구, 규제자유 특구 확대를 통한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확장 유도 필요

iii) **(바이오식품)** 소기업 中心, 판로애로 ⇨ 스마트 휴먼 바이오 전환

※ **충남도 대응 방향** ⇨ 강소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소부장특화단지 조성

▶ 한국판 뉴딜,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 트렌드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진행 중 → “중소벤처기업 기획의 땅”

▶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20.7), 미래 바이오 산업 등 유망신산업 발굴·사업화(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 '20~'24, 261억원),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 전초기지 구축(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21~'25, 500억원) 등 추진

[참 고] 충남지역 경제 현황

□ 일반현황

구 분	전 국	충 남	비율(%)
인 구(만명)('21)	5,173	217	4.2
면 적(km²)('21)	100,431	8,262	8.2
GRDP(조원)('20)	1,944	115	5.9
무역수지(억불)('20)	449	531	118.3
총수출(억불)('21)	6,444	1,041	16.2
총수입(억불)('21)	6,150	372	6.1
경제활동인구(천명)('21)	28,278	1,189	4.2
고용률(%)('21.12)	60.4	61.6	1.2%p ↑
실업률(%)('21.12)	3.5	1.7	1.8%p ↓
중소기업수(천개)('20)	7,286	294	4.0
제조업(천개)('20)	585	24	4.1
도·소매(천개)('20)	1,785	67	3.7

□ 중소기업 현황('20) (단위 : 천개, %)

지 역	업체수	비율	지역	업체수	비율
천안시	85	29.5	논산시	18	6.3
아산시	40	13.9	금산군	9	3.2
당진시	23	7.9	보령시	15	5.3
서산시	22	7.8	서천군	8	2.8
공주시	15	5.3	부여군	8	2.9
예산군	11	3.8	청양군	4	1.5
홍성군	14	4.9	계룡시	3	1.1
태안군	11	3.8	계	294	100

□ 상장기업 수('22.3Q) (단위 : 개, %)

구 분	전 국	충 남	중진공 지원기업
KOSPI	825	26(3.2%)	5(19.2%)
KOSDAQ	1,602	71(4.5%)	37(54.4%)
KONEX	125	3(2.3%)	3(100.0%)
계	2,552	97(3.9%)	45(46.4%)

□ 창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단위 : 개, %)

구 분	전 국	충 남	비 율
창업보육센터('21)	263	15	5.7
대 학('21)	336	21	6.3
벤처기업('21.12)	38,319	1,247	3.3
이노비즈('21.12)	20,205	892	4.4
기업부설연구소('21)	44,060	1,487	3.4

□ 산업단지 현황('22.3Q) (단위 : 개, %)

구 분	전 국	충 남	비 율
국가산업단지	47	5	10.6
일반산업단지	703	65	9.2
농공단지	476	93	19.5
도시첨단지구	38	3	7.8
계	1,264	166	13.1

□ 사회적경제기업 등('21) (단위 : 개, %)

구 분	전 국	충 남	비 율
사회적경제기업	6,534	287	4.4
사회적기업	3,215	126	3.9
(일반, 사회적)협동조합	22,270	999	4.5
계	32,019	1,412	4.4

※ 통계로 본 충남경제의 특징

- 충남도 內 천안·아산권 집중화(49.4% 비중) 심화 (* 중진공 지원비중 71% 집중)
- 인구, 중소기업체 비중(전국의 4%) 대비 ⇨ 산업단지 등 인프라 과다(약 13%)
- 39세 이하 청년창업수요 감소 ('22년 청창사 경쟁률 : 전국 4.06:1, 충남 2.31:1)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10. 3.(월) 18:00 (지 면) 2022. 10. 3.(월) 18:00	배포 일시	2022. 9. 30.(금) 15:00
담당 부서 <총괄>	교육안전정보국 교육데이터과	책임자	과 장 안수미 (044-203-6325)
		담당자	사무관 한승우 (044-203-63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2」 결과 발표

주요 내용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3,819로 OECD 평균 상회
 - 초등 \$13,341, 중등 \$17,078로 각 6%, 14% 증가했으며, OECD 평균 상회
 - 고등 \$11,287로 0.02% 감소했으며, OECD 평균 하회
- 청년층(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3%로 OECD 국가 중 1위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2022년 10월 3일(월) 11:00(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2」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 OECD는 「OECD 교육지표」를 통해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매년 제공하여, 회원국들이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OECD 교육지표 2022」 개요

- (추진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1996.12.18., 조약 제1358호)
- (조사대상) 45개국(OECD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7개국)
- (조사내용) 학생·교원 등 관련 현황, 교육재정, 교육 참여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 ※ 일부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 \$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 (조사기준연도) 교육재정(2019년), 교육 참여·성과 등(2020~2021년)
- (참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통계청 등
- (결과공개) OECD 누리집(<http://oecd.org>), 12월중 「OECD 교육지표(EAG: Education at a Glance) 2022」 번역본 발간

□ 「OECD 교육지표 2022」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사, 학습환경 및 학교조직

◆ 국·공립 초임교사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고,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음

① 국·공립학교 교사의 법정 급여

- 2021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았고,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국·공립학교 교사의 법정 급여 >

(단위 : \$(PPP))

기준 연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임	15년차	초임	15년차	초임	15년차
2021년	한국	34,123	60,185	34,185	60,247	34,185	60,247
	OECD 평균	36,099	49,245	37,466	51,246	39,020	53,268

※ 사적소비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 (2021년) 967.40원/\$

※ 구매력평가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 동일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특정 통화로 환산하여 표현하는 '상대가격비율'

② 초·중등교사의 수업 주수·일수

- 2021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유사하며,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업일수(190일)

< 초·중등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일수 >

(단위 : 주, 일)

기준 연도	구분	연간 총 수업 주수				연간 총 법정 수업일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직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직업)
2021년	한국	38	38	38	38	190	190	190	190
	OECD 평균	38	38	37	38	184	183	182	185

② 교육에 투자된 재정

-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3,819로 OECD 평균 상회
 - 초등 \$13,341, 중등 \$17,078로 각 6%, 14% 증가했으며, OECD 평균 상회
 - 고등 \$11,287로 0.02% 감소했으며, OECD 평균 하회
- ◆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3%로 OECD 평균 상회

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2019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3,819로 2018년 보다 7%(\$905)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 (정부재원 + 민간재원 + 해외재원 공교육비) / 재적학생(재학생+휴학생 등) 수 } / PPP

- 초·중등교육 단계의 경우, 초등 \$13,341, 중등 \$17,078로 2018년 대비 각각 6%(\$807), 14%(\$2,100) 증가했고,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고등교육 단계의 경우 \$11,287로 2018년 대비 0.02%(\$2) 감소했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단위 : \$(PPP))

기준연도	구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고등교육
2019년	한국	13,341	17,078	11,287	13,819
	OECD 평균	9,923	11,400	17,559	11,990

※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 (2019년) 864.63원/\$

② 국내총생산(이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2019년 우리나라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3%로 2018년보다 0.2%p 상승했고,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 (정부재원 + 민간재원 + 해외재원 공교육비) / GDP } x 100

- 2019년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2018년 대비 0.2%p 상승했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특히, 초·중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3.4%로 2018년보다 0.3%p 상승했고,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한편,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2018년과 유사했으나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단위 : %)

기준 연도	구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고등교육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2019년	한국	3.4	0.4	3.7	0.6	0.9	1.5	4.0	1.3	5.3
	OECD 평균	3.1	0.3	3.4	0.9	0.5	1.5	4.1	0.8	4.9

※ 한국의 GDP : (2019년) 1,924.5조 원

※ 우리나라는 해외재원을 민간재원에 포함하여 산출하나 OECD 기준상 민간재원과 해외재원을 별도 산출하므로, OECD '합계'에는 해외재원이 포함되어 정부재원, 민간재원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동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 동 수치는 최종재원 기준

③ 공교육비 정부지출-민간지출의 상대적 비율

- 2019년 우리나라의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공교육비 중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75.4%로 2018년보다 1.8%p 상승하였다.
- 초·중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90.4%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38.3%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공교육비 정부지출-민간지출의 상대적 비율 >

(단위 : %)

기준 연도	구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고등교육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2019년	한국	90.4	9.6	38.3	61.7	75.4	24.6
	OECD 평균	90.2	9.6	66.0	30.8	82.5	16.4

※ 우리나라는 해외재원을 민간재원에 포함하여 산출하나, OECD 기준상 민간재원과 해외재원을 별도 산출

※ 동 수치는 최종재원 기준

③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성과

◆ 청년층(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3%로 OECD 국가 중 1위

① 연령대별 취학률

- 2020년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취학률은 만 3~5세 94.0%, 만 6~14세 98.7%, 만 15~19세 86.2%, 만 20~24세 50.2%로 각각 OECD 평균보다 높았고, 만 25~29세의 경우 7.9%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연령대별 취학률 >

(단위 : %)

기준연도	구분	만 3~5세	만 6~14세	만 15~19세	만 20~24세	만 25~29세
2020년	한국	94.0	98.7	86.2	50.2	7.9
	OECD 평균	87.4	98.4	83.3	41.2	15.4

② 고등교육 이수율

- 2021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1.7%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3%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 연령대별 고등교육 이수율 >

(단위 : %)

기준연도	구분	만 25~64세	만 25~34세
2021년	한국	51.7	69.3
	OECD 평균	41.1	46.9

③ 교육단계별 고용률

- 2021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3.0%로 2020년보다 0.2%p 상승하였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교육단계별 고용률 >

(단위 : %)

기준연도	구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전체 교육단계*
2021년	한국	70.0	76.5	76.8	73.0
	OECD 평균	75.0	80.8	84.1	76.4

* 전체 교육단계는 초등교육 이수 미만부터 대학원(석·박사) 졸업까지 모두 포함

④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 2020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110.2%, 대학 졸업자 138.3%, 대학원 졸업자 182.3%로, 2019년보다 상대적 임금격차가 증가했다.

<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

(단위 : %)

기준연도	구분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석박사)
2020년	한국	110.2	138.3	182.3
	OECD 평균	120.3	143.8	187.6

※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100 기준

-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10월 중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2」 번역본을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붙임】 「OECD 교육지표 2022」 주요 결과

담당 부서	교육안전정보국 교육데이터과	책임자	과 장	안수미 (044-203-6325)
		담당자	사무관	한승우 (044-203-632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지표연구실	책임자	실 장	남궁지영 (043-530-9547)
		담당자	팀 장	김나영 (043-530-9502)
			팀 원	김한나 (043-530-9670)
			팀 원	이은지 (043-530-9672)

자료 이용 시 유의 사항

- 지표별 조사 기준연도는 교육재정 2019년, 교육 참여·성과 등 2020년~2021년임
- 일부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부분의 합계가 전체의 수치와 다를 수 있음
- 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직접 교육기관(유치원, 학교 등)'과 학생, 직접 교육기관에 교육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지원 교육기관(교육청, 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됨
- 학교급별 직접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음
 - 유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 초등학교 :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초등학교 과정), 공민학교
 - 중학교 : 중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중학교 과정), 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 :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과정), 고등기술학교
 - 고등교육 :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사이버·원격·방송통신대학은 제외)
- OECD 기준상 '교사'는 기간제·휴직교사 포함 수업교사(교장·교감, 전문상담·사서·보건·영양교사 등 주 업무가 수업이 아닌 교사 제외)임
- \$로 표시된 수치는 국제비교를 위하여 각국의 물가 차이를 고려한 미국 달러의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 PPP)를 반영한 수치임

1. 국·공립학교 교사의 법정 급여

(단위 : \$(PPP))

기준 연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임	15년차	최고호봉	초임	15년차	최고호봉	초임	15년차	최고호봉
2021년	한국 (변화)	34,123 ▲646	60,185 ▲1,082	95,780 ▲1,672	34,185 ▲646	60,247 ▲1,082	95,842 ▲1,672	34,185 ▲1,385	60,247 ▲1,821	95,842 ▲2,411
	OECD 평균	36,099	49,245	59,911	37,466	51,246	62,685	39,020	53,268	64,987
2020년	한국	33,477	59,103	94,108	33,539	59,165	94,170	32,800	58,426	93,431
	OECD 평균	34,942	48,025	58,072	36,116	49,701	60,478	37,811	51,917	63,028

※ 연간 급여(1인 기준) = 봉급 + 수당(정근수당 등 포함, 초과근무수당 등 추가수당 제외) + 복리후생비(명절휴가비 등) + 교원연구비

※ 사적소비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 (2020년) 974.22원/\$ → (2021년) 967.40원/\$

※ 최고호봉까지 일반적 소요기간(퇴직연령 62세 기준) : 한국 37년, OECD 평균 26년

2. 초·중등교사의 수업 주수·일수·시간

(단위 : 주, 일, 시간)

기준 연도	구분	연간 총 수업 주수				연간 총 법정 수업일수				연간 교사 1인당 순 수업시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직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직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직업)
2021년	한국 (변화)	38 -	38 -	38 -	38 -	190 -	190 -	190 -	190 -	672 ▼8	517 ▲4	544 ▲5	541 ▲4
	OECD 평균	38	38	37	38	184	183	182	185	784	711	684	684
2020년	한국	38	38	38	38	190	190	190	190	680	513	539	537
	OECD 평균	38	38	38	38	184	184	183	186	791	723	685	691

※ 수업 주수와 수업 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기초하여 산출

※ 순 수업시간은 교육통계조사에 기초하여 산출되며, 점심시간과 중간 휴식시간, 공휴일(국경일 및 정규 방학) 등을 제외한 정규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수업시간 포함(수업준비활동, 생활지도 등은 미포함) 단, OECD 기준상 초등 담임교사에 한해 쉬는시간(10분)을 학생 지도시간으로 간주하여 순 수업시간에 포함

※ 국제비교를 위해, 수업시간은 수업시수를 시간(60분, 1시간)으로 환산

(예 : 초등학교 수업시간 = { (1시간 수업시수 = 40분) ÷ 60분 } → 1시간 수업시수가 2/3 시간으로 환산됨)

3.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단위 : \$(PPP), %, %p)

기준 연도	구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교육~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국민 1인당 GDP 대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국민 1인당 GDP 대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국민 1인당 GDP 대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국민 1인당 GDP 대비 비율
2019년	한국 (변화)	13,341 ▲807	31.0 ▲1.5	17,078 ▲2,100	39.7 ▲4.4	11,287 ▼2	26.2 ▼0.3	13,819 ▲905	32.1 ▲1.7
	OECD 평균	9,923	21.8	11,400	24.4	17,559	37.3	11,990	26.0
2018년	한국	12,535	29.5	14,978	35.3	11,290	26.6	12,914	30.4
	OECD 평균	9,550	21.3	11,192	24.7	17,065	36.9	11,680	25.8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 (정부재원 + 민간재원 + 해외재원 공교육비) / 재적학생(재학생+ 휴학생 등) 수 } / PPP*

*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 (2018년) 865.72원/\$ → (2019년) 864.63원/\$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 : (2018년) \$42,487 → (2019년) \$43,045

※ 한국의 연도별 GDP : (2018년) 1,898.2조 원 → (2019년) 1,924.5조 원

※ 동 수치는 반올림한 값임

4.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단위 : %, %p)

기준 연도	구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교육~고등교육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2019년	한국	3.4	0.4	3.7	0.6	0.9	1.5	4.0	1.3	5.3
	(초기재원)	(3.4)	(0.3)	-	(0.8)	(0.7)	-	(4.2)	(1.0)	-
	(변화)	▲0.3	▼0.0	▲0.2	▼0.0	▼0.0	▼0.0	▲0.2	▼0.1	▲0.2
2018년	OECD 평균	3.1	0.3	3.4	0.9	0.5	1.5	4.1	0.8	4.9
	(초기재원)	(3.2)	(0.3)	-	(1.0)	(0.3)	-	(4.2)	(0.6)	-
	한국	3.1	0.4	3.5	0.6	0.9	1.6	3.8	1.3	5.1
2018년	OECD 평균	3.1	0.3	3.4	0.9	0.4	1.4	4.1	0.8	4.9

※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 (정부재원 + 민간재원 + 해외재원 공교육비) / GDP* } x 100

* 한국의 연도별 GDP : (2018년) 1,898.2조 원 → (2019년) 1,924.5조 원

※ 우리나라는 해외재원을 민간재원에 포함하여 산출하나 OECD 기준상 민간재원과 해외재원을 별도 산출하므로, OECD '합계'에는 해외재원이 포함되어 정부재원, 민간재원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동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 동 수치는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지출*(예 : 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을 민간재원으로 포함하는 '최종재원' 기준으로,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지출을 정부재원으로 포함하는 '초기재원' 기준 수치는 괄호()로 별도 표기

*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지출 : (초·중등교육) 0.03% / (고등교육) 0.24%

5. 공교육비 정부지출-민간지출의 상대적 비율

(단위 : %, %p)

기준연도	구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교육~고등교육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2019년	한국 (초기재원) (변화)	90.4 (91.3) ▲1.8	9.6 (8.7) ▼1.8	38.3 (53.8) ▼1.5	61.7 (46.2) ▲1.5	75.4 (80.5) ▲1.8	24.6 (19.5) ▼1.8
	OECD 평균 (초기재원)	90.2 (90.2)	9.6 (8.9)	66.0 (73.3)	30.8 (21.8)	82.5 (85.5)	16.4 (12.5)
2018년	한국	88.6	11.4	39.7	60.3	73.6	26.4
	OECD 평균	89.7	9.9	66.2	30.1	82.4	16.2

※ 정부지출 비율 : (정부재원 공교육비 / 전체 공교육비) x 100

※ 민간지출 비율 : (민간재원 공교육비 / 전체 공교육비) x 100

※ 우리나라는 해외재원을 민간재원에 포함하여 산출하나, OECD 기준상 민간재원과 해외재원을 별도 산출

※ 동 수치는 '최종재원' 기준으로, '초기재원' 기준 수치는 괄호()로 별도 표기

6. 연령대별 취학률

(단위 : %, %p)

기준연도	구분	만 3~5세	만 6~14세	만 15~19세	만 20~24세	만 25~29세
2020년	한국 (변화)	94.0 ▲0.7	98.7 ▼0.6	86.2 ▲2.3	50.2 ▲0.5	7.9 ▼0.1
	OECD 평균	87.4	98.4	83.3	41.2	15.4
2019년	한국	93.3	99.3	83.9	49.7	8.0
	OECD 평균	87.0	98.6	83.5	40.9	15.5

※ 연령대별 취학률 : (연령대별 학생 수 / 연령대별 인구 수) x 100

※ 만 3~5세의 경우 국가에 따라 유아교육단계 또는 초등교육단계에 해당

7. 고등교육 이수율

(단위 : %, %p)

기준연도	구분	만 25~64세	만 25~34세
2021년	한국 (변화)	51.7 ▲1.0	69.3 ▼0.5
	OECD 평균	41.1	46.9
2020년	한국	50.7	69.8
	OECD 평균	40.3	45.5

※ 고등교육 이수율 : (연령대별 고등교육 단계 학력 소지자 수 /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 수) x 100

※ 원자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교육단계별 고용률

(단위 : %, %p)

기준연도	구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전체 교육단계
2021년	한국 (변화)	70.0 ▼0.4	76.5 ▲0.4	76.8 ▲0.5	73.0 ▲0.2
	OECD 평균	75.0	80.8	84.1	76.4
2020년	한국	70.4	76.1	76.3	72.8
	OECD 평균	74.5	81.0	83.1	75.7

※ 교육단계별 고용률 : (교육단계별 취업자 수 /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수) x 100

※ OECD 기준상 만 25~64세 인구 대상으로 산출

※ 전체 교육단계는 초등교육 이수 미만부터 대학원(석·박사) 졸업까지 모두 포함

※ 원자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9.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단위 : %, %p)

기준연도	구분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기준)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석박사)
2020년	한국 (변화)	78.4 ▼0.9	100	110.2 ▲1.9	138.3 ▲2.0	182.3 ▲0.0
	OECD 평균	83.0	100	120.3	143.8	187.6
2019년	한국	79.3	100	108.3	136.3	182.3
	OECD 평균	82.4	100	119.6	142.8	187.5

※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100 기준

※ 원자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국제미래교육위원회 보고서

요 약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우리 인류와 지구는 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취약성과 상호연결성을 동시에 증명해 주었다. 이 경로를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다시 구상하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긴급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제미래교육위원회의 이 보고서는 교육의 힘이 심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다. 인류는 이중의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모든 아동, 청소년, 성인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미완의 약속을 이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경로로서 교육이 갖고 있는 변혁적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으면서 미래를 바꿔 놓을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사회계약은 인권에 근간을 두고 차별금지와 사회정의, 생명 존중, 인간 존중 및 문화 다양성에 기초해야 한다. 또한 돌봄의 윤리, 호혜주의, 연대를 포괄해야 하며, 공동의 사회적 노력(shared societal endeavours)이자 공동재(common good)로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2년에 걸쳐 약 백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 협의 과정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전 세계의 정부, 교육기관, 단체, 시민들에게 모두를 위한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 데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비전과 원칙, 제안은 단지 출발점일 뿐이다. 이를 각각의 상황에 맞게 변혁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미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 이 보고서는 그런 부분을 포착해 기반으로 삼으려고 노력했다. 이 보고서는 실용적 매뉴얼이나 청사진이 아니라, 역동적인 대화의 시작이다.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고 미래를 바꿔
놓을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unesco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핵심 내용

지금 세계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 우리는 지식과 학습이 혁신과 변혁의 기반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불거진 격차, 그리고 학습의 이유와 방식, 내용, 장소, 시기를 다시 규정해야 한다는 다급한 요구는 교육이 우리가 평화롭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겠다는 약속을 아직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자연환경에 큰 부담을 주었고, 결국 우리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늘날 세계에는 높은 생활수준과 엄청난 불평등이 공존하고 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공적인 생활에 참여하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기본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급속한 기술 변화는 우리 삶의 여러 측면을 변모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혁신의 방향은 적절하게 형평성과 포용, 그리고 민주적인 참여로 향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각자는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 무거운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이란 우리 세계가 결핍이 아닌 풍요의 세계, 모두가 동일한 인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세계가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비록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고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히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다**. 지금의 인류는 전체 역사를 통틀어 지식과 협력을 위한 도구에 가장 높은 접근성을 누리고 있다. 인류가 함께 더 나은 미래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지금처럼 높았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본 국제미래교육위원회 보고서는 2050년과 그 이후를 내다보면서 교육이 이 세계와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의 제안은 2년간의 세계적 참여와 공동작업 과정을 통해 나온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공유하는 이 지구에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학습 공간을 다시 구상하는 방법에서부터 교육과정의 탈식민지화와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의 중요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의 기여가 담겨 있으며,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허위정보, 디지털 격차에 대한 사람들의 실제적이고 점차 커져가는 두려움도 반영돼 있다.

교육, 즉 우리가 평생 동안 가르침과 배움을 수행하는 방식은 오랫동안 인간사회 전환의 기반이 되어왔다. 교육은 우리를 세계와, 또한 서로와 연결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대화와 행동을 위한 우리의 역량을 높여준다. **하지만 평화롭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그 자체도 변혁이 필요하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교육은 사회계약, 즉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려는 사회 일원들의 암묵적 합의라는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사회계약은 공식적으로 법제화되고 문화적으로 내재된 규범과 책임, 원칙을 반영하기 때문에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 출발점은 교육의 공공 목적에 대한 공동의 비전이다.** 사회계약은 교육제도와 이를 구축, 유지, 개선하기 위해 분배된 작업을 구조화하는 기초적이고 조직적인 원칙들로 구성된다.

20세기의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의무교육을 통해 국가의 시민권과 발전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인류와 살아있는 지구의 미래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을 시급히 재구성해야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구상은 공유되고 상호의존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우리를 단결시켜 집단적 노력에 동참하게 만들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정의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미래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혁신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동시에 그 사회계약은 이 보고서가 강조하듯 교사의 역할을 옹호해야 한다.

2050년을 바라보면서 교육에 대해 던져야 할 세 가지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중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창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기본 원칙

새로운 사회계약은 인권, 즉 포용성과 형평성, 협력, 연대, 그리고 집단적 책임과 상호연결성을 뒷받침하는 광범위한 원칙들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 두 가지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 **평생 동안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규정된 교육권은 여전히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기초를 이뤄야 하며, 평생 동안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 문화, 과학에 대한 권리와 대대로

촉적되고 계속 변모하는 인류의 집단 지식자원인 공유지식(knowledge commons)에 접근하고 기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야 한다.

- **공공의 노력(public endeavor)이자 공동재(a common good)로서 교육의 강화:** 공동의 사회적 행위로서 교육은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게 해준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교육에 대한 공공재정 투입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교육에 관한 공적 토론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교육은 공동재(a common good), 즉 함께 선택하고 성취하며 공유하는 웰빙의 한 방식으로 강화된다.

이 기본 원칙들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육이 인류의 성취를 지원해 준 것들에 기반하고 있으며, 또한 205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여정에서도 교육이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미래를 다시 상상하고 그 세계를 새롭게 만들도록 해줄 것이다.

과거의 약속과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증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자원 남용, 민주주의의 후퇴, 혼란스러운 기술 자동화 등이 현재 우리가 놓여 있는 역사적 시점의 대표적 특징이다. 이처럼 많은 중박된 위기와 도전과제들은 우리의 개인적, 집단적 인권을 제한하고 지구상의 많은 생명에 손상을 입히고 있다. 교육 시스템의 확대로 많은 이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양질의 학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며 이보다 더 어두운 미래를 그려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별로 남지 않은, 고갈된 지구의 모습도 상상할 수 있다. 극단적인 미래 시나리오 중에서는 양질의 교육이 엘리트의 특권이 되고, 대다수 집단은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어 비참하게 살아가는 세상도 상상할 수 있다. 현재의 교육 불평등이 점점 더 악화되어 결국 교육과정이 무의미해지는 때가 오는 것은 아닌가? 가능할 수도 있는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지만 그 어떤 추세도 운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여러 가지 대안적 미래가 가능하며, 몇 가지 핵심 영역에서 이미 서로 상충하는 전환(disruptive transformations)을 파악할 수 있다.

- 지구는 위험에 처해 있지만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역자 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청정에너지 등으로의 전환)와 경제의 녹색화가 진행

중이다. 아동 및 청소년이 앞장서서 의미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맞서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

-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민주적 거버넌스가 후퇴하고 민족주의에 기반한 포퓰리즘 정서의 등장이 있었다. 그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차별과 불의에 맞서는 적극적 시민참여와 활동도 두드러졌다.
- 디지털 기술에는 엄청난 전환의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으나, 우리는 이 커다란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 인공지능(AI)과 자동화 및 산업구조조정으로 세계 각국의 고용 환경이 바뀌면서 괜찮은(decent) 인간중심 노동(human-centered work)을 창출하는 도전과제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와 동시에 더 많은 대중과 공동체들이 돌봄 노동의 가치와, 경제 안정을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각각의 혼란들은 모두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교육을 통해 무엇을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방식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우리가 교육을 조직하는 방식들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건강한 지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공동의 발전을 보장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실제로 우리가 겪는 문제의 일부는 교육 방식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학습에 대해, 또 학생, 교사, 지식,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육 혁신을 위한 제안

교육학(Pedagogy)은 협력, 협동, 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며 공감과 연민을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적·사회적·도덕적 역량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편향성과 편견, 구분(divisiveness)에 대한 탈학습(unlearning)도 필요하다. 평가는 이런 교육학적 목표들을 반영하면서 모든 학생들의 의미 있는 성장과 학습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은 생태적, 상호문화적, 학제적 학습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이 지식에 접근하고 이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이를 비판하고 적용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류에 대한 생태학적 이해를 수용하고, 살아있는 행성이자 단 하나의 고향인 지구와 우리가 관계맺는 방식을 다시 균형잡아 주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사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과학적 문해력, 인문학적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을 통해 잘못된 정보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 교육 내용, 방법, 정책에서 적극적인 시민의식과 민주적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교수활동은 협력적 행위로 좀더 전문화되어야 하며, 거기서 교사들의 역할은 지식생산자이자 교육과 사회 변혁의 핵심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협동작업과 팀워크가 교사 역할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성찰, 연구, 지식창조와 새로운 교육적 실천이 교수활동에 통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의 자율성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교사가 교육의 미래에 대한 공적 토론과 대화에 전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학교는 포용, 형평성, 개인과 집단의 웰빙을 지원하는 교육 장소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보다 정제되고 형평성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세상의 변혁을 더욱 잘 촉진하도록 다시 그려보아야 한다. 학교는 다양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데 모아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도전과제와 가능성을 접하도록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학교의 건물, 공간, 시간, 시간표, 학생 그룹화(student groupings)는 다시 디자인되어 개별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실현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학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학교는 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성의 본보기가 됨으로써 우리가 열망하는 미래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공간에서 펼쳐지는 교육 기회를 향유하고 확대해야 한다. 누구나 인생의 모든 시기에 의미 있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한다. 우리는 자연의 학습공간, 건물로 된 학습공간, 가상의 학습공간을 연결하고, 각 공간이 갖는 최상의 잠재력을 주의깊게 활용해야 한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가 맡아야 하며, 정부의 교육분야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과 관리감독(regulation) 역량은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받을 권리는 평생 동안으로 확장되고, 정보, 문화, 과학 및 연결성(connectivity)에 대한 권리를 포괄해야 한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촉진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은 가능하다. 우리는 수백만의 개인과 집단의 행동, 용기, 리더십, 저항, 창의성, 돌봄의 행동을 통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사회계약은 차별과 배제,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성적 지향성, 나이, 시민권의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그리고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한 대단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연구와 혁신을 촉구한다. 새로운 사회계약에서는 평생 동안 교육받을 권리에 초점을 둔 전 세계적 협력 연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연구프로그램은 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에 두어야 하며, 수평적 학습과 국가 간 지식교류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근거를 포용해야 한다. 교사부터 학생까지, 학계와 연구센터부터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까지 모든 이들의 기여를 환영해야 한다.

세계적 연대와 국제협력을 촉구한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서는 공동재(a common good)로서의 교육을 지원하는 세계적 협동작업에 대한 책임감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간의 보다 정의롭고 공평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하는 북-남 원조의 흐름을 넘어서 남-남 및 삼자 협력을 통한 지식과 증거의 생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실현에 필요한 공동의 목적, 규범, 표준에 따라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때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을 존중하고 지방(local), 국가, 지역(regional) 차원의 노력을 장려해야 한다. 특히 난민신청자, 난민, 무국적자, 이주민의 교육적 요구는 국제협력과 글로벌 기구들의 활동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은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모든 측면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연구와 과학 발전 지원에서부터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및 세계에서 또 다른 교육 기관과 교육프로그램에 파트너로 기여하는 것까지,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고, 공동체로서의 교육의 강화에 책임을 다하는 대학들은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아동, 청소년, 학부모, 연구자, 활동가, 고용주, 문화계 및 종교계 지도자 등 모두가 **교육의 미래 건설(building the futures of education)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미래 건설의 기반이 되는 깊이 있고 풍부하며 다양한 문화 전통을 갖고 있다. 인간은 뛰어난 집단적 행위능력과 지성, 창의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직면해 있다. 지속불가능한 길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급격하게 경로를 변경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안했다.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중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창의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지만 **이 제안들은 단지 출발점일 뿐이다.** 이 보고서는 청사진이라기보다는 생각과 상상을 요청하기 위한 초대장이다. 전 세계의 지역사회, 국가, 학교, 그리고 모든 종류의 교육프로그램과 교육 시스템들이 앞선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한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수립은 우리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기 위한 중대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0. 10.] [충청남도조례 제5491호, 2023. 10. 10., 제정]

충청남도교육청(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041-640-83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내 학교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충청남도 내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기능) 학교복합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2. 방과 후 학교·초등 돌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3.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4. 구도심,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6.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주체
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4. 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방법

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학교복합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별 개방시간, 학생의 우선 사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할 제10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에서 결정 한다.

제8조(보험) 교육감과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기관 간 협의) ① 교육감과 도지사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충청남도 또는 시·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
3. 학교복합시설의 운영비 부담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③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지원)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 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5491호,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0. 10.] [충청남도조례 제5495호, 2023. 10. 10., 제정]

충청남도교육청(학교지원과), 041-640-6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의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과밀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밀학교”란 개발사업 등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여 적정 학생 수 또는 적정 학급 수를 과도하게 넘는 학교를 말한다.
3. “모듈러교실”이란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제작하여 학교로 운송, 조립·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교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듈러교실 설치 등을 통하여 과밀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듈러교실 설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석 및 평가
3. 모듈러교실 설치 관련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소방, 안전, 보건 등 안전 대책
5. 그 밖에 교육감이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활한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5495호,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203
----------	-------

발의연월일 : 2023. 10. 30.

발 의 자 : 황 희·박상혁·전해철

박 정·이동주·여기구

강선우·최인호·신영대

이소영·안규백·이용선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증축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두도록 하고, 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대규모 도심 개발 추세가 맞물리면서, 비도심·구도심 지역의 학생 규모는 급격히 감소하고, 특정 지역의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존의 학교 공간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캠퍼스형 학교 구상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체계상 학교시설 용도로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의 학교 설립·이전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하여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의4제4항제2호 및 제6조제2항 등).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증축”을 “증축이나 학교시설의 매입”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증축”을 “증축하거나 학교시설을 매입”으로 한다.

제5조의4제4항제2호 중 “증축”을 “증축 또는 학교시설의 매입”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증축”을 “증축하거나 학교시설을 매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학교 증축 경비”를 “해당 경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 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 성 · 개발 · 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 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증축이나 학교시설의 매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 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 · 광 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 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 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 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 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 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 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증축하거 나 학교시설을 매입----- ----- -----

한다.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 ③ (생 략)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u>증축 경비</u> 3. ~ 5. (생 략) ⑤·⑥ (생 략)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생 략) ② 시·도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u>증축</u>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u>학교 증축 경비</u>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u>증축 또는 학교시설의 매입</u>----- - 3. ~ 5.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증축하거나 학교시설을 매입</u>----- ----- -----. -----<u>해당 경비</u>----- ----- -----.
--	--